

# **유럽 경제위기,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대응, 그리고 변화**

**공동연구진**  
**박하순 · 임필수**

**2015. 12. 3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진소개]**

**박하순**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필수**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I. 유럽 각국의 경제위기 현황 과 정치지형의 변화**

## **II.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 - 그리 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제목 차례>

|                              |    |
|------------------------------|----|
| I. 유럽 각국의 경제위기 현황과 정치지형의 변화  | 1  |
| 1. 서                         | 2  |
| 1) 위기의 원인과 위기 심화 요인들         | 4  |
| 2)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적 대응  | 4  |
| (1) 1차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       | 5  |
| ① 통화정책                       | 5  |
| ② 재정정책: 소규모 경기부양과 긴축정책으로의 선회 | 7  |
| (2) 2차 위기,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 7  |
| ① 통화정책                       | 7  |
| ② 긴축정책: '재정협약' 발효            | 8  |
| 3) 위기 전개양상                   | 9  |
| (1) 위기 및 회복 양상               | 9  |
| (2) 실업률                      | 12 |
| (3) 물가상승률-디플레이션에 근접          | 13 |
| (4) 정부부채                     | 15 |
| 4) 소결                        | 16 |
| 3. 각국에서의 위기 양상               | 18 |
| 1) 유로존 중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      | 18 |
| (1) 위기 및 회복 양상               | 18 |
| ① 독일                         | 18 |
| ② 프랑스                        | 19 |
| ③ 오스트리아                      | 21 |
| ④ 네덜란드                       | 22 |
| ⑤ 핀란드                        | 24 |
| ⑥ 소결                         | 26 |
| (2) 실업률                      | 28 |
| (3) 물가상승률                    | 30 |
| (4) 주택가격                     | 31 |
| (5) 정부부채                     | 32 |
| (6) 영업잉여                     | 35 |

|                               |    |
|-------------------------------|----|
| 2) 유로존 위기국들                   | 36 |
| (1) 위기 및 회복 양상                | 36 |
| ① 그리스                         | 36 |
| ② 아일랜드                        | 38 |
| ③ 포르투갈                        | 39 |
| ④ 스페인                         | 41 |
| ⑤ 이탈리아                        | 42 |
| ⑥ 소결                          | 44 |
| (2) 실업률                       | 45 |
| (3) 물가상승률                     | 47 |
| (4) 주택가격                      | 49 |
| (5) 정부부채                      | 50 |
| (6) 영업잉여                      | 52 |
| 3) 비 유로존 복구                   | 53 |
| (1) 성장                        | 53 |
| ① 스웨덴                         | 53 |
| ② 노르웨이                        | 55 |
| ③ 덴마크                         | 56 |
| ④ 아이슬란드                       | 58 |
| ⑤ 소결                          | 59 |
| (2) 실업률                       | 60 |
| (3) 물가상승률                     | 64 |
| (4) 주택가격                      | 64 |
| (5) 정부부채                      | 65 |
| (6) 영업잉여                      | 67 |
| 4) 비유로존 서구                    | 68 |
| (1) 위기 및 회복 양상                | 68 |
| ① 영국                          | 68 |
| ② 스위스                         | 70 |
| ③ 비유로존 서구 요약                  | 71 |
| (2) 실업률                       | 72 |
| (3) 물가상승률                     | 73 |
| (4) 정부부채 비율                   | 75 |
| (5) 영업잉여                      | 77 |
| 4. 각국 진보정당 및 노조의 대응과 정치지형의 변모 | 79 |

|                               |     |
|-------------------------------|-----|
| 1) 유로존 내 재정위기 겪지 않은 나라들       | 79  |
| (1) 독일                        | 79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79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81  |
| (2) 프랑스                       | 83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83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84  |
| (3) 오스트리아                     | 85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85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86  |
| (4) 네덜란드                      | 87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87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89  |
| (5) 핀란드                       | 91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91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92  |
| 2) 위기국들                       | 93  |
| (1) 그리스                       | 93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93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95  |
| (2) 아일랜드                      | 99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99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01 |
| (3) 포르투갈                      | 102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02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03 |
| (4) 스페인                       | 107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07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09 |
| (5) 이탈리아                      | 111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11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13 |
| 3) 비 유로존 복구                   | 114 |
| (1) 스웨덴                       | 114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14 |

|                                                 |     |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16 |
| (2) 노르웨이                                        | 117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17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18 |
| (3) 덴마크                                         | 119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19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21 |
| (4) 아이슬란드                                       | 122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22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23 |
| 4) 비유로존 서유럽                                     | 125 |
| (1) 영국                                          | 125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25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26 |
| (2) 스위스                                         | 130 |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130 |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131 |
| 5) 소결                                           | 132 |
| 5. 결                                            | 136 |
| 참고문헌                                            | 138 |
| Ⅱ.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 - 그리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 146 |
| 1. 서                                            | 147 |
| 2. 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                                 | 148 |
| 1) 유럽 북부 그룹: 스웨덴과 덴마크                           | 151 |
| 2) 유럽 중부 그룹: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 152 |
| 3) 남부 유럽 그룹: 프랑스와 이탈리아                          | 155 |
| 4) 영국과 아일랜드                                     | 157 |
| 3. 유럽 비사회민주주의 좌파 정당 현황                          | 159 |
| 1) 개혁적 공산주의와 보수적 공산주의                           | 161 |
| 2) 민주적 사회주의                                     | 161 |
| 3) 인민주의적 사회주의                                   | 162 |
| 4) 사회주의적 인민주의                                   | 162 |

|                                  |     |
|----------------------------------|-----|
| 4. 그리스와 시리자                      | 166 |
| 1) 그리스 경제위기의 전개                  | 166 |
| 2) 그리스 좌파 정치운동의 역사               | 170 |
| 3) 2010년 5월 충격요법과 저항             | 176 |
| 4) 2011년 5월 그리스 광장 시위            | 178 |
| 5) 2011-12년 노동자 파업               | 180 |
| 6) 2010-2012년 투쟁                 | 180 |
| 7) 2012년 6월 총선과 시리자의 부상          | 181 |
| 8) 시리자의 재편                       | 186 |
| 9) 2015년 시리자의 집권과 위기             | 187 |
| 5. 스페인과 포데모스                     | 194 |
| 1) 스페인 경제위기의 전개                  | 194 |
| 2)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PSOE)            | 197 |
| 3) 2004-2011년 PSOE 사파테로 정부와 경제위기 | 198 |
| 4) 5.15 운동                       | 200 |
| 5) 포데모스                          | 203 |
| 6. 경제위기에 대한 좌파 전략                | 207 |
| 1) 케인즈주의                         | 207 |
| 2) 급진적 제안                        | 209 |
| 7. 쟁점                            | 212 |
| 1) 유럽통화동맹이라는 제약                  | 212 |
| 2) 유럽 노동조합의 공동의 인식과 전략이 존재하는가    | 213 |
| 참고문헌                             | 217 |

## <표 차례>

|                                              |     |
|----------------------------------------------|-----|
| <표 I -1> ‘유로존 중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의 위기 및 회복 양상  | 28  |
| <표 I -2> ‘유로존 위기국들’의 2014년까지의 위기 및 성장        | 45  |
| <표 I -3 > ‘비유로존 복구’의 2014년까지의 위기 및 성장 요약     | 60  |
| <표 I -4 > ‘비유로존 서구’의 2014년까지의 위기 및 성장 요약     | 72  |
|                                              |     |
| <표 II -1> 유럽 주요국 노동조합-정당 관계                  | 151 |
| <표 II -2>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의 비사회민주주의 좌파 정당(2008년) | 160 |
| <표 II -3> 유럽의회 선거 결과                         | 163 |
| <표 II -4> 유럽의회 녹색파의 정치적 지향                   | 163 |
| <표 II -5> 그리스사회당(Pasok), 1974년 이후 의회선거 성과    | 171 |
| <표 II -6> 1974년 이후 그리스 공산당의 의회선거 성과          | 172 |
| <표 II -7> 2004년 이후 시리자의 의회선거 결과              | 174 |
| <표 II -8> 2012년 6월 그리스 총선결과 (의석 획득 정당)       | 183 |
| <표 II -9> 그리스 2015년 1월 총선 결과                 | 188 |
| <표 II -10> 그리스 3차(2015년 7월 13일) 구제금융 구성      | 190 |
| <표 II -11> 그리스 2015년 9월 총선 결과                | 192 |
| <표 II -12>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PSOE) 역대 선거 득표율      | 198 |
| <표 II -13> 스페인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 204 |
| <표 II -14> CGIL 17차 대회 유럽의 변화를 위한 행동         | 214 |

<그림 차례>

|                                             |    |
|---------------------------------------------|----|
| <그림 I -1>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 6  |
| <그림 I -2> 유로존 위기국들의 10년물 국채수익률              | 7  |
| <그림 I -3> 유로존의 실질총생산(계절조정, 2010년 기준)        | 10 |
| <그림 I -4> 유로존 분기성장률                         | 10 |
| <그림 I -5> 독일과 미국의 국내총생산(2007=1)             | 11 |
| <그림 I -6> 주요 국가와 지역의 실업률                    | 13 |
| <그림 I -7> 유로존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 14 |
| <그림 I -8> 유로존과 미국의 근원물가 상승률                 | 14 |
| <그림 I -9> 유로존의 실질 주택가격                      | 15 |
| <그림 I -10> 유로존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 16 |
| <그림 I -11> 독일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19 |
| <그림 I -12> 프랑스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               | 21 |
| <그림 I -13> 오스트리아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22 |
| <그림 I -14> 네덜란드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24 |
| <그림 I -15> 핀란드의 분기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26 |
| <그림 I -16 >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실업률        | 29 |
| <그림 I -17> 명목 단위노동비용(2005=100)              | 30 |
| <그림 I -18>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물가상승률       | 31 |
| <그림 I -19>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주택가격지수      | 32 |
| <그림 I -20>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정부부채 비율     | 33 |
| <그림 I -21>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재정수지 비율     | 34 |
| <그림 I -22> 유로존의 이자지불 제외 실질 정부 지출            | 35 |
| <그림 I -23>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비율 | 36 |
| <그림 I -24> 그리스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38 |
| <그림 I -25> 아일랜드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39 |
| <그림 I -26> 포르투갈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41 |
| <그림 I -27> 스페인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42 |
| <그림 I -28> 이탈리아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44 |
| <그림 I -29> 유로존 위기국들의 실업률                    | 46 |
| <그림 I -30> 독일과 위기국의 명목 단위노동비용               | 47 |
| <그림 I -31> 위기국의 근원물가상승률                     | 48 |
| <그림 I -32> 유로존의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              | 49 |
| <그림 I -33> 유로존 위기국들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             | 50 |

|                                           |     |
|-------------------------------------------|-----|
| <그림 I -34> 유로존 위기국들의 정부부채 비율              | 51  |
| <그림 I -35> 위기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      | 52  |
| <그림 I -36> 유로존 위기국들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비율         | 53  |
| <그림 I -37> 스웨덴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54  |
| <그림 I -38> 노르웨이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56  |
| <그림 I -39> 덴마크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57  |
| <그림 I -40> 아이슬란드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59  |
| <그림 I -41> 비유로존 북구 4국과 핀란드의 실업률           | 62  |
| <그림 I -42> 아이슬란드와 유로의 실질 실효환율             | 63  |
| <그림 I -43> 북구 3국의 명목 단위노동비용(2005=100)     | 63  |
| <그림 I -44>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의 근원물가상승률           | 64  |
| <그림 I -45>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과 핀란드의 주택가격지수       | 65  |
| <그림 I -46> 핀란드와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의 정부부채 비율      | 66  |
| <그림 I -47> 핀란드와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의 재정수지 비율      | 67  |
| <그림 I -48> 핀란드와 비유로존 북구국가들의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비율 | 68  |
| <그림 I -49> 영국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69  |
| <그림 I -50> 스위스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 71  |
| <그림 I -51>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분기 실업률            | 73  |
| <그림 I -52> 영국의 명목 단위노동비용                  | 73  |
| <그림 I -53>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근원물가상승률           | 74  |
| <그림 I -54>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실질 주택가격 지수        | 75  |
| <그림 I -55>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 76  |
| <그림 I -56> 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           | 77  |
| <그림 I -57>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비율      | 78  |
| <그림 I -58> 독일 정당 지지율 변화                   | 82  |
| <그림 I -59>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선거 지지율 변화         | 85  |
| <그림 I -60> 오스트리아 정당 지지율 변화                | 87  |
| <그림 I -61> 네덜란드 정당 지지율 변화                 | 91  |
| <그림 I -62> 핀란드 정당 지지율 변화                  | 93  |
| <그림 I -63> 그리스 정당 지지율 변화                  | 96  |
| <그림 I -64> 아일랜드 정당 지지율 변화                 | 102 |
| <그림 I -65> 포르투갈 정당 지지율 변화                 | 107 |
| <그림 I -66> 스페인 정당 지지율 변화                  | 111 |
| <그림 I -67> 이탈리아 정당 지지율 변화                 | 114 |
| <그림 I -68> 스웨덴 정당 지지율 변화                  | 117 |

|                                  |     |
|----------------------------------|-----|
| <그림 I -69> 노르웨이 정당 지지율 변화        | 119 |
| <그림 I -70> 덴마크 정당 지지율 변화         | 122 |
| <그림 I -71> 아이슬란드 정당 지지율 변화       | 125 |
| <그림 I -72> 영국의 실질 이자지불 이외의 정부지출  | 129 |
| <그림 I -73> 영국 정당 지지율 변화          | 130 |
| <그림 I -74> 스위스 정당 지지율 변화         | 132 |
|                                  |     |
| <그림 II -1> 유로존 평균에 대비한 그리스 부채 비율 | 167 |
| <그림 II -2> 유로존 평균 대비 스페인의 부채 규모  | 195 |

# **I. 유럽 각국의 경제위기 현황 과 정치지형의 변화**

## 1. 서

유럽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거품의 형성 및 붕괴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09년 3사분기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2011년 4사분기부터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즉 더블딥(이중침체)을 겪게 된 것이다. 1차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그리스 등 남부유럽과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겪게 되자 긴축정책이 강력히 시행된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한, 긴축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은 현실에서는 실현이 되지 않았다. 긴축을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경기하강은 예상보다 더 심했고 당연히 실업률도 예상보다 더 심각해졌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예상보다 더 커졌다. 생산축소가 예상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총재가 장클로드 트리셰에서 마리오 드라기로 바뀐 유럽중앙은행은 2011년 양적완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국제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아 갔다. 유로존 기준으로는 2013년 2사분기부터 더블딥으로부터 다시 회복과정을 밟고 있으나 그 회복세는 매우 더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별로는 차이가 많아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2014년까지도 생산이 계속해서 축소되었다.

긴축정책에 대한 각국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정당들 사이의 지지가 급격하게 뒤바뀌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격변이라 할 만한 상황을 맞이한 나라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 지배정당들이 바뀌어도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긴축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일에서 긴축기조를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일국의 힘

으로 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데, 이들 나라도 유럽 전체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상당한 활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유럽(서유럽 내지 유로존을 중심으로)의 경제위기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유럽 정치지형의 변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유럽의 경제위기와 그 전개 양상

### 1) 위기의 원인과 위기 심화 요인들

유럽의 경제위기의 초기 원인은 내외 요인이 복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세계화된 경제에서 미국 발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의 전염이 한 원인이고, 다음으로는 유로 도입 이후 금융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유럽의 (반)주변에서 거대한 거품(주택부문이 대표적이다)이 형성되었다가 붕괴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전 세계에 걸쳐 주식시장 침체, 무역의 침체 등을 야기해 유럽 각국에 영향을 미쳤고, 후자의 문제에서 야기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위기 발생 이후 국내총생산 규모는 축소되고 경기부양과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정부부채는 늘어나서 경제위기가 재정위기로 전화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및 안정협약’을 통한 긴축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더블딥을 야기하였다. 즉 긴축정책은 회복하던 각국 경제를 다시 위기에 빠뜨리고 정부부채 문제도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고 일단 더블딥이 발생하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즉 단일통화(유로)로 인해 더블딥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한 평가절하와 이를 통한 수출증대가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연히 더블딥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 회복(/경상수지 개선)이 오래 동안 불가능했다. 그리고 유로존 이외 지역과도 독일 등 경쟁력 있는 나라들로 인해 유로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아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회복도 여의치 않았다.

### 2)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적 대응

## (1) 1차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

2008년에는 경제위기에 대한 제한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2008년 1사분기부터 혹은 2007년 4사분기부터 경기침체에 빠져든 나라들이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위기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는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부터 수요진작, 신용공급 및 저금리 기조 유지, 금융기관 증자, 보호주의 배격 등의 합의를 하고 실천해 왔다. 그런데 미미하나마 이런 경기부양정책 기조는 중간에 변경되었다. 2010년 6월에 개최된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줄인다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G20 회의가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부양보다는 긴축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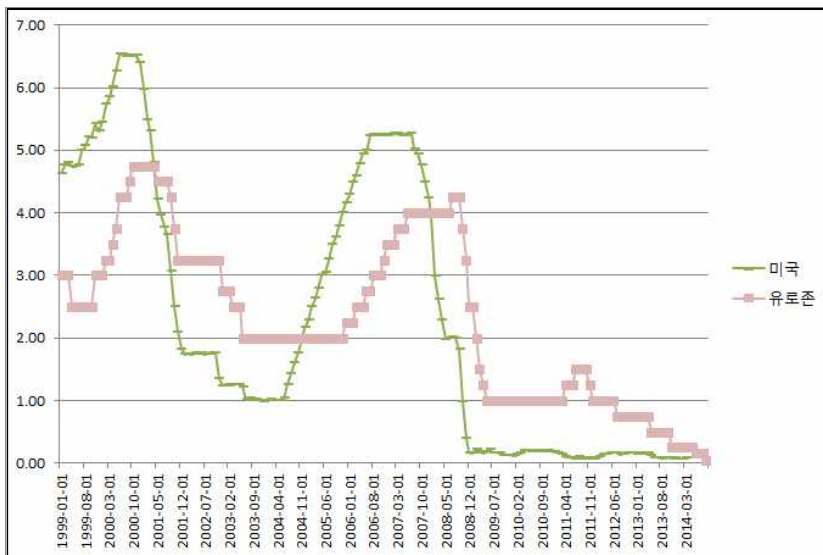
그리고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각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구제가 이루어졌다. 영국정부가 2008년 10월 5000억파운드(약 8500억불) 규모의 은행 구제 패키지를 발표했고, 베네룩스 3국은 2008년 9월 Fortis에 대해 부분국유화를 단행했다. 독일도 Hypo Real Estate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 ① 통화정책

유럽중앙은행의 경제위기에 대한 초기 대응은 문제가 있었다. 경제위기 시작 시점에 미 연방준비은행에 비해 금리 인하시기도 늦었고 인하폭도 적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물가를 잡는다고, 경제위기로 막 진입해 가고 있는 2008년 7월 금리를 올리기까지 했다. 사실 당시는 유가폭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

한 근원물가는 2%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sup>1)</sup> 그리고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 4월부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해 11월에 다시 금리를 내릴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그림 I -1> 참조). 더구나 이 당시는 그리스(2010년 5월), 아일랜드(2010년 11월)가 구제금융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포르투갈마저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2011년 5월에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도 국채수익률이 6-7%를 넘나드는 등 위기상황으로 몰렸다(<그림 I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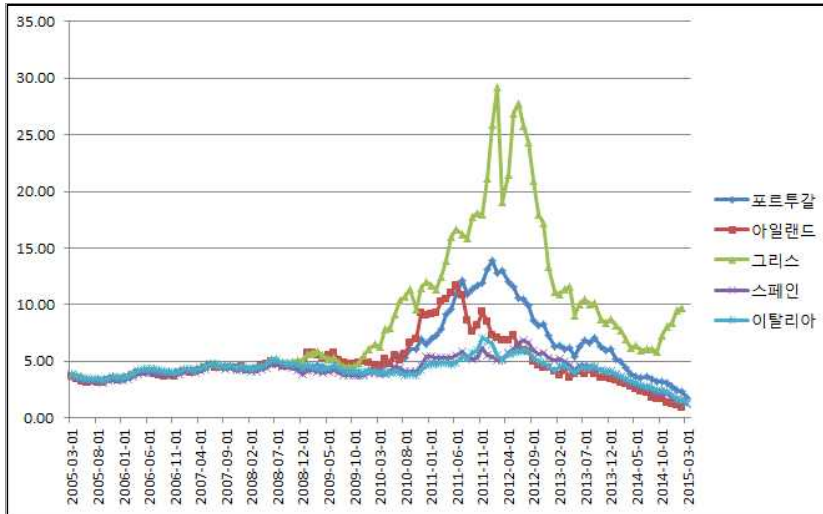
<그림 I -1>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출처: FRED(<https://research.stlouisfed.org/fred2/>)

1) Paul Krugman(2011), "The Mistake of 2008", The Conscience of a Liberal([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를 참조하라.

<그림 1 -2> 유로존 위기국들의 10년물 국채수익률



출처: FRED

## ② 재정정책: 소규모 경기부양과 긴축정책으로의 선회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규모도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더 적었다.<sup>2)</sup> 이는 정부부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신자유주의적 ‘성장 안정 협약’에 의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 (2) 2차 위기,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 ① 통화정책

2011년 11월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드라기 총재가 들어선 이후 통화정책은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금리를 다시 내렸고, 2011년 12월 11일

2) OECD(2009), "The Effectiveness and Scope of Fiscal Stimulus",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09』(<http://www.oecd.org/eco/outlook/42421337.pdf>)를 참조하라.

LTROs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s)라는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3년이라는 예외적으로 긴 기간 동안 1%라는 낮은 금리로 523개 은행에 최대 4,890억 유로를 풀었다. 기존에 대출 만기는 3개월, 6개월, 1년이였다.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들에게 흘러들어 갔다. 2012년 2월 29일엔 LTRO2를 시행했다. 이 LTRO를 통한 대출은 은행들 사이의 대출을 상당 부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은행은 800개로 늘었고 최대 대출규모는 5,295억 유로로 늘었다.

더 나아가 유럽중앙은행은 2012년 9월 6일부터 OMTs(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라는 2차 국채시장에서 무제한으로 국채매입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조치로 그리스는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위기국들의 국채수익률은 현저히 하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럽중앙은행의 초기 통화정책이 오류였다는 것이다. 국채수익률 폭등은 적절한 정책이 취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림 I -2> 참조).

## ② 긴축정책: ‘재정협약’ 발효

재정적자 3% 이내 억제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60% 준수(내지 시정)가 이전의 ‘안정과 성장 협약’에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재정협약’이 체코공화국, 영국,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모든 국가에서 비준됨으로써, 2013년 1월 1일부로 16개국에서 발효가 되었고, 2014년 1월 1일 부로는 25개국에서 발효가 되었다. 재정협약에서는 균형재정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의 60%가 넘으면 이 부채비율을 감소시켜야 하고(현재 60%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 이행기간을 가진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로존 국가들에겐 자동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sup>3)4)</sup>

3) [http://en.wikipedia.org/wiki/European\\_Fiscal\\_Compact](http://en.wikipedia.org/wiki/European_Fiscal_Compact)(2015년 12월 2일 검색)를 참조하라.

4)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케인즈주의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 ‘재정협약’을 유럽대

### 3) 위기 전개양상

#### (1) 위기 및 회복 양상

유로존은 연간 기준으로 2008년 0.5%, 2009년 -4.5%, 2010년 2.1%, 2011년 1.6%, 2012년 -0.9%, 2013년 -0.3%, 2014년 0.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5년 1사분기에는 0.5%, 2사분기에는 0.4%, 3사분기에는 0.3%의 성장을 했다.<sup>5)</sup> 1년간의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 2년간의 회복, 그리고 뒤이은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2014년부터의 미미한 회복을 겪고 있다.

<그림 I -3>와 <그림 I -4>를 통해 분기별 위기 및 회복 양상을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2사분기부터 한차례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2009년 3사분기부터 회복을 시작했다. 그 회복은 2011년 1사분기로 끝나고 그 이후에 더블딥에 빠진다. 1차 경제위기가 재정위기로 전화하면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몇몇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고 긴축정책에 돌입하기에 이른다. 긴축정책은 재정위기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로존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회복하던 유로존 경제를 다시 2차 불황에 빠지게 한 것이다. 두 번째 하강은 전체 유로존으로 보면 1차 때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다. 물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위기국가들은 1차 때보다 더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결국 더블딥은 8개 분기 동안의 제로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졌고, 2013년 2사분기부터 다시 회복과정을 밟고 있으나 그 회복세는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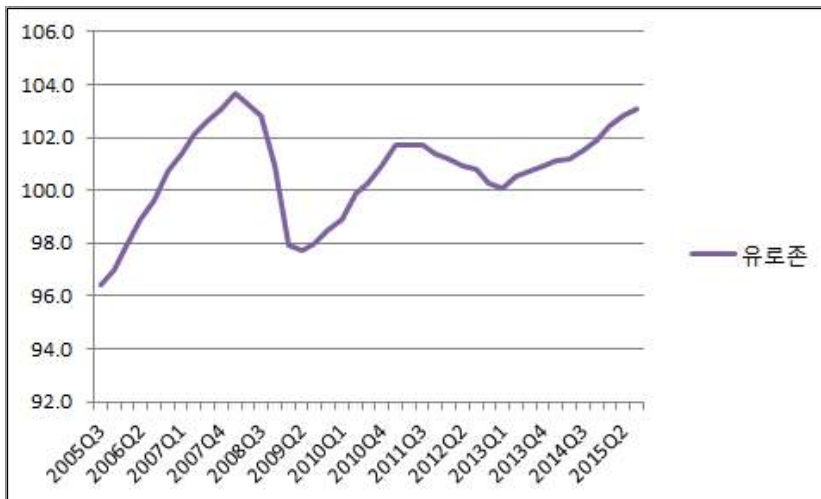
---

록의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Paul Krugman(2012), "Europe's Economic Suicide", The New York Times([http://www.nytimes.com/2012/04/16/opinion/krugman-europes-economic-suicide.html?\\_r=0](http://www.nytimes.com/2012/04/16/opinion/krugman-europes-economic-suicide.html?_r=0))를 참조하라.

5) 개략적인 계산이지만 연평균을 하지 않은 분기별 성장률에 4배를 해 주면 연간성장률과 비슷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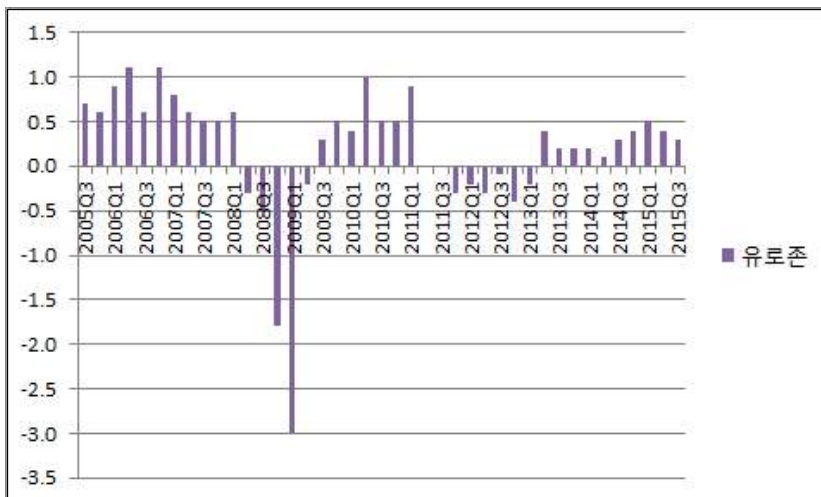
더디다.

<그림 I -3> 유로존의 실질총생산(계절조정, 2010년 기준)



출처: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그림 I -4> 유로존 분기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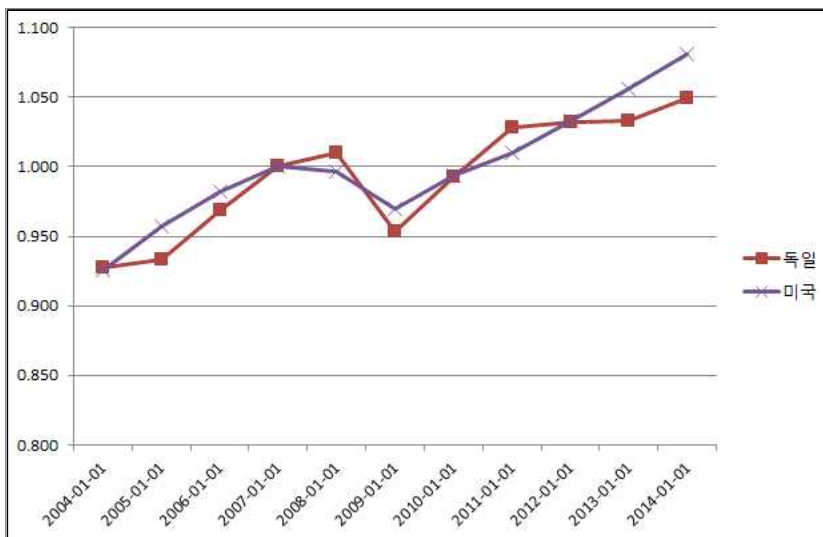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이를 통계적으로 요약하면 유로존은 2008년 1사분기를 정점으로 그 이후

2009년 2사분기까지 5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2009년 2사분기의 생산규모는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에 비해 5.8%가 감소하였다. 2009년 3사분기부터 회복을 하던 유로존 경제는 2011년 1사분기까지 약간의 성장을 하다가 더블딥에 빠진다. 그 이후 9개 분기 동안 미약한 플러스 성장을 하고 난 이후 2015년 3사분기의 생산규모는 이번 위기에서 최저 생산규모를 보인 2009년 2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서는 불과 5.5% 증가에 그치고 있고, 위기 이전 최고 생산규모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로는 재정위기 및 긴축정책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유로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회복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성장도 긴축정책의 영향이 큰 해였던 2012년과 2013년에는 미국과는 판이하게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I -5> 참조).

<그림 I -5> 독일과 미국의 국내총생산(2007=1)



출처: Eurostat, 필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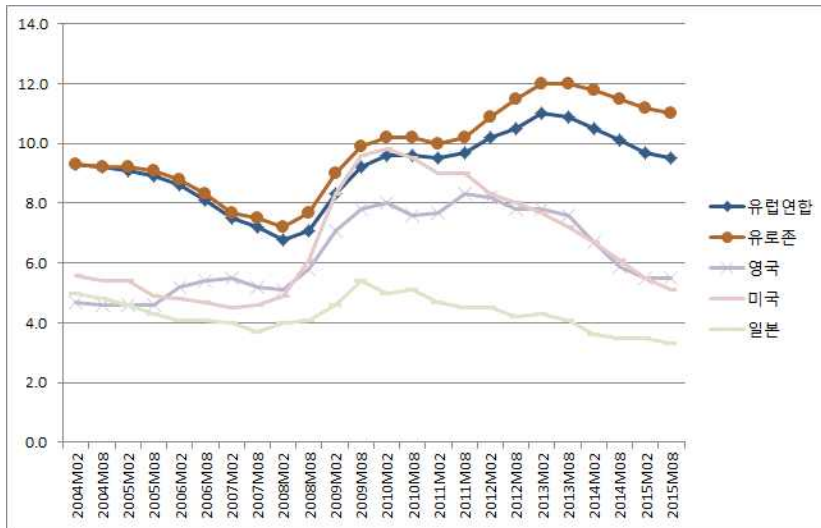
한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럽 내의 차이는 매우 심각하다. 우선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 중에는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처럼 실질 총생산 규모가 위기 직전 최고치를 넘어선 경우도 있고,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위기 직전 최고치 수준을 겨우 회복한 나라도 있고, 아직 위기 이전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한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 내부에서도 차이는 있는데 그리스는 여전히 생산규모가 이전 최고치 대비 25% 이상이 감소한 상태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그 다음으로 심각하고,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사정이 조금 더 낫다. 물론 이 모든 나라들은 생산규모가 아직 위기 이전 최고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 (2) 실업률

<그림 I -6>를 보면서 유로존,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자. 유로존(과 유로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2009년 말 이후(영국은 2011년 말 이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2013년 말부터 약간 개선이 되고 있을 뿐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독일은 현저히 개선되었는데 독일을 제외하면 여타 국가들은 거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림 I -6> 주요 국가와 지역의 실업률



주) 영국과 일본의 2015년 8월(2015M06) 실업률 수치는 각각 6월과 7월의 실업률임.

출처: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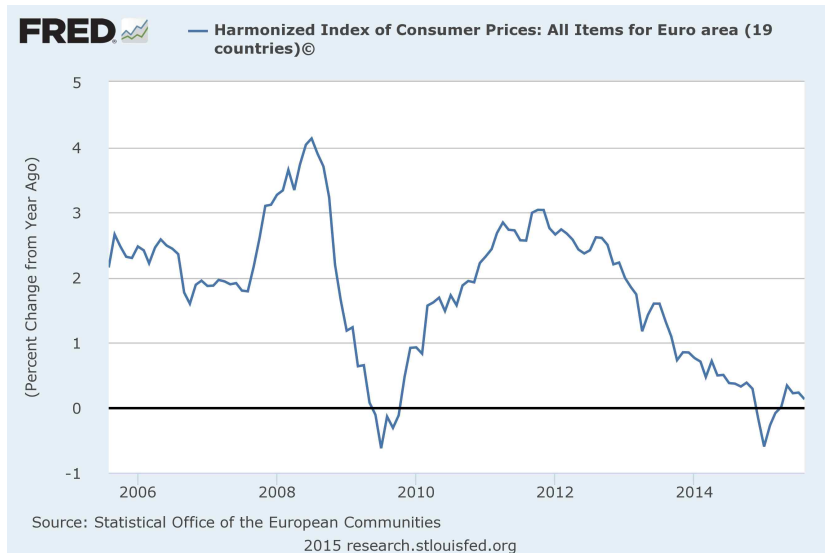
### (3) 물가상승률-디플레이션에 근접

한편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11월에 3%를 기록했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3년 10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1%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까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5년 8월 물가상승률은 0.1%다. 변동성이 심한 유가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디플레이션에 근접한 상황이라 해야겠다(<그림 I -7> 참조).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최근월에 1%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보다도 낮다(<그림 I -8> 참조).

물가가 디플레이션 수준에 접근해 있다는 것은 경제 회복세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낮은 물가 자체가 과다부채로 허덕이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실질부채 수준을 높여 수요를 둔화시키고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림 I -7> 유로존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출처: FRED

<그림 I -8> 유로존과 미국의 근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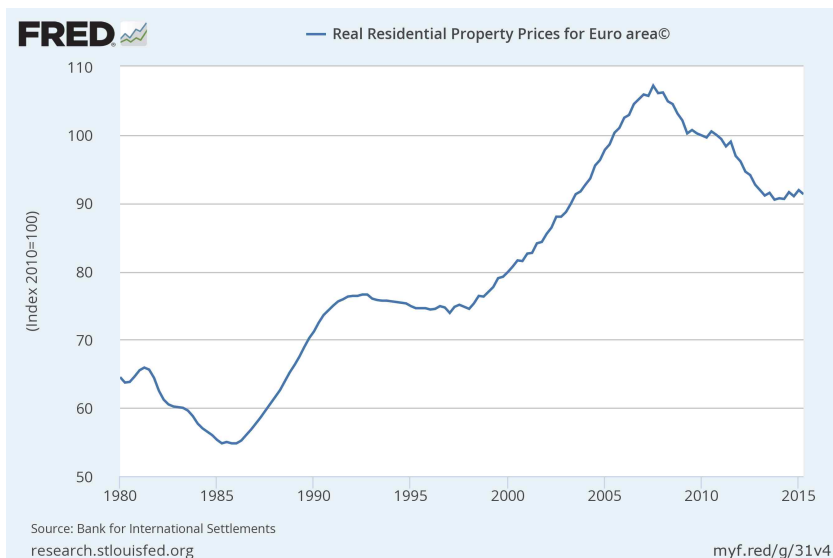
주 1) 각 년도 2월과 8월 전년대비 상승률

주 2) 유럽은 에너지와 미 가공식품 제외 물가 상승률, 미국은 식품과 에너지 제외 물가상승률

출처: Eurostat

유로존의 많은 나라에서 주택부분에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된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주택가격의 회복은 경기회복의 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유로존의 실질 주택가격은 위기 이후 거의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의 한 지표라 할 수 있다(<그림 I -9> 참조).

<그림 I -9> 유로존의 실질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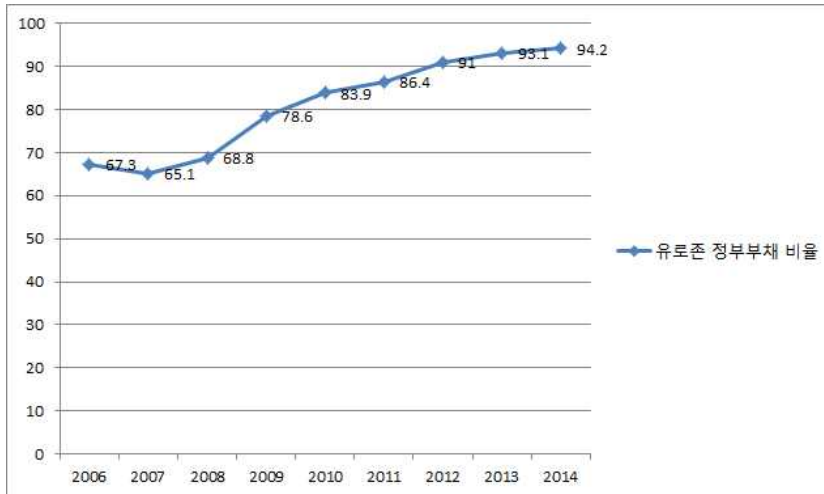
출처: FRED

#### (4) 정부부채

2009년과 2010년을 거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그래서 긴축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그러나 긴축은 정부부채 비율을 애초의 목표만큼 줄이지는 못했다(<그림 I -10> 참조). 총생산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승수효과가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6)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10월에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그 전까지 긴축정책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했음을 고백했다. 28개국 긴축정책 연구에서 이번 위기 이후 재정 지출 혹은 재정긴축 승수효과, 즉 정부지출한 단위를 늘렸을 때 늘어나는 국내총생산의 양을 0.9에서 1.7 사이로 추정했는데, 이는 과거 30년 동안 선진국에서의 승수효과를 0.5로 추정한 것에 비하

<그림 I -10> 유로존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출처: IMF(2015)

#### 4) 소결

유로존은 초기 위기에서 벗어나는 도중에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더블딥을 겪었고 지금은 아주 미약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이전 최고 생산규모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다. 실업률은 매우 높고 물가수준은 매우 낮아 디플레이션에 근접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면 훨씬 더 커진 것이다. 즉 재정지출 효과는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재정긴축 효과는 더 파괴적이었다는 얘기다. [https://en.wikipedia.org/wiki/Fiscal\\_multiplier#IMF](https://en.wikipedia.org/wiki/Fiscal_multiplier#IMF) (2015년 10월 5일 검색)를 참조하라. 국제통화기금의 원 보고서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2): 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2/pdf/text.pdf>)도 참조하라.

뒤늦은 이자율 인하 및 불필요한 이자율 인상 등 통화정책의 오류와 그릇된 판단에 기초한 긴축정책 등 각국의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없었더라면 불황에서의 회복세가 조금 더 강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독일,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었다면 사정이 조금 달라졌겠지만 현재로서는 극히 미미한 회복세 내지 장기불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부양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유럽 같은 결정적인 실수가 있지 않은 미국도 경기회복은 그리 활기차지 않다. 그래서 ‘장기 정체론’(Long Stagnation)이 주류경제학자들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sup>7)</sup> 이 말은 정책실패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럽경제의 부진은 그 정도가 덜할 뿐 여전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제대로 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애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야겠다. 성장 정체뿐만 아니라 일국 내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유럽 내 중심과 주변 사이의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

7) Coen Teulings and Richard Baldwin(eds.), *Secular Stagnation:Facts, Causes, and Cures*,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 2010 ( [http://www.voxeu.org/sites/default/files/Vox\\_secular\\_stagnation.pdf](http://www.voxeu.org/sites/default/files/Vox_secular_stagnation.pdf))를 참조하라.

### 3. 각국에서의 위기 양상<sup>8)</sup>

#### 1) 유로존 중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

##### (1) 위기 및 회복 양상

###### ① 독일

독일은 경제위기가 도래한 이후 2008년 1.1%, 2009년 -5.6%, 2010년 4.1%, 2011년 3.7%, 2012년 0.4%, 2013년 0.1%, 2014년 1.6%의 성장을 해 2009년 한 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줄곧 플러스 성장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은 상태다. 그러나 성장률이 최근년 들어서 아주 낮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독일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3%, 2사분기 0.4%, 3사분기 0.3%에 이른다. 여전히 미약한 성장세다.<sup>9)</sup>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에 도달한 2009년 1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에 비해 6.9% 감소했고 총생산이 하락한 기간은 4개 분기, 즉 1년 동안으로 비교적 짧다. 2011년 1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12개 분기, 즉 3년이 걸

---

8) 구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다. 나라들을 위기 양상으로 나누면 국제수익률이 7%를 넘어서서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었던 재정위기 국가와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 그리고 유로 화 사용여부로 유로 화 사용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그리고 북유럽과 서부유럽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변수를 통합해 ‘유로존 중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 ‘유로존 재정위기국’, ‘비유로존 북유럽 국가’, ‘비유로존 서유럽 국가’ 그룹으로 나눠 보았다.

9) Eurostat를 참조하라. 이하 그래프들을 위한 성장률 통계들과 소결에서의 통계들은 특정하지 않는 한 FRED에 따른다. 이 통계에 따라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어서다. 그런데 이 통계는 본문에 있는 Eurostat보다는 조금 늦다. 유럽연합통계청가 최근 통계여서 수정되는 경우 FRED와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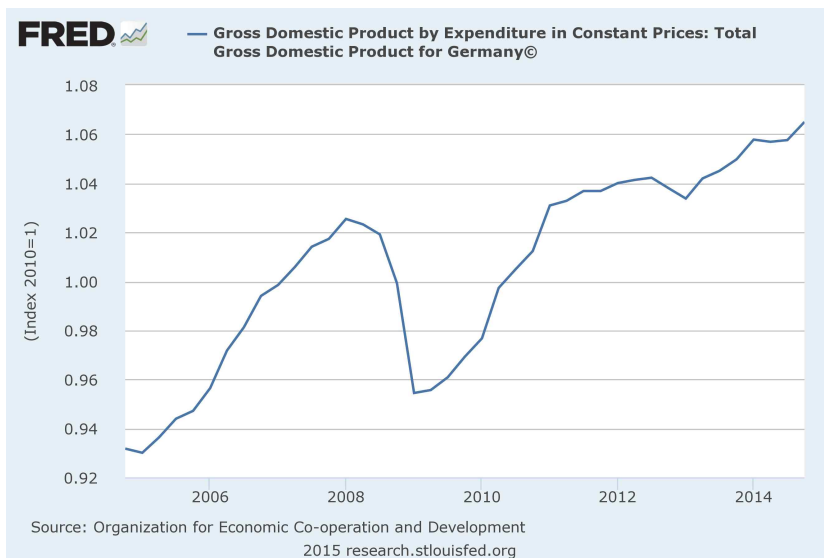
렸다. 회복 이후 미약한 더블딥을 겪기도 했다.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에 비해서 3.9% 증가했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1사분기에 비해서는 11.6% 증가했다.

한편 독일은 2008년 국내총생산 규모의 3%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을 2009년과 2010년에 나누어서 시행했다.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부양은 1.4%포인트였고 감세를 통한 부양규모는 1.6%포인트였다.<sup>10)</sup>

독일의 회복세의 변화는 유럽의 재정위기(2010년 5월부터 시작) 발발과 긴축정책으로의 선회,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 디플레이션 압력 심화 등의 과정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 -11> 독일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② 프랑스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0.2%, 2009년 -2.9%,

10) OECD(2009)를 참조하라.

2010년 2.0%, 2011년 2.1%, 2012년 0.2%, 2013년 0.7%, 2014년 0.2%를 기록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프랑스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7%, 2사분기 0.0%, 3사분기 0.3%에 이른다.<sup>11)</sup> 회복세가 독일보다 미약하다. 회복 이후에도 그 정도는 약하나마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가 두 차례나 있었다.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에 도달한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에 비해 4.0%가 감소했고 총생산이 하락한 기간은 5개분기다. 2011년 1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그 기간은 총 12개월, 즉 3년이 걸렸다.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에 비해서 겨우 1.5% 증가했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1사분기에 비해서는 5.7% 증가했다.

경기 하강이 독일보다 덜 깊은 반면 그 이후 회복도 독일보다 덜 힘차다. 프랑스의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 규모의 0.6%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이러한 미약한 회복의 한 원인이라 해야겠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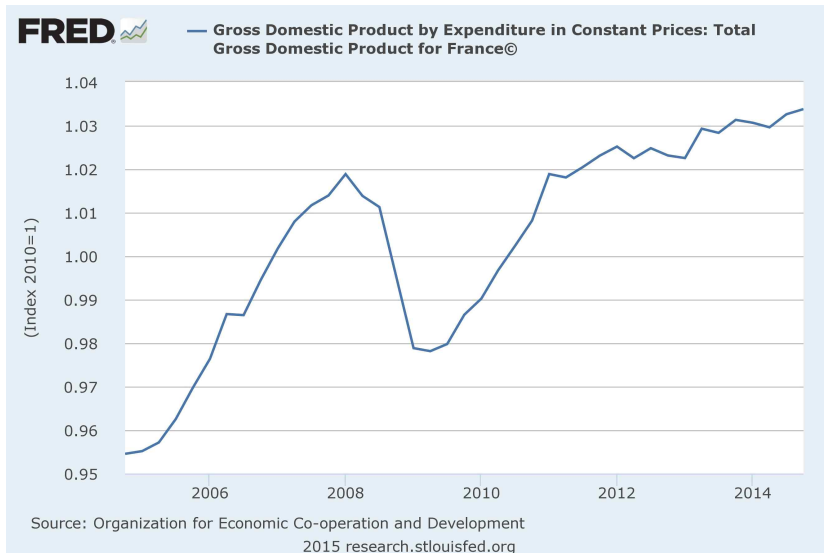
---

11) Eurostat를 참조하라.

12) OECD(2009)를 참조하라.

<그림 I -12> 프랑스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

(2010=1.00)



출처: FRED

### ③ 오스트리아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스트리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1.5%, 2009년 -3.8%, 2010년 1.9%, 2011년 2.8%, 2012년 0.8%, 2013년 0.3%, 2014년 0.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오스트리아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7%, 2사분기 0.3%, 3사분기 0.1%에 이른다.<sup>13)</sup>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위기의 심각성은 덜했으나 그 이후 회복세가 약하고 최근 들어 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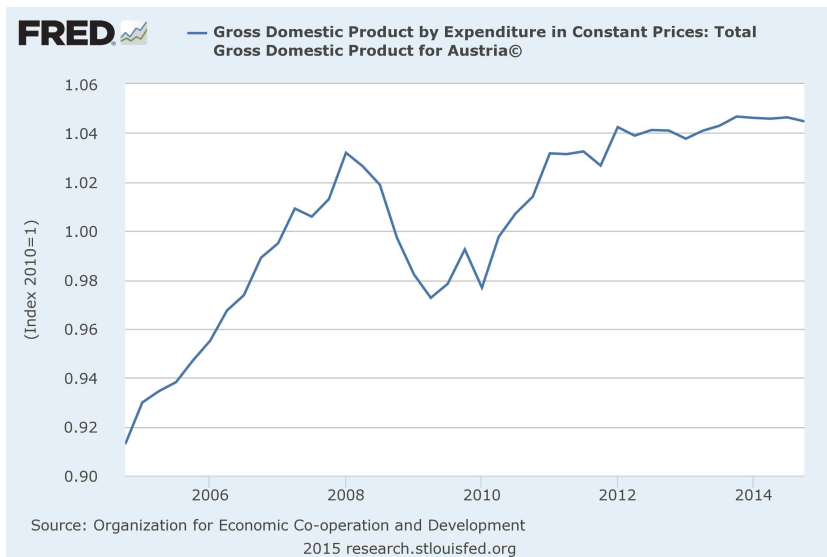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에 도달한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에 비해 5.7% 감소했고 1년 1개 분기 동안 실질국내총생산이 감소했다. 그리고 2011년 3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총 14개 분기, 즉 3년 2개분기가 소요되었다.

13) Eurostat를 참조하라.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에 비해서 불과 1.2%가 증가했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에 비해서는 겨우 7.4% 증가했다. 프랑스처럼 경제위기 이전 최고 생산 규모를 간신히 벗어난 상태다.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1.1%였는데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0.3%포인트였고, 감세를 통한 부양이 0.8%포인트였다.<sup>14)</sup>

<그림 I -13> 오스트리아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④ 네덜란드

경제위기 이후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1.7%, 2009년 -3.8%, 2010년 1.4%, 2011년 1.7%, 2012년 -1.1%, 2013년 -0.5%, 2014년 1.0%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네덜란드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6%, 2사분기 0.1%, 3사분기 0.1%에 이른다.<sup>15)</sup> 첫 위기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위기 이후 회복세가 강하

14) OECD(2009)를 참조하라.

지 않고 더블딥을 경험했다.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에 도달한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에 비해 4.2%가 감소했고 5개 분기 동안 총생산이 하락했다. 또한 2011년 1사분기 이후 더블딥에 빠졌는데 2013년 2사분기까지 9개 분기 동안 총생산이 하락했다. 위기가 발생한 지 6년 3개분기가 지난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에 비해서 98.5%를 기록해 위기 이전 최고 생산 규모를 회복하기는 커녕 아직도 1.5%가 하락했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에 비해서는 겨우 2.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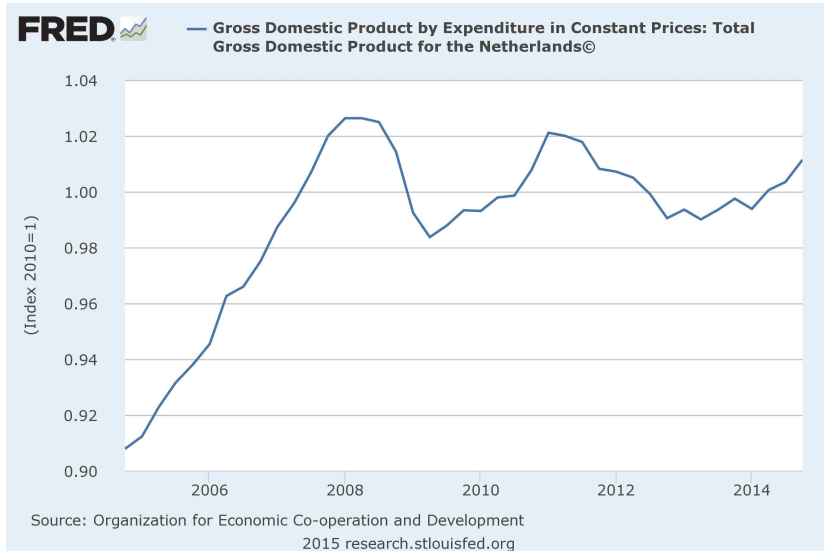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1.5% 규모에 불과했다. 그것도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부양은 0.1%포인트에 불과했고 나머지 1.4%포인트는 감세를 통한 것이었다.<sup>15)</sup> 네덜란드는 독일, 핀란드와 함께 유럽연합에서의 긴축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

15) 2013년과 2014년 연간 분기별 통계는 잠정치다. Eurostat를 참조하라.

16) OECD(2009)를 참조하라.

<그림 I -14> 네덜란드의 분기별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⑤ 핀란드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2008년 0.7%, 2009년 -8.3%, 2010년 3.0%, 2011년 2.6%, 2012년 -1.4%, 2013년 -1.1%, 2014년 -0.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핀란드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2%, 2사분기 0.4%, 3사분기 -0.5%에 이른다. 더블딥에서 확실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 하겠다.<sup>17)</sup>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이 매우 심각했고 당연히 경제위기 이전 최고 생산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에 도달한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에 비해 9.6%가 하락했고 6개 분기 동안 실질국내총생산이 감소했다. 한편 핀란드는 그 이후 2011년 3사분기부터 더블딥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2014년 4사분기까지 1-2개 분기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2014년

17) Eurostat를 참조하라.

4사분기에도 아직까지 더블딥에서 확실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가 발생한 지 28개 분기, 즉 7년이 지난 2014년 4사분기 현재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 여전히 6.9%가 하락한 상황이고 위기 이전 최고치를 언제 넘어설 수 있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에 비해서는 겨우 3.0% 증가한 상황이다.

위기 기간 동안의 핀란드의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3.1%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에 정부지출 규모는 0.5%포인트에 불과했고 감세는 2.7%포인트여서 대부분은 감세를 통한 부양이었는데,<sup>18)</sup> 일반적으로 감세는 경기부양 효과가 덜하다고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이런 저조한 회복세는 핀란드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의 부진<sup>19)</sup>, 긴축정책<sup>20)</sup>, 유로화 사용<sup>21)</sup>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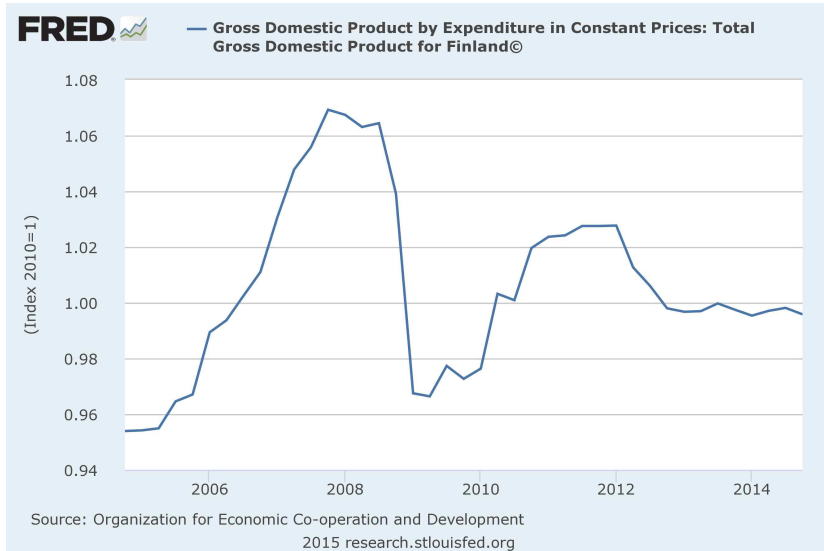
18) OECD(2009)를 참조하라.

19) The economist(2012), "Finland and the euro crisis Northern gripes"(<http://www.economist.com/node/21560865>)를 참조하라

20) Danske bank(2014), "Austerity hits growth in Finland"([http://danskeresearch.danskebank.com/link/ResearchFinnishFiscalPolicy270814/\\$file/Research\\_FinnishFiscalPolicy\\_270814.pdf](http://danskeresearch.danskebank.com/link/ResearchFinnishFiscalPolicy270814/$file/Research_FinnishFiscalPolicy_270814.pdf))를 참조하라.

21) 핀란드 외교부장은 핀란드가 평가절하가 불가능한 유로에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실토했다. Bloomberg(2015), "Finland Should Never Have Joined Euro, Foreign Minister Says"(<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12-22/finland-should-never-have-joined-euro-foreign-minister-says>)를 참조하라.

<그림 I -15> 핀란드의 분기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⑥ 소결

독일은 총생산이 2008년 1사분기 이후 2009년 1사분기까지 4개 분기 동안 6.9% 하락했다. 그리고 2011년 1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걸린 기간은 12개 분기, 즉 3년이다. 회복 이후 미약한 더블딥을 겪기도 했다. 2014년 4사분기 현재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3.9% 증가했고, 위기 동안 최저치에 비해 11.6% 증가했다.

프랑스는 총생산이 2008년 1사분기 이후 2009년 2사분기까지 5개 분기 동안 4.0% 하락했다. 그리고 2011년 1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걸린 기간은 12개분기, 즉 3년이다. 회복 이후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가 미약하나마 두 차례나 있었다. 2014년 4사분기 현재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1.5% 증가했고, 위기 동안 최저치에 비해 5.7% 증가했다.

오스트리아는 총생산이 2008년 1사분기 이후 2009년 2사분기까지 5개 분기, 즉 1년 1개 분기 동안 5.7% 하락했다. 그리고 2011년 3사분기에 위

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걸린 기간은 14개 분기, 즉 3년 2개분기이다. 2014년 4사분기 현재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1.2% 증가했고, 최저치에 비해 7.4% 증가했다.

네덜란드는 총생산이 2008년 1사분기 이후 2009년 2사분기까지 5개 분기 동안 4.2% 하락했다. 그리고 나서 또 2011년 1사분기부터 2013년 2사분기까지 9개 분기 동안 총생산이 하락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한 지 6년 3개분기가 지난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아직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기는커녕 1.5%가 하락한 상태다.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에 비해서는 겨우 2.8% 증가했다.

핀란드는 총생산이 2007년 4사분기 이후 2009년 2사분기까지 6개 분기 동안 9.6% 하락했다. 이후 회복을 하다가 또 2011년 3사분기부터 더블딥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2014년 4사분기까지 1-2개 분기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2014년 4사분기에도 아직까지 더블딥에서 확실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가 발생한 지 28개 분기, 즉 7년이 지난 2014년 4사분기 현재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 여전히 6.9%가 하락한 상황이고 위기 이전 최고치를 언제 넘어설 수 있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에 비해서는 겨우 3.0% 증가한 상황이다.

유로존 중 재정위기를 겪지 않는 나라들의 경제성적은 썩 좋지 않다. 위기 이전 실질국내총생산의 최고치에서 9.6%(핀란드)에서 4.0%(프랑스)까지 하락했다. 2014년 4사분기 현재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1.2%, 독일은 3.9%, 프랑스는 1.5% 상승했을 뿐이고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위기 이전 최고치를 아직 회복하지도 못했다. 핀란드는 아직도 위기 이전 최고치에서 6.9%나 하락해 있다. 이번 위기에서 기록한 최저치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는 독일로서 11.6% 증가했고 가장 적게 증가한 나라는 네덜란드(2.8%)와 핀란드(3.0%)라 할 수 있다(<표 I -1> 참조).

<표 I -1> '유로존 중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의 위기 및 회복 양상

| 나라    | 최고치 시점 | 하락 기간(분기) | 하락 정도 | 최저치 시점 | 최고치 회복 기간 | 더블딥 | 최고치 대비 | 최저치 대비 |
|-------|--------|-----------|-------|--------|-----------|-----|--------|--------|
| 독일    | 08.1/4 | 4         | 6.9%  | 09.1/4 | 12        | 약   | 3.9%   | 11.6%  |
| 프랑스   | 08.1/4 | 5         | 4.0%  | 09.2/4 | 12        | 약   | 1.5%   | 5.7%   |
| 네덜란드  | 08.1/4 | 5         | 4.2%  | 09.2/4 | 미회복       | 강   | -1.5%  | 2.8%   |
| 오스트리아 | 08.1/4 | 5         | 5.7%  | 09.2/4 | 14        | 무   | 1.2%   | 7.4%   |
| 핀란드   | 07.4/4 | 6         | 9.6%  | 09.2/4 | 미회복       | 강   | -6.9%  |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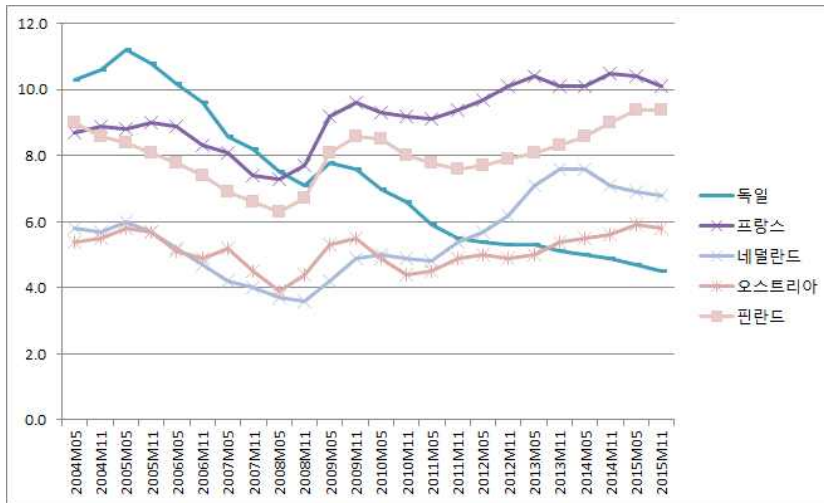
주) 2014년 4사분기까지다

## (2) 실업률

이들 나라들의 실업률 지표는 유로존 평균보다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독일을 제외하고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 와중에 상승했다가 짧은 회복과정에서 실업률이 다시 하락했다가 유럽이 대체로 더블딥에 빠지거나 성장이 정체하는 동안 실업률이 다시 상승했다가 그 상태가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네덜란드는 예외로 최근년 약간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부채 위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독일과 달리 실업률이 10%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 핀란드 실업률도 2015년 11월 9.4%로 매우 높다.

독일은 2009년 위기가 가장 심했을 때 실업률이 약간 상승했다가(2008년 12월 7.3%에서 2009년 12월 7.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11월엔 4.5%를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I -16> 참조). 유럽의 긴축정책이 독일에겐 실업증대로 귀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긴축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리 심하지 않고, 유럽차원의 긴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메르켈이 국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지난해 5월 총선거에서 승리한 배경이라 해야겠다.

<그림 I -16 >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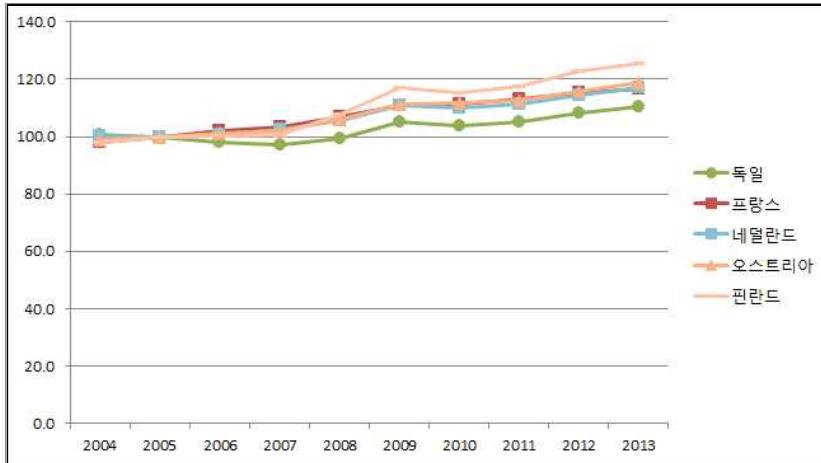
주) 각 년도 5월과 11월 실업률

출처: Eurostat

한편 독일의 경우 위기 이전에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가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진 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공유(및 이를 위한 정부지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상(<그림 I -17> 참조), 재정위기를 당한 나라들로부터의 자본유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의 이런 외형적인 실업률 감소는 미니잡, 미디잡으로 얘기되는 노동의 질의 악화와 병행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sup>22)</sup>

22) 독일의 일자리공유에 대해서는 A. Crimmann, F. Wiessner, L. Bellmann(2010),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25: The German work-sharing scheme: An instrument for the crisis", ILO([http://www.ilo.org/public/libdoc/ilo/2010/110B09\\_105\\_engl.pdf](http://www.ilo.org/public/libdoc/ilo/2010/110B09_105_engl.pdf))를 참조하라.

<그림 I -17> 명목 단위노동비용(2005=100)



출처: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 (3) 물가상승률

위기 이후 2010년에는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근원물가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했다. 그 이후 회복국면에서 물가상승률이 1.5-3% 정도를 유지하다가 긴축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8월 통계로는 이들 나라 중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근원물가상승률이 전부 1% 이하다. 특히 프랑스와 핀란드의 물가상승률은 낮다. 낮은 물가상승률 아래에서는 소비를 연기하게 되고, 부채를 많이 진 경제주체는 실질 부채부담이 기대보다 증가하게 되어 이것이 또 소비지출을 줄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 경제는 더욱 침체하게 된다.

<그림 I -18>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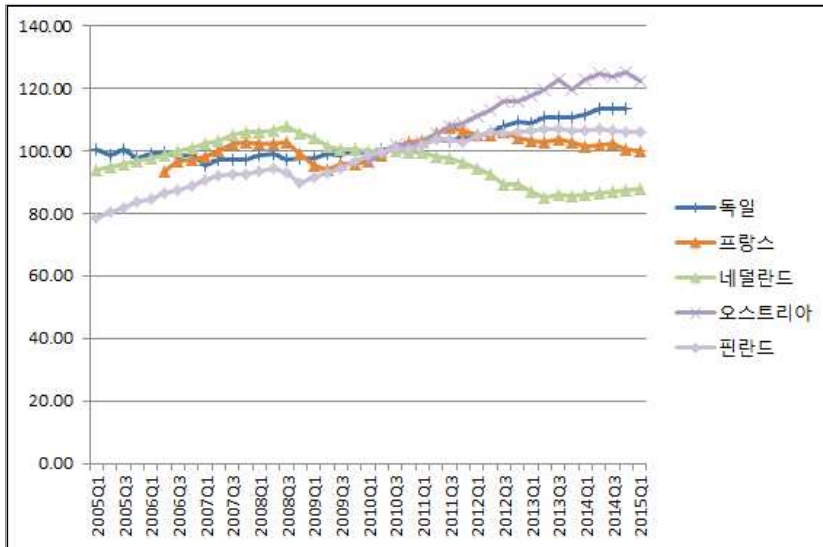
주) 각 년도의 2월과 8월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

출처: Eurostat

#### (4) 주택가격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시장의 침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최근에 주택가격이 꽤 상승하고 있다.

<그림 I -19>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주택가격지수  
(2010=100)



출처: Eurostat

## (5)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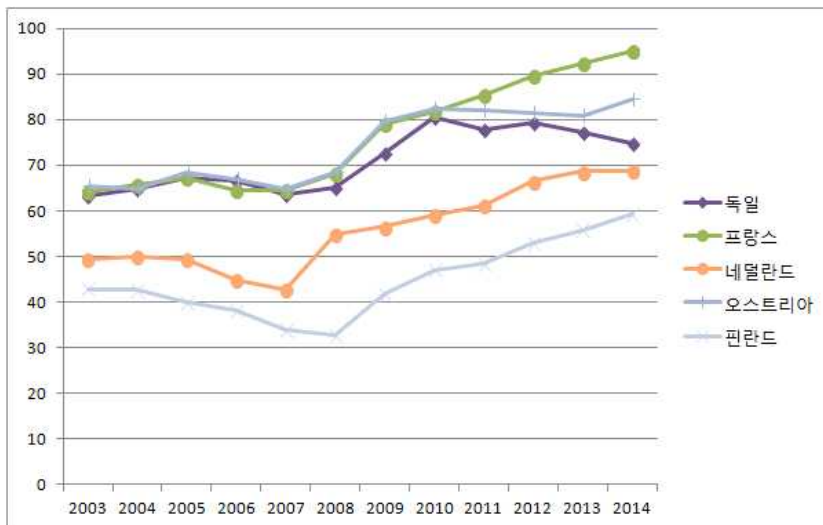
위기 이전인 2007년에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 이하였고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60-70% 사이에 있었다. 그런데 위기 이후 정부부채 비율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고 독일만 2010년 이래 하강 내지 횡보 상태에 있다. 프랑스의 정부부채 비율의 크기와 증대는 이들 나라 군에서 현저하다. 이렇게 정부부채 비율이 늘어난 데에는 경기부양, 금융기관 구제 등 재정지출 증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산축소도 원인이 되고 있다(<그림 I -20> 참조).

재정적자 규모가 위기 이전 대체로 3% 이내로 지켜지고 있었다. 특히 핀란드는 상당한 흑자였다. 그런데 위기 기간 동안에 적자가 늘어났다. 프랑스가 적자가 가장 심했다. 이들 나라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지 않았고 경기부양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 적자로의 전환 혹은 적자 심화는 정부지출이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세입이 줄어서이기도 하다. 유럽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후자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최 근년 핀란드를 제외하고 재정적자비율은 대체로 줄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2013년에 발효된 ‘재정협약’의 효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은 최근 3년간 거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유럽 나라들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그림 I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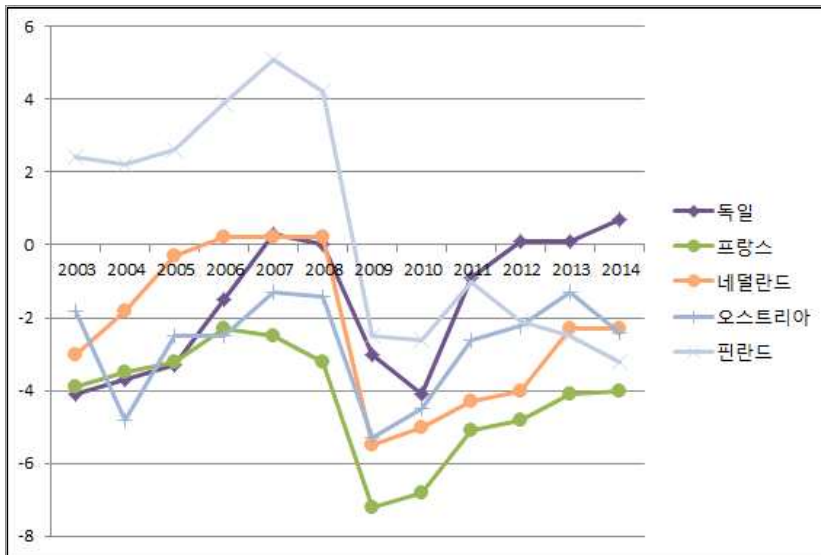
<그림 I -20>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정부부채 비율  
(대 국내총생산, %)



출처: Eurostat

핀란드의 경우 2009년 성장률이 -8.3%를 기록했는데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췄다. 이는 유럽연합의 ‘성장 및 안정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인데 제도 내지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I -21>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의 재정수지 비율  
(대 국내총생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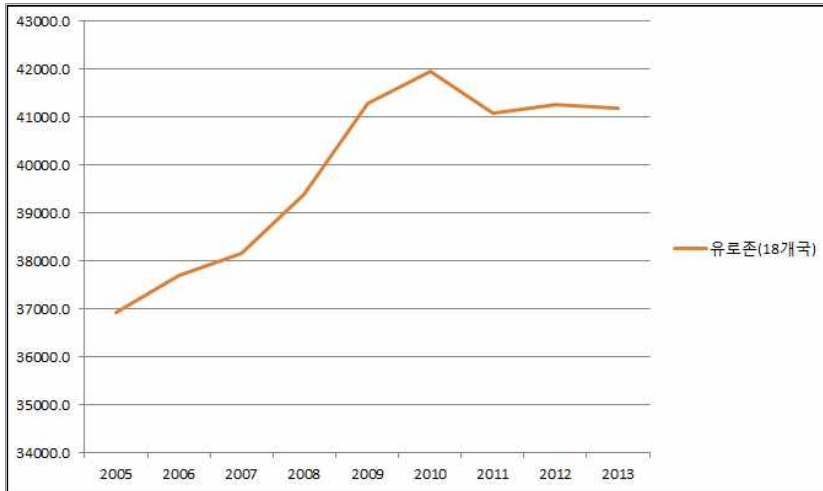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유로존 18개국의 이자지불을 제외한 실질 정부지출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2011년에 긴축정책이 시행이 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의 추가적인 감소는 없었지만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도 않았다. 통화정책으로서 양적완화가 금융시장을 대체로 안정시켰지만 경기부양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을 말해준다 하겠다(<그림 I -22> 참조).

<그림 1 -22> 유로존의 이자지불 제외 실질 정부 지출

(단위: 억유로, 기준연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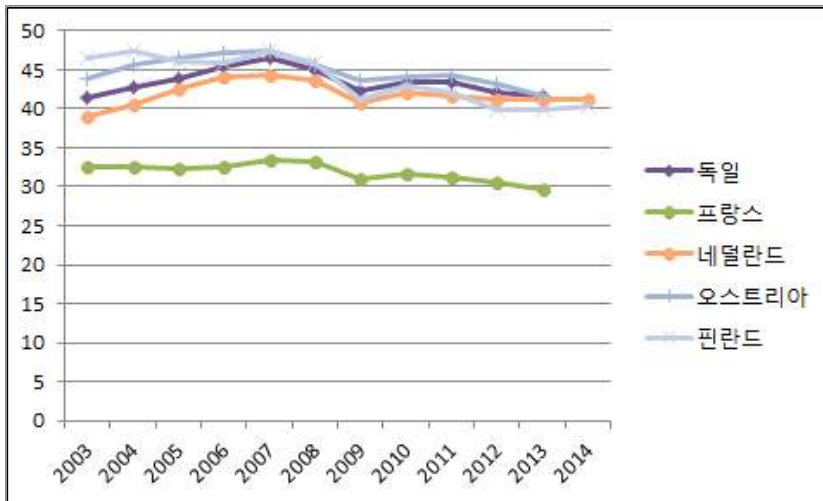
출처: Eurostat에서 가공

## (6) 영업잉여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 법인기업의 부가가치 대비 영업잉여 비율이 대체로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의 영업잉여 비율이 가장 낮다. 핀란드의 영업잉여 비율 악화가 가장 심하다.

독일이 영업잉여 비율이 2000년 초반에 비해 중반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림 1 -23>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비율



출처: Eurostat

## 2) 유로존 위기국들

### (1) 위기 및 회복 양상

유로존 재정위기국들(이하 ‘위기국들’)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는 전부 위기 이전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2003년)와 이탈리아(2004년 2/4분기)는 2003년 국내총생산보다도 더 낮다. 그리고 그리스는 2014년에야 겨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는 2014년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나머지 나라들은 위기에서 짧은 회복이 있었으나 이내 더블딥에 빠졌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비교적 최근에야 더블딥에서 벗어나고 있다.

#### ① 그리스

그리스는 2008년 -0.3%, 2009년 -4.3%, 2010년 -5.5%, 2011년 -

9.1%, 2012년 -7.3%, 2013년 -3.2%, 2014년 0.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6년 내리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2014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2011년의 -9.1% 성장률은 충격적이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리스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0%, 2사분기 0.3%, 3사분기 -0.9%에 이른다.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연간 기준으로는 2014년에 처음으로 미미한 플러스 성장을 했으나 2015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sup>23)</sup>

이번 위기에서의 그리스의 마이너스 성장은 1930년대 미국의 대불황 수준의 생산축소를 경험했다. 그리고 미국이 4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비춰보면 마이너스 성장 기간은 그리스가 6년으로 더 길다. 그리고 2013년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총생산의 73.6%여서 무려 26.4%가 하락했고 이는 미국의 1930년대 대불황 당시의 미국의 총생산 축소와 거의 같다(미국의 1934년 국내총생산의 규모는 1929년의 그것의 73.7%여서 위기 이전 최고치에서 26.3%가 하락했다). 분기별 총생산을 보면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 4사분기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2사분기에 비해 27.4%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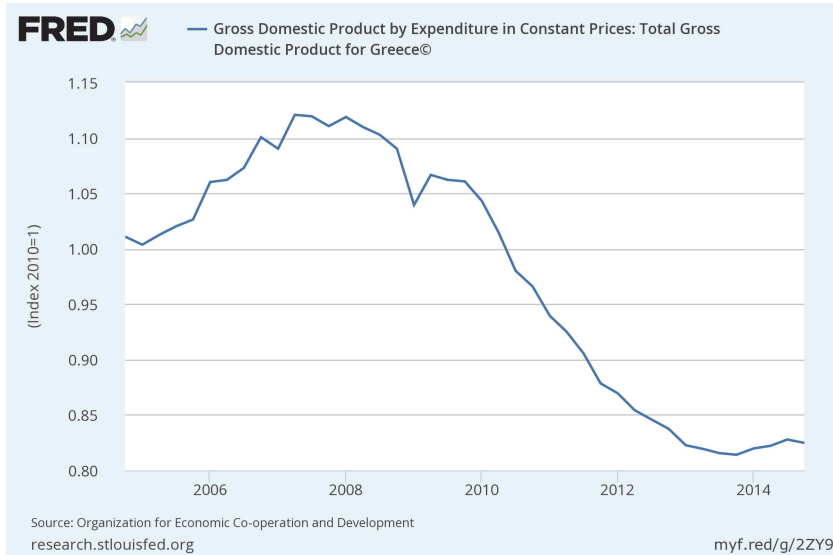
그리고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2사분기에 비해서 보다는 26.4%가 감소해 있는 상태이고, 이번 위기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1.3% 증가했다.

구제금융을 계기로 한 구조조정, 유럽차원의 긴축정책, 그리고 (위기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역내 수출증대가 불가능한) 유로화 사용 등이 결정적인 변수들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23)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분기별 성장률은 잠정치이다. Eurostat를 참조하라.

<그림 I -24> 그리스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② 아일랜드

2008년 -2.2%, 2009년 -5.6%, 2010년 0.4%, 2011년 2.6%, 2012년 0.2%, 2013년 1.4%, 2014년 5.2%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2.1%, 2사분기 1.9%에 이른다.<sup>24)</sup>

이번 위기에서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보인 2009년 4사분기의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보인 2007년 4사분기 총생산의 88.0%를 기록해 12%가 하락했으며 2년 동안 총생산이 하락했다. 그리고 회복 이후 2011년 4사분기부터 2개 분기 동안 미약한 마이너스 성장을 해 더블딥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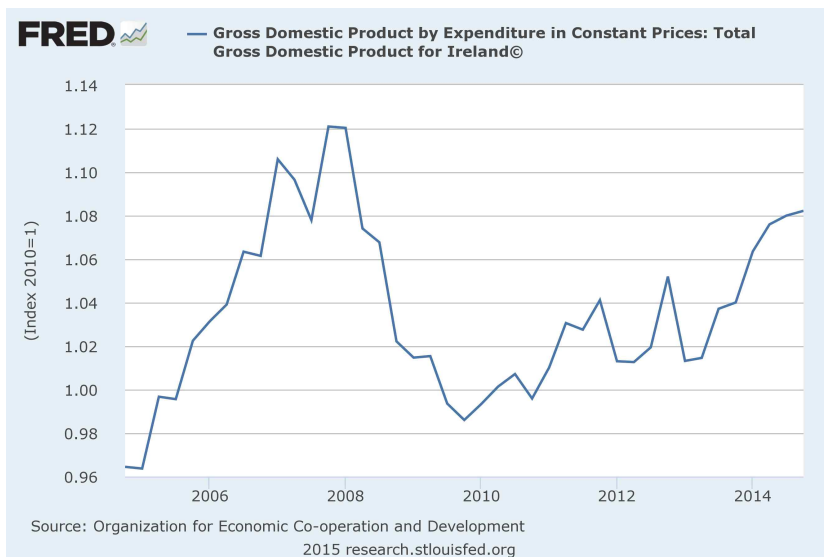
2014년 4사분기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 총생산의 96.5%에 불과해 아직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지는커녕 아직 이에 3.5% 미달한 상태이며,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4사

24) Eurostat를 참조하라.

분기의 총생산에 비해서는 9.8%가 늘어난 상태다.

아일랜드의 경우 초기 마이너스 성장이 극히 심각했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위기가 심각했던 이유는 위기 초기부터 긴축정책을 실시한 때문이다.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2008년 기준)의 4.4%에 달하는 긴축을 실시했다. 정부지출을 0.9% 줄였고 증세규모가 3.5%에 달했다. 초기 위기 양상이 심각했던 것은 이런 긴축정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5)</sup>

<그림 I -25> 아일랜드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③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2008년 0.2%, 2009년 -3.0%, 2010년 1.9%, 2011년 -1.8%, 2012년 -4.0%, 2013년 -1.1%, 2014년 0.9%의 성장을 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포르투갈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5%, 2사분기 0.5%, 3사분기 0.0%에 이른다.<sup>26)</sup>

25) OECD(2009)를 참조하라.

2008년 1사분기 이후 1차 경제침체가 발생했는데 이 때는 2009년 1사분기까지 4개분기 동안 4.3% 총생산 하락이 있어서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1차 침체 이후 6개분기의 회복이 있었다. 이후 2010년 3사분기 이후 시작된 더블딥 때는 침체가 매우 심각해 졌다. 그래서 더블딥에서 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른 2013년 1사분기의 총생산은 더블딥 시작 직전 2010년 3사분기 총생산에서 8.1%가 하락했고 생산 하락이 10개 분기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번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서는 9.6%나 생산이 하락했다. 그리고 1차 침체와 잠깐의 회복, 그리고 더블딥 전 기간은 20개 분기, 즉 5년이 걸렸다.

2014년 4사분기 현재의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기는커녕 아직 이 최고치에 비해 약 7.7%나 하락한 상태다. 그리고 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른 2012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불과 2.1%밖에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포르투갈의 이런 심각한 위기는 구제금융을 계기로 한 구조조정, 긴축정책, 유로화 사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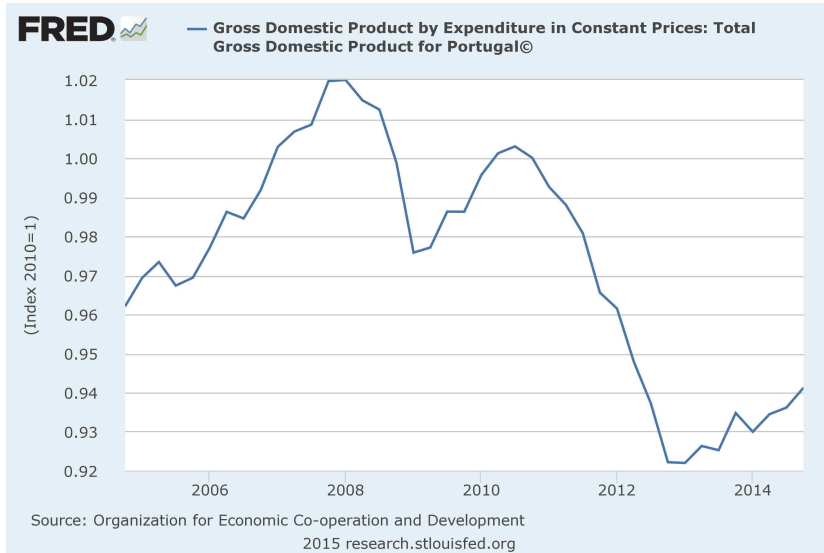
포르투갈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량적인 경기부양 규모는 0.8에 그쳤다.<sup>27)</sup>

---

26) Eurostat를 참조하라.

27) OECD(2009)를 참조하라.

<그림 I -26> 포르투갈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④ 스페인

스페인은 2008년 1.1%, 2009년 -3.6%, 2010년 0.0%, 2011년 -1.0%, 2012년 -2.6%, 2013년 -1.7% 2014년 1.4%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0년 미약한 0.0%의 플러스 성장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즉 더블딥을 경험하였다. 2013년 후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7%, 2사분기 0.0%, 3사분기 0.3%에 이른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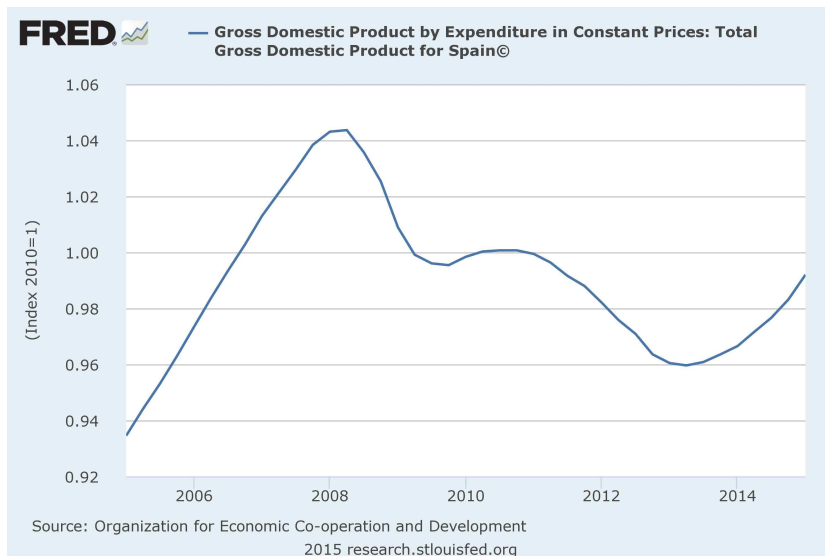
이번 위기에서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른 2013년 2사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위기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2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의 92.0%에 이르러 최고치에 비해 8.0%가 하락했다. 이런 하락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더블딥의 과정을 거쳤는데 분기별로 보면 1차 하락 때 6개 분기, 2차 하락 때 10개 분기 동안의 하락이 있었다. 1차 하락, 잠깐의 회복, 2차 하락까지 총 기간은 20개 분기, 즉 5년이다.

28) Eurostat를 참조하라.

2015년 1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에 이른 2008년 2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을 넘어서기는 커녕 4.9% 미달한 수준이며, 이번 위기에서 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른 2013년 2사분기의 총생산보다 불과 3.4% 증가한 규모다.

스페인인 2008년 국내총생산의 3.5%에 이르는 경기부양을 실시했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2008년부터 경기부양조치를 취했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1.9%, 조세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은 1.6%에 달했다. 초기 하락이 발생한 6개 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보다 4.6%가 하락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경기부양 규모가 비교적 컸고 신속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그런데 유럽이 긴축정책에 다시 돌입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림 I -27> 스페인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⑤ 이탈리아

29) OECD(2009)를 참조하라.

이탈리아는 2008년 -1.0%, 2009년 -5.5%, 2010년 1.7%, 2011년 0.6%, 2012년 -2.8%, 2013년 -1.7%, 2014년 -0.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탈리아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4%, 2사분기 0.3%, 3사분기 0.2%에 이르러 2015년 3개분기 동안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sup>30)</sup>

2014년 4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에 비해 90.4%로 9.6%가 하락하였다. 이는 더블딥의 결과인데 1차 하락에서는 5개분기에 걸쳐 7.6%가 하락했다. 그 이후 일정한 회복이 있다가 2011년 2사분기를 정점으로 2차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2014년 4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2011년 2사분기에 비해서는 5.5% 하락하였다. 이 2차 하락에서는 3개년 2개분기간 실질국내총생산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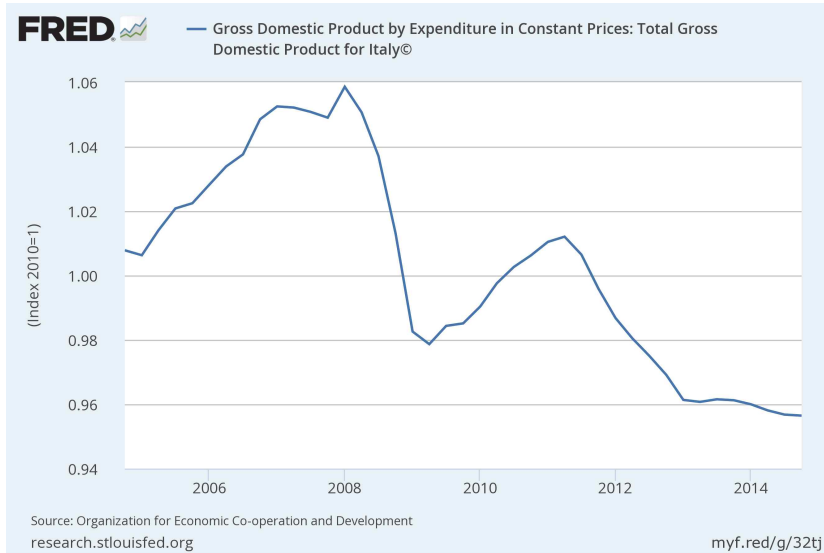
이탈리아는 뒤에서 보겠지만 위기 이전부터 정부부채 비중이 매우 높아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국내총생산 대비 0.3%에 그쳤고 그나마 증세규모가 0.3%에 달해 국내총생산 대비 경기부양규모가 0에 머물렀는데 재정지출이 2008년 국내총생산의 0.3%에 이르렀고, 조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0.3% 증세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재량적 경기부양 규모는 도합 0이었다. 이탈리아의 경기부양규모가 이렇게 적었던 데에는 정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약 120%로 매우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sup>31)</sup>

---

30) Eurostat를 참조하라.

31) OECD(2009)를 참조하라.

<그림 I -28> 이탈리아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⑥ 소결

유로존 위기국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그리스다. 위기 이후 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위기 이전 최고 실질국내총생산에 비해 27.4%가 하락해 1930년대 미국의 대불황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생산이 하락했다. 총생산 하락은 더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스 다음으로 심한 위기 상태에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더블딥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그 더블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 규모가 위기 이후 최저치다.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9.6%가 하락한 상태다.

포르투갈도 더블딥을 경험했으며 이번 위기에서 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르렀을 때는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9.6%가 하락했었고 2014년 4사분기 현재에도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7.7%가 하락한 상태다. 그리고 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른 2013년 1사분기에 비해서는 불과 2.1%밖에 증가하지 않

은 상황이다.

스페인도 더블딥을 경험했으며 위기 이후 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때는 위기 이전 최고치에서 8%가 하락했었다. 2014년 4사분기 현재에도 위기 이전 생산최고치에 비해 4.9%가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 2사분기에 비해 불과 3.4%밖에 증가하지 않은 상태다.

아일랜드는 그리스 다음으로 생산감소가 심각했던 나라이지만 현재 회복 양상은 유로존 위기국들 중에서 가장 양호하다. 아일랜드의 총생산이 위기 와중에 최저치에 도달했을 때는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12.0%가 하락했다. 더블딥을 경험한 상태이고 아직 위기 이전 최고치에는 미달한 상태다. 아일랜드는 초기 생산하락이 심각했는데 위기 초기부터 경기부양이 아니라 긴축을 단행한 때문이다(<표 I -2> 참조).

<표 I -2> ‘유로존 위기국들’의 2014년까지의 위기 및 성장

| 나라   | 최고치 시점 | 하락 기간(분기) | 하락 정도         | 최저치 시점 | 최고치 회복 기간 | 더블딥 | 최고치 대비 | 최저치 대비 |
|------|--------|-----------|---------------|--------|-----------|-----|--------|--------|
| 그리스  | 07.2/4 | 26        | 27.4%         | 13.4/4 | 미회복       | 무   | -26.4% | 1.3%   |
| 포르투갈 | 08.1/4 | 20(4/10)  | 9.6%(4.3/8.1) | 13.1/4 | 미회복       | 강   | -7.7%  | 2.1%   |
| 아일랜드 | 07.4/4 | 8         | 12.0%         | 09.4/4 | 미회복       | 약   | -3.5%  | 9.8%   |
| 스페인  | 08.2/4 | 20(6/10)  | 8%(4.6/4.1)   | 13.2/4 | 미회복       | 강   | -4.9%  | 3.4%   |
| 이탈리아 | 08.1/4 | 27(5/14)  | 9.6%(7.6/5.5) | 14.4/4 | 미회복       | 강   | -9.6%  | 0.0%   |

주 1) 하락기간 중 괄호 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는 1차, 2차 하락기간을 의미하고 하락정도 중 괄호 안의 숫자들 역시 1차, 2차 하락 때의 감소율을 의미한다.

2) 스페인은 2015년 1사분기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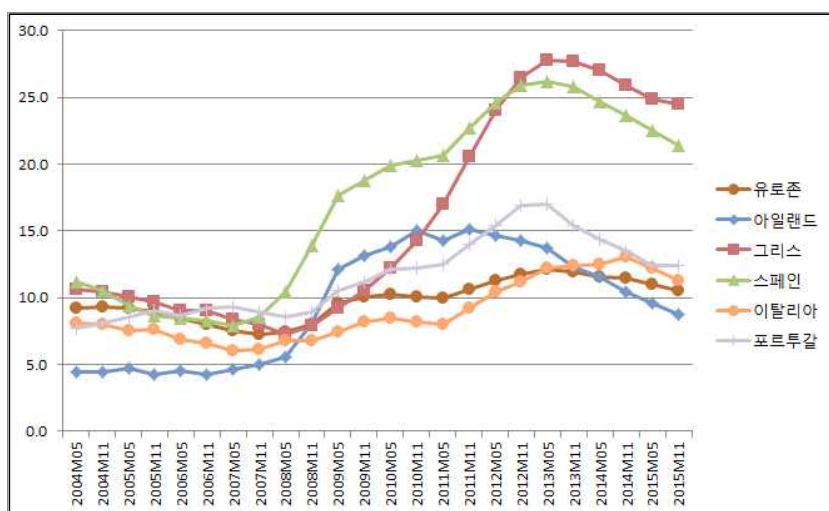
## (2) 실업률

이들 위기국들의 실업률은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위기 전에 9% 미만이었다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별히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25%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러다가 2012년 초부터 아일랜드가 가장 먼저 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가

가장 늦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실업률 하락 정도는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고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아직도 매우 높다. 최근 실업률을 보면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실업률이 유로존 평균보다 높다.

앞에서 재정위기를 당하지 않은 유로존 나라들의 실업률이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별로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들 위기국들의 실업률은 높긴 하지만 하락하고는 있다.

<그림 1 -29> 유로존 위기국들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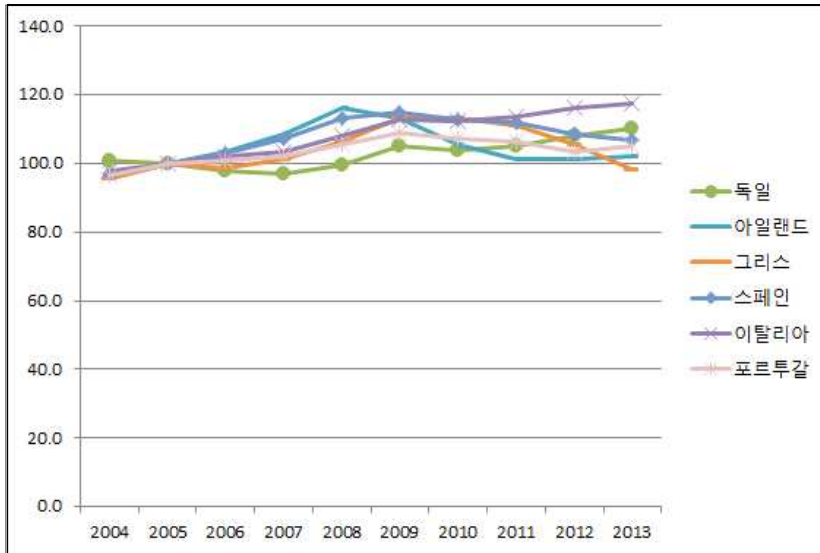


주) 각 년도 5월과 11월 실업률. 그리스의 2015년 11월(2015M11)) 실업률은 10월 실업률임

출처: Eurostat

한편 위기국들의 임금지수는 위기 전에 독일에 비해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리스는 국가부채 위기 직전에 임금상승이 가팔랐다. 이들 위기국들의 임금상승은 유로화 도입 이후 이들 나라로 유럽 중심부 자본이 많이 이동한 결과다.

<그림 I -30> 독일과 위기국의 명목 단위노동비용



출처: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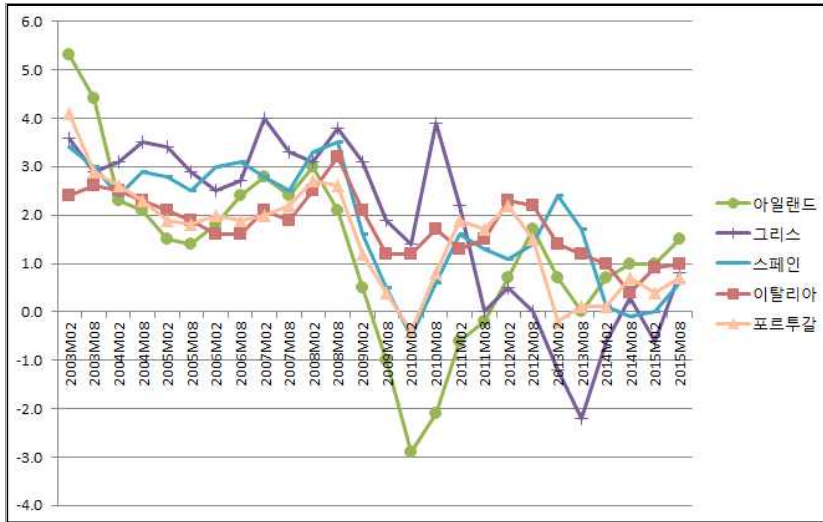
### (3) 물가상승률

위기국들은 디플레이션 징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실제로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스페인도 9월의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 도달했다. 아일랜드는 0.3%, 이탈리아는 0.4%로서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물가를 낮추는 요인 중에는 유가하락이 있어서 변동성이 큰 유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 품목 물가상승률보다는 약간 양호한 상태다.

한편 앞서 보았다시피 위기 이전 유로화 도입 효과로 유럽중심부 자본들이 위기국들로 많이 진출했고 이는 이들 주변부 나라들에서 활발한 성장과 임금인상을 낳았다. 이와 더불어 낮아진 이자율로 인해 주택거품이 야기되었다. 당연히도 위기 이후 주택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는데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 심했다(<그림 I -33> 참조).

<그림 I -31> 위기국의 근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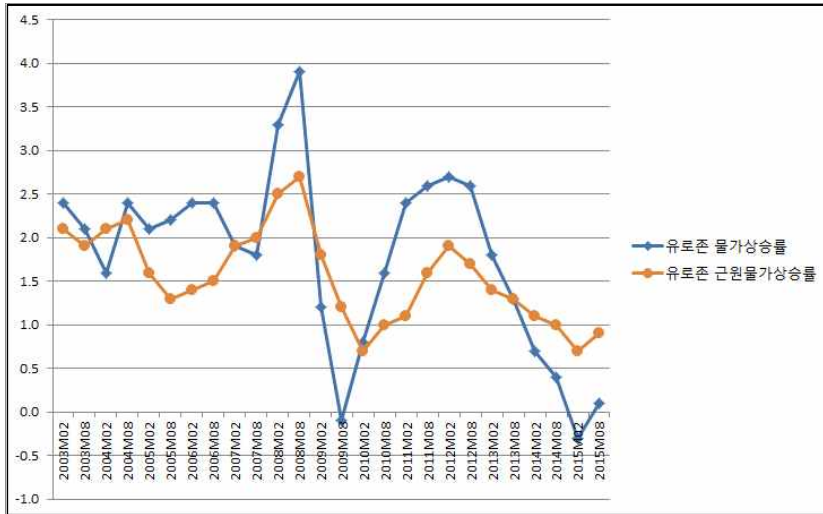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위기국들 중에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가 지금은 빠져나온 상태다. 아일랜드는 약 2년간, 그리스는 약 3년간, 스페인은 약 1년간 디플레 상태에 있었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이전 가장 먼저,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고 난 뒤, 스페인이 그 다음에 디플레 상태에 돌입했다.

현재 아일랜드를 제외한 위기국들의 물가상승률이 1% 이하다.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 여름철 관광성수기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왔는데, 관광성수기가 지나고 새로운 구제금융으로 인한 긴축정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가격변동이 심한 원유,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의 변동은 헤드라인 물가지수에 비해 변동폭이 적다.

<그림 1 -32> 유로존의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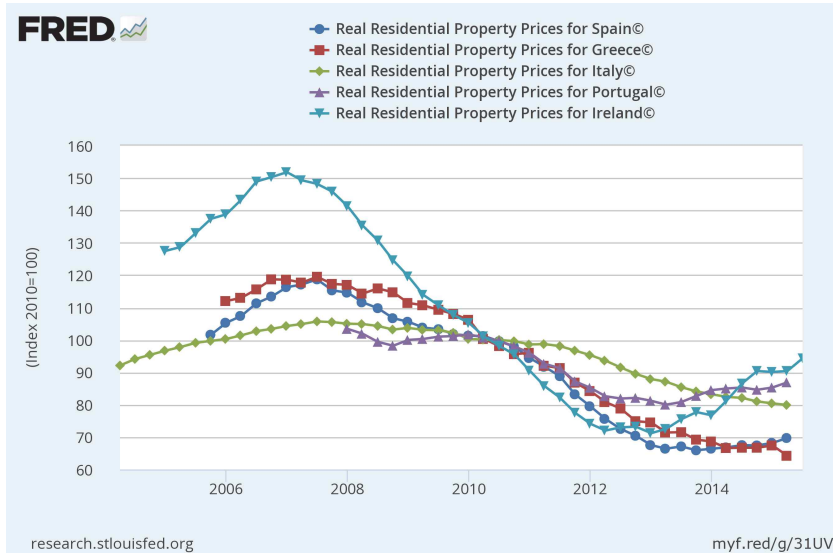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 (4) 주택가격

위기국들의 실질주택가격지수를 보면 아일랜드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심각했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그 다음으로 심했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실질 주택가격은 일정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그리스와 스페인은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아주 미미하게 회복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I -33> 유로존 위기국들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



주) 역삼각형: 아일랜드, 사각형: 그리스, 원: 스페인, 다이아몬드: 이탈리아, 삼각형: 포르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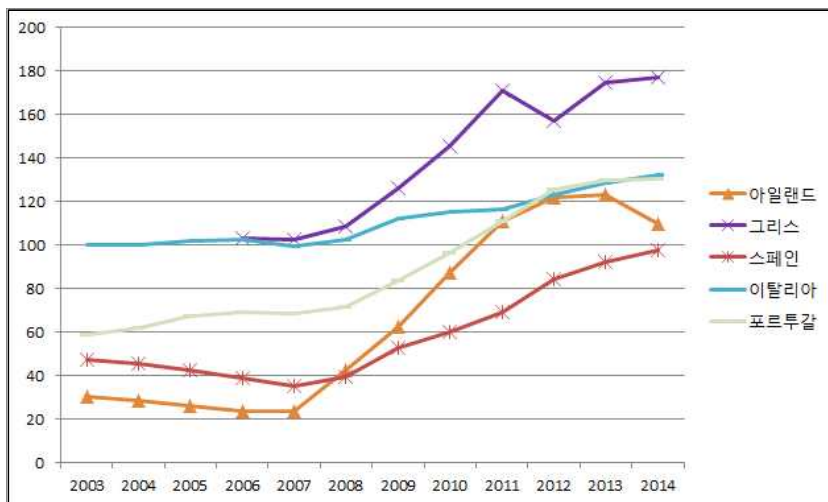
## (5) 정부부채

위기 이전부터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 썩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위기 이전에도 이 비율이 100% 내외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아일랜드는 위기 이전 20-30%대, 스페인도 30%대의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었고 포르투갈도 60%대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기 이후 이들 각국들의 정부부채 비율들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아일랜드는 은행구제 때문에 정부부채 비율이 거의 수직 상승했고, 스페인도 아일랜드처럼 심하지는 않아도 은행구제가 정부부채 비율 악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스는 민간 보유 그리스 국채 원금의 상당부분을 탕감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이 비율이 낮아졌으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인해 다시 정부부채 비율이 180%에 근접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위기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위기 이전에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림 I -34> 유로존 위기국들의 정부부채 비율  
(대 국내총생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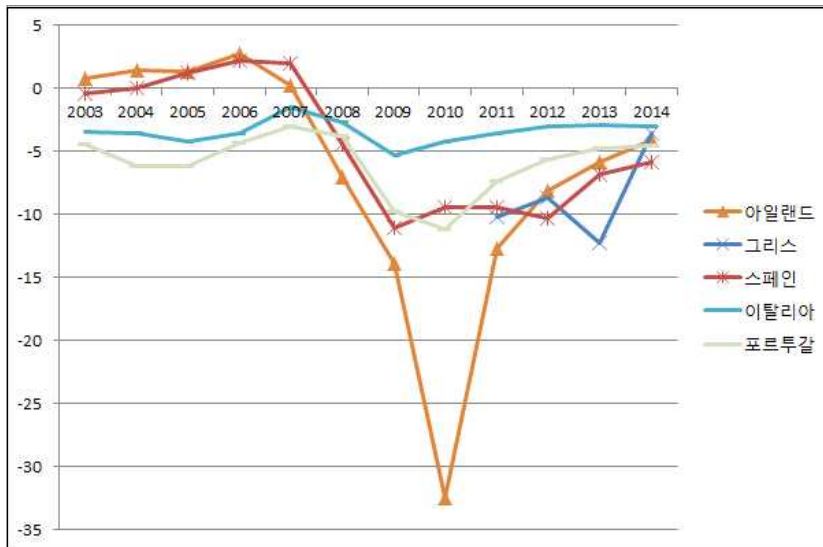


주) 그리스의 2011-2014년 통계는 Eurostat, 2006-2010년 통계는 IMF(2015), 『Fiscal Monitor(October 2015): The Commodities Roller Coaster A Fiscal Framework for Uncertain Times』(<ht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5/02/pdf/fm1502.pdf>)에서 구했고, 다른 나라 통계 출처는 Eurostat이다.

<그림 I -35>는 위기국들의 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은행 구제 비용 및 1회성 지출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제외하면 2010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11%, 2011년 -8.7%, 2012년 -8.0%, 2013년 -6.1%, 2014년 -4.2%에 이른다. 즉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덜 심각한 적자라는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도 은행구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비용이 2010년 국내총생산의 0.04%, 2011년 0.5%, 2012년 3.7%, 2013년 0.5%에 이르고, 2014년에는 은행구제 비용 0.1%를 포함하여 일회성 비용이 0.5% 포함되어 있다.<sup>32)</sup>

<그림 I -35> 위기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



출처: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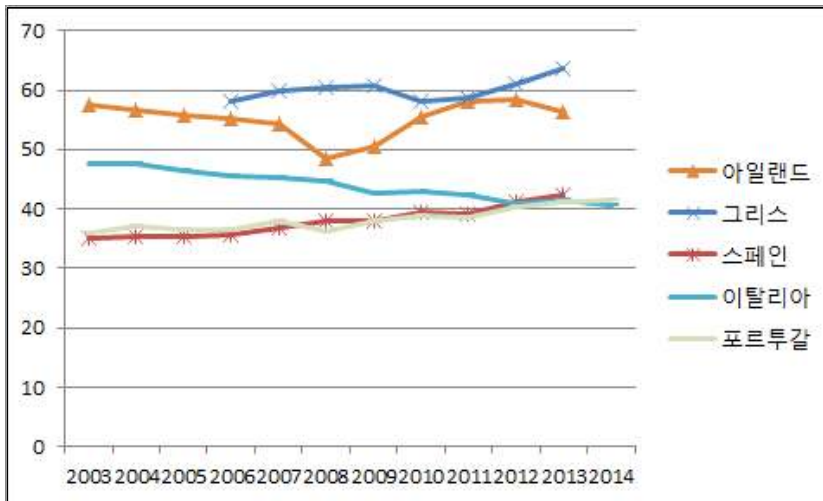
## (6) 영업잉여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영업잉여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영업잉여 비율이 가장 높고 포르투갈의 영업잉여 비율이 가장 낮다.

위기국 자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영업잉여는 위기 초기에 약간 하락했으나 그 이후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 이전수준을 능가했거나 그에 버금가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는 위기 이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32) IMF(2015)의 41쪽과 51쪽을 참조하라.

<그림 I -36> 유로존 위기국들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비율  
(대 부가가치, %)



출처: Eurostat

### 3) 비 유로존 복구

#### (1) 성장

##### ① 스웨덴

스웨덴 경제는 2008년 -0.6%, 2009년 -5.2%, 2010년 6.0%, 2011년 2.7%, 2012년 -0.3%, 2013년 1.2%, 2014년 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스웨덴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8%, 2사분기 1.0%, 3사분기 0.8%로 비교적 활발한 성장을 하고 있다.<sup>33)</sup>

이번 위기에서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로 내려간 2009년 3사분기에는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 총생산이 92.8%에 이

33) Eurostat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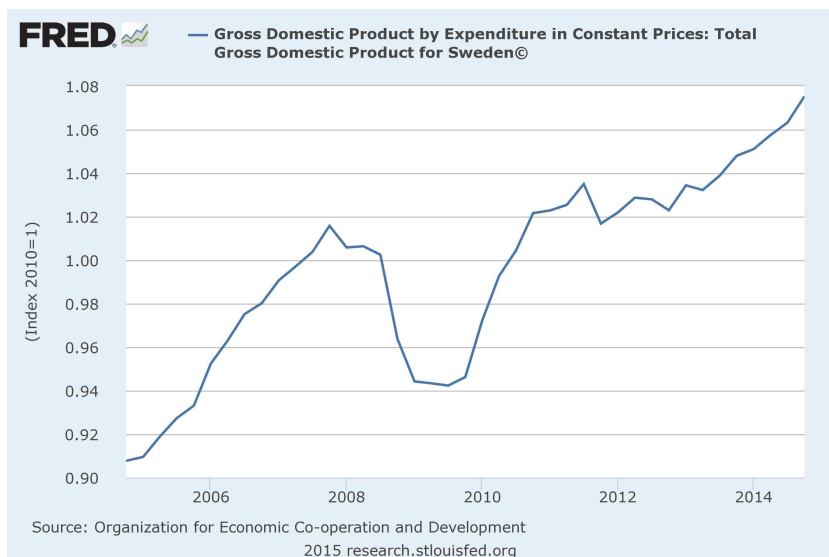
르러 최고치에 비해 7.2%가 하락하였다. 7개 분기 동안 6개 분기에 총생산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위기 이후 3년이 지난 2010년 4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2014년 4사분기 현재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5.9% 증가했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3사분기에 비해서는 14.1%가 증가했다.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 규모의 2.8%였고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부양이 0.9%포인트, 감세를 통한 부양이 1.8%포인트였다. 2009년과 2010년에 비교적 고르게 집행되었다.<sup>34)</sup>

스웨덴의 경우 과도한 가계부채와 주택거품에 대한 우려로 2010년 금리 인상이 있었다.<sup>35)</sup>

<그림 I -37> 스웨덴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34) OECD(2009)를 참조하라.

35) Richard Milne(2014, May 7), "Riksbank raises concern on household debt", Financial times(<http://www.ft.com/intl/cms/s/0/670e9564-d5ee-11e3-a239-00144feabdc0.html#axzz3HUx6Fzde>)를 참조하라.

## ②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08년 0.4%, 2009년 -1.6%, 2010년 0.6%, 2011년 1.0%, 2012년 2.7%, 2013년 1.0%, 2014년 2.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노르웨이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2%, 2사분기 0.0%, 3사분기 1.8%에 이른다.<sup>36)</sup>

이번 위기에서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10년 3사분기에는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의 95.7%를 기록해 최고치에 비해 4.3%가 하락하였다. 이 11개 분기 동안 6개 분기에 총생산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위기 이후 4년 1개 분기가 지난 2012년 1사분기에 이르러서야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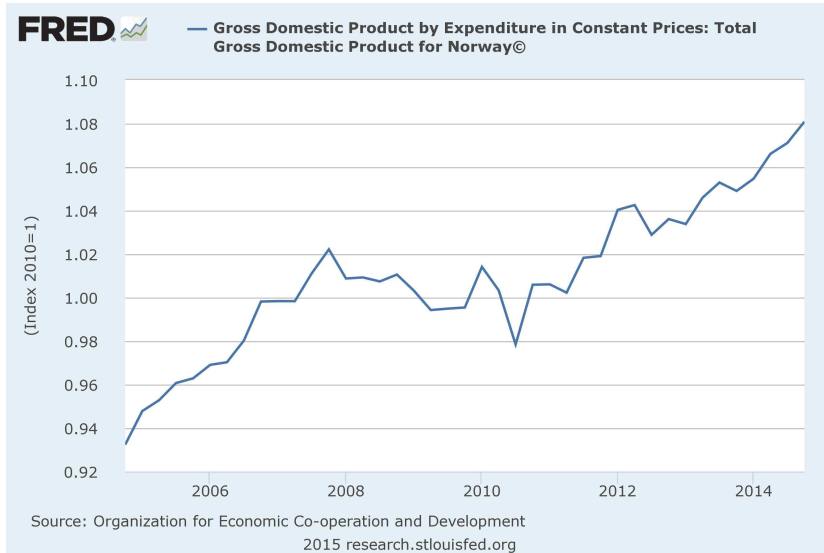
2014년 4사분기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5.7%가 증가했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0.5%가 증가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경제위기 정도도 덜 심각했고, 회복세도 꽤 양호하다고 해야겠다. 경기부양 규모 0.8에 그치고 있다.<sup>37)</sup>

---

36) Eurostat를 참조하라.

37) OECD(2009)를 참조하라.

<그림 I -38> 노르웨이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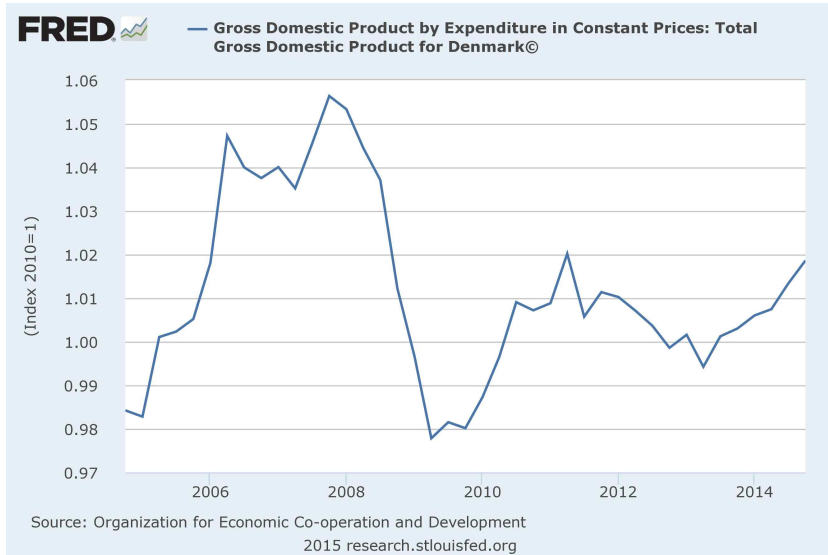


출처: FRED

### ③ 덴마크

‘유연안정성’(사회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정책)으로 유명한 덴마크는 비유로존이긴 하지만 덴마크 통화 크로네는 1999년 1월 1일 이래 유로에 고정되어 있어서 유로 사용국가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1유로 당 약 7.46크로네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2.25%씩 변동이 가능하나 그 실제 환율변동폭은 이보다 더 적은 0.5%다. 그래서 덴마크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덴마크는 1982년부터 1999년까지는 독일 마르크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림 I -39> 덴마크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위기 이후 덴마크의 성장률은 2008년 -0.7%, 2009년 -5.1%, 2010년 1.6%, 2011년 1.2%, 2012년 -0.1%, 2013년 -0.2%, 2014년 1.3%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덴마크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6%, 2사분기 0.2%, 3사분기 -0.4%에 이른다.<sup>38)</sup>

이번 위기에서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의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의 총생산의 92.6%를 기록해 최고치에서 7.4%가 하락했다.<sup>39)</sup> 그리고 6개 분기 동안 하락했다. 그 이후 잠깐동안 회복되다가 2011년 2사분기 이후 6개 분기 중 5개 분기가 성장률이 하락하는 더블딥을 경험하였다. 덴마크 경제는 2013년 2사분기 이후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세는 그리 강하지 않다.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기는커녕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여전히 3.6% 하락해 있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38) Eurostat를 참조하라.

39) 이것은 FRED에 따른 것이고,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통계가 이보다 더 좋게 나타나고 있어 이 보다는 하락률이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

4.2% 증가한 상태다.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 규모의 2.5%(1.9, 0.7)였고 3분의 1이 2009년에 3분의 2가 2010년에 집행되어 경기부양이 뒤늦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sup>40)</sup>

덴마크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부진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sup>41)</sup>

#### ④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2008년 1.5%, 2009년 -4.7%, 2010년 -3.6%, 2011년 2.0%, 2012년 1.2%, 2013년 3.9%, 2014년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아이슬란드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1%, 2사분기 3.7%, 3사분기 0.7%에 이른다.<sup>42)</sup>

이번 위기에서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10년 1사분기에는 위기 이전 실질국내총생산이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의 88.3%를 기록해 최고치에 비해 11.7%가 하락하였다. 이 9개 분기 동안 6개 분기에 총생산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위기 이후 7년이 지난 2014년 4사분기에도 위기 이전 최고 생산 규모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4년 4사분기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아직 0.2%가 하락한 상태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3.1%가 증가했다. 위기 정도는 유로존 위기국들과 비교할 때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위기 다음으로 심각한 위기였으나 회복속도는 유로존 위기국들에 비해 양호하다. 회복과정에서 미약한 경기후퇴가 두 차례 나타나긴 했다. 그러나 2014년에 유로존 위기국들이 위기 이전 최고 생산규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 아이슬란드는 위기 이전 최고 생산규모를 2014년에 거의 회복했고,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고

---

40) OECD(2009)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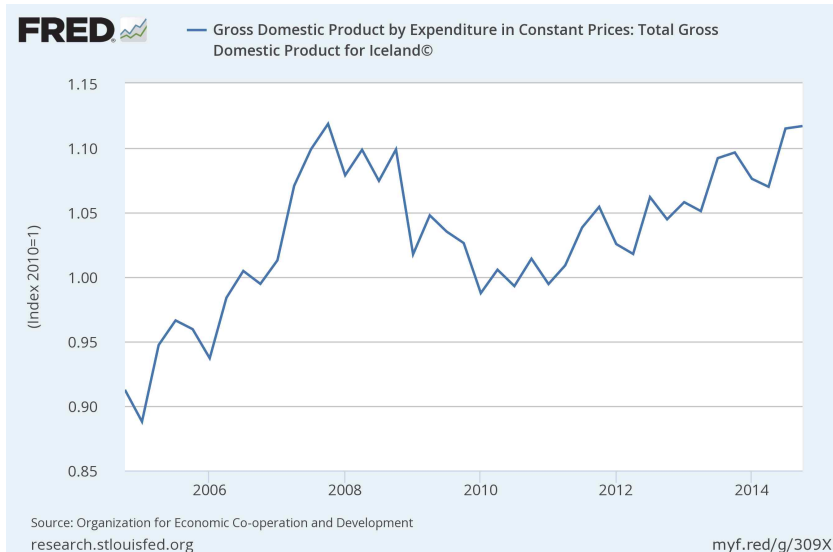
41) Paul Krugman(2013), "Melancholy Danes". The Conscience of a Liberal([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를 참조하라.

42) Eurostat를 참조하라.

있지만 2015년 중에는 확실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 게 아니라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2008년 국내총생산 대비 9.4%에 해당하는 긴축을 단행하였다.<sup>43)</sup>

<그림 I -40> 아이슬란드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⑤ 소결

스웨덴은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로 내려간 2009년 3사분기에는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 총생산이 92.8%에 이르러 최고치에 비해 7.2%가 하락하였고, 2014년 4사분기 현재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5.9% 증가했고,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3사분기에 비해서는 14.1%가 증가했다.

노르웨이는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10년 3사분기에는 2007년 4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의 95.7%를 기록해 최고치에 비해 4.3%가

43) OECD(2009)를 참조하라.

하락하였고, 2014년 4사분기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5.7%가 증가했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0.5%가 증가했다.

덴마크는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의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의 총생산의 92.6%를 기록해 최고치에서 7.4%가 하락했고, 2014년 4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기는커녕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여전히 3.6% 하락해 있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4.2% 증가한 상태다.

아이슬란드는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10년 1사분기에는 위기 이전 실질국내총생산이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의 88.3%를 기록해 최고치에 비해 11.7%가 하락하였고, 2014년 4사분기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4사분기에 비해서는 아직 0.2%가 하락한 상태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3.1%가 증가했다.

결국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번 위기에서 비슷한 정도로 총생산이 하락했고, 노르웨이는 하락정도가 덜했고, 노르웨이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위기가 심각했다. 회복정도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전 최고 총생산에 비해 비슷한 정도로 증가했고, 덴마크는 이에 현저히 못 미쳐 아직도 위기 이전 최고치의 총생산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아이슬란드는 덴마크보다 위기가 심각했으나 회복속도는 덴마크보다 훨씬 빨라 위기 이전 최고치를 거의 회복한 상태다(<표 I -3> 참조).

<표 I -3 > ‘비유로존 복구’의 2014년까지의 위기 및 성장 요약

| 나라    | 최고치 시점 | 하락 기간(분기) | 하락 정도 | 최저치 시점 | 최고치 회복 기간 | 더블딥 | 최고치 대비 | 최저치 대비 |
|-------|--------|-----------|-------|--------|-----------|-----|--------|--------|
| 스웨덴   | 07.4/4 | 7(6)      | 7.2%  | 09.3/4 | 12        | 약   | 5.9%   | 14.1%  |
| 노르웨이  | 07.4/4 | 11(6)     | 4.3%  | 10.3/4 | 17        | 무   | 5.7%   | 10.5%  |
| 덴마크   | 07.4/4 | 6         | 7.4%  | 09.2/4 | 미회복       | 약   | -3.6%  | 4.2%   |
| 아이슬란드 | 07.4/4 | 9(6)      | 11.7% | 10.1/4 | 미회복       | 약   | -0.2%  | 1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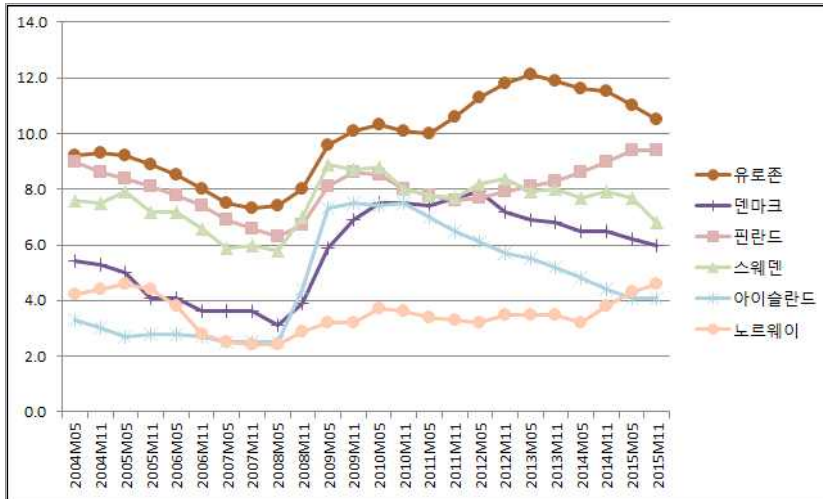
## (2) 실업률

실업률의 경우 위기 이전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비슷한 정도로 낮은 상태였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들 나라보다는 2-3%포인트 정도 높은 상태였다. 그런데 위기를 경과하면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실업률이 폭증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들 나라의 주택거품이 붕괴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동안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실업률이 스웨덴, 핀란드의 실업률과 비슷해 졌고 노르웨이 실업률보다 3-4%포인트 높은 상태였다. 노르웨이 실업률은 위기를 경과하면서도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그림 I-41> 참조).

한편 스웨덴과 덴마크를 한편으로 하고 아이슬란드, 핀란드의 실업률 행보는 이후 현저히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슬란드는 현저히 개선되고 있고, 핀란드는 악화하고 있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미미한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덴마크의 실업률이 위기 초기에 크게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덴마크의 개선이 스웨덴보다는 못하다고 해야겠다). 아이슬란드의 실업률 개선은 독자통화를 가지고 있어서 위기 초기에 평가절하가 대폭 이루어졌고, 자본통제를 실시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핀란드는 유로존에 속해 있어서 평가절하를 통한 역내 수출증대가 어렵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표기업 노키아의 부진과 주력산업인 목재 및 종이산업의 부진이 실업률 악화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아이슬란드에는 현저히 못미치지만 위기 초기 스웨덴 통화(krona)의 평가절하가 꽤 진행되었고, 노르웨이 통화(krone)도 위기 초기에 약간의 평가절하가 진행되었다. 덴마크 통화(krone)는 위기 초기에 평가절하가 진행되지 않았다. 덴마크는 유로존에 속하지 않지만 유로화에 페그되어 있어 환율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이런 사정들이 이들 국가의 실업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2014년 이후에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약세통화가 되었다(<그림 I-42> 참조). 미국 경제 등에 비한 유럽 경제의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그림 I -41> 비유로존 복구 4국과 핀란드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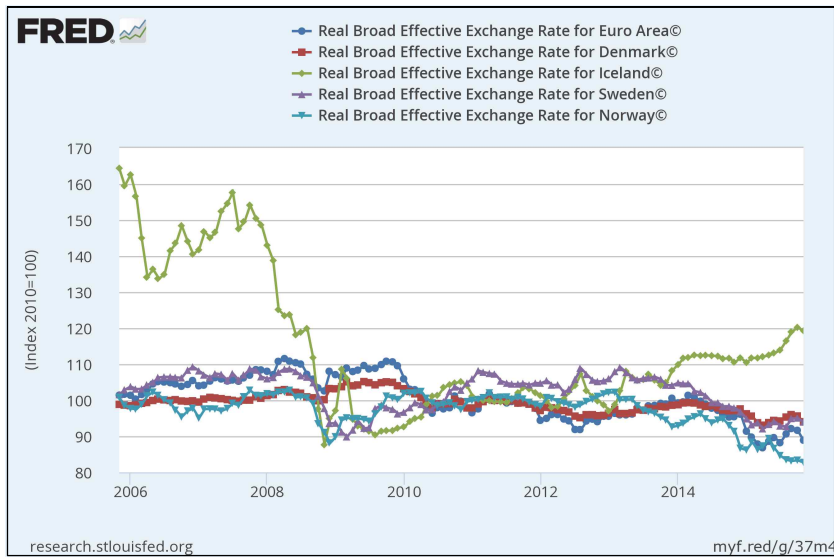


주) 각 년도 5월과 11월의 통계치. 단, 노르웨이의 2015년 11월 실업률은 10월  
달 실업률임

출처: Eurostat

44) Paul Krugman(2010), "The Icelandic Post-crisis Miracle", The Conscience of a Liberal([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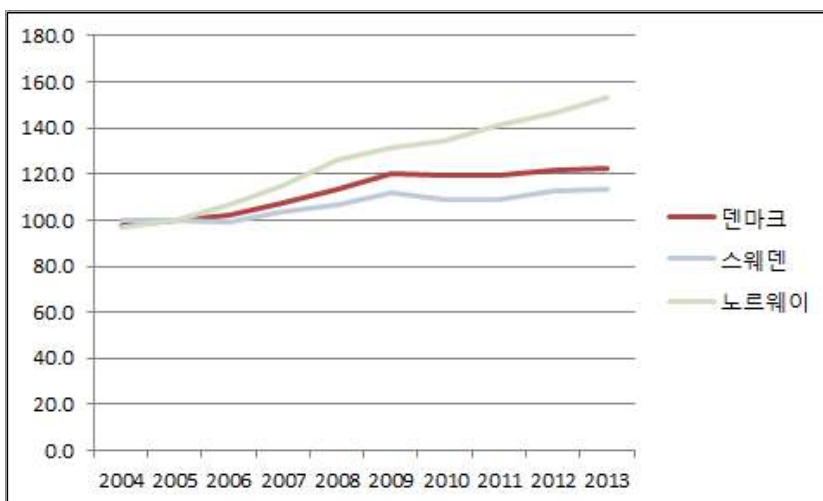
<그림 I -42> 아이슬란드와 유로의 실질 실효환율



주) 원: 유로존, 사각형: 덴마크, 다이아몬드: 아이슬란드, 삼각형: 스웨덴, 역삼각형: 노르웨이  
출처: FRED

한편 노르웨이는 단위노동비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이에 못 미친다.

<그림 I -43> 북구 3국의 명목 단위노동비용(2005=100)



출처: Eurostat

### (3) 물가상승률

덴마크와 스웨덴이 한 때 물가상승률이 0.5% 이하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근처에까지 갔으나 지금은 벗어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이 1%를 갓 벗어난 상태다.

<그림 I -44> 비유로존 복구 나라들의 근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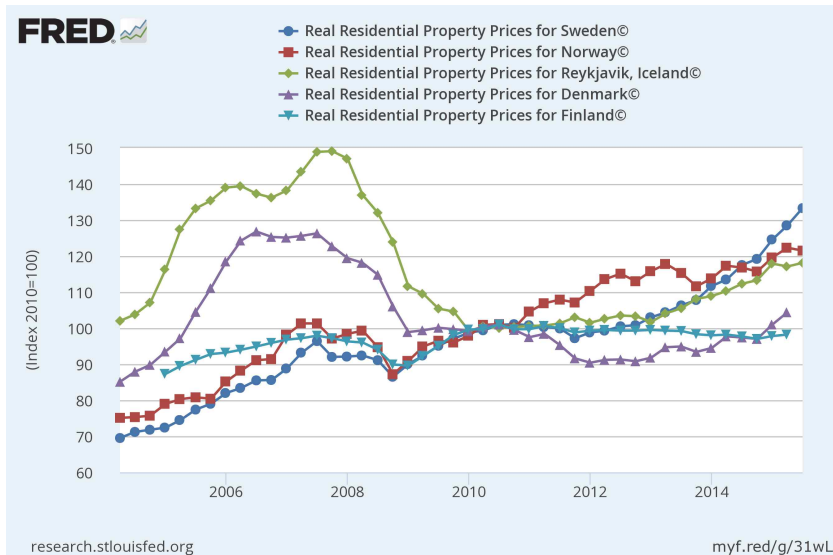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 (4) 주택가격

아이슬란드의 주택거품 붕괴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은 덴마크이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는 거품 붕괴가 없었고 최근 거품이 약간 형성되고 있는 중이고 핀란드는 별 변화가 없다.

<그림 I -45>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과 핀란드의 주택가격지수  
(2010=100)



주) 원: 스웨덴 실질 주택가격, 사각형: 노르웨이, 다이아몬드: 노르웨이 실질 주택가격, 삼각형: 덴마크 실질 주택가격, 역삼각형: 핀란드 실질 주택가격  
출처: F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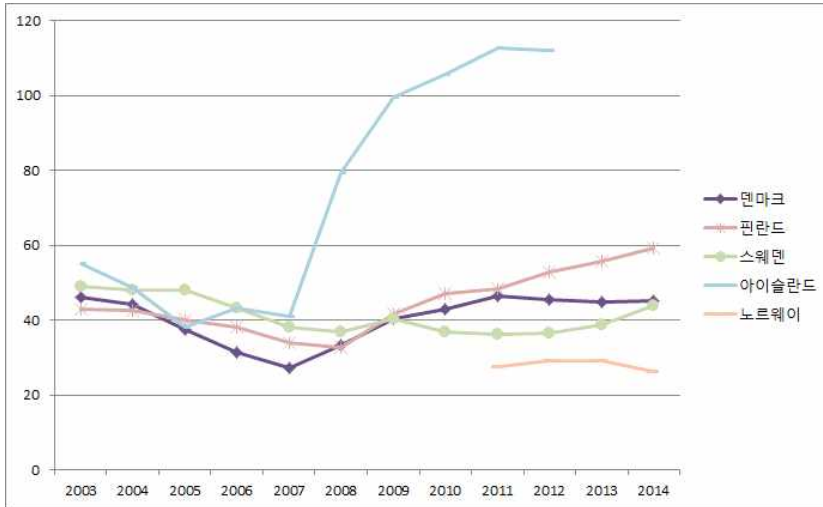
## (5) 정부부채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금융위기를 겪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다(아이슬란드도 위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낮았다). 특히 노르웨이가 그렇다. 스웨덴의 경우 최근 들어 정부부채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경기 부양정책이 일정하게 취해졌기 때문이다.<sup>45)</sup> 유로존에 속하는, 비교대상의 핀란드의 경우 지속적인 국내총생산의 축소로 인해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45) Richard Milne(2014, May 7), "Riksbank raises concern on household debt", Financial times(<http://www.ft.com/intl/cms/s/0/670e9564-d5ee-11e3-a239-00144feabdc0.html#axzz3HUx6Fzde>)를 참조하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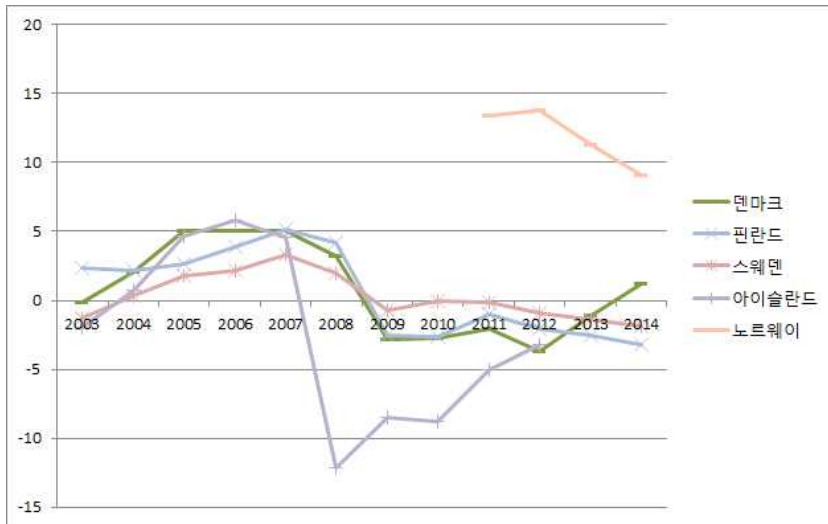
<그림 I -46> 핀란드와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의 정부부채 비율  
(대 국내총생산, %)



출처: Eurostat, FRED

재정수지 비율의 경우 노르웨이는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금융위기를 겪은 아이슬란드는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다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덴마크는 2014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림 I -47> 핀란드와 비유로존 북구 나라들의 재정수지 비율  
(대 국내총생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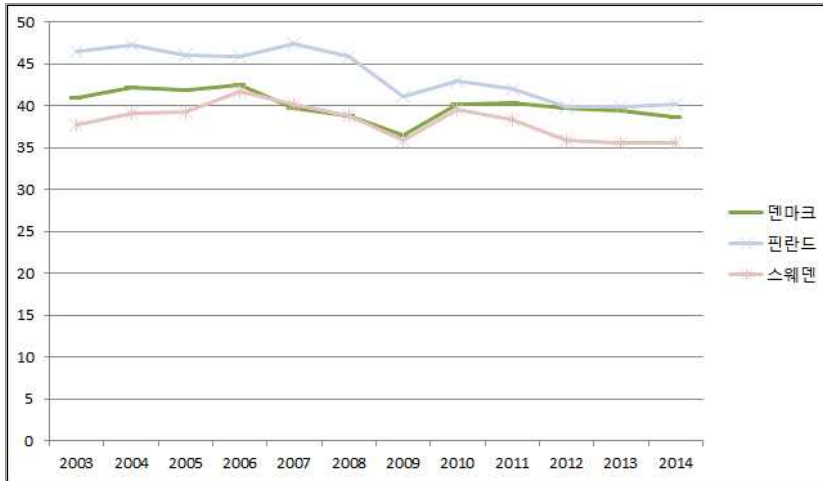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FRED

## (6) 영업잉여

노르웨이를 제외한 스웨덴과 덴마크의 영업잉여 비율은 30% 내외로 매우 낮다. 2009년에 약간 하락하였으나 이내 예전수준으로 회복했다. 스웨덴은 회복정도가 덴마크보다는 덜하다. 노르웨이는 두 나라에 비해 영업잉여 비율이 40%대로 매우 높다. 노르웨이의 원유수입에 기초한 막대한 대외순자산에서 오는 이익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림 I -48> 핀란드와 비유로존 복구국가들의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비율

(단위: 대 부가가치, %)



출처: Eurostat

#### 4) 비유로존 서구

##### (1) 위기 및 회복 양상

###### ① 영국

영국경제는 2008년 -0.5%, 2009년 -4.2%, 2010년 1.5%, 2011년 2.0%, 2012년 1.2%, 2013년 2.2%, 2014년 2.9% 성장을 했다. 한편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영국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4%, 2사분기 0.7%, 3사분기 0.5%에 이른다.<sup>46)</sup>

더블딤을 겪지는 않았지만 초기 회복이 순탄치 않았는데 최근 회복세가 나아졌다. 2011년 4/4분기부터 2012년 4/4분기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과 플러스 성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3개 분기나 했다. 이

46) Eurostat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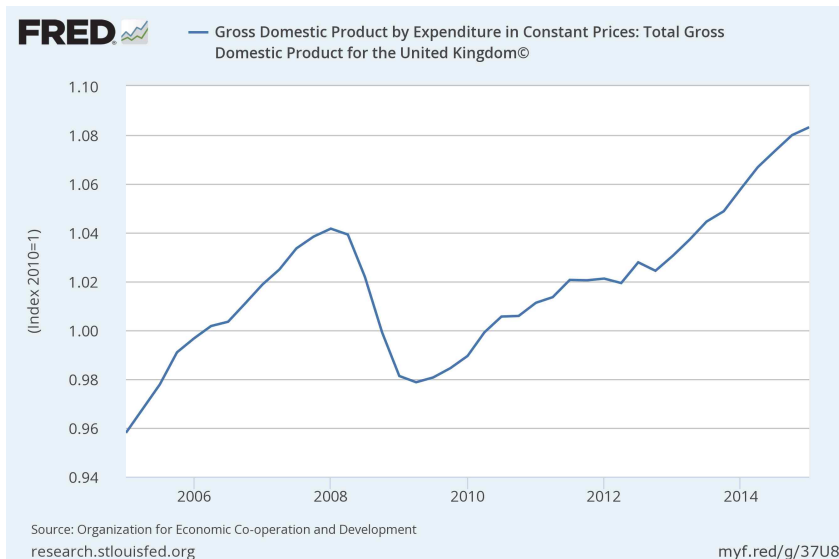
는 캐머런 보수당 정부의 긴축정책의 시행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이번 위기에서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내려간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의 그것에 비해 6%가 하락했고 총생산이 하락한 기간은 5개분기다. 2013년 3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무려 22개 분기, 즉 5년 2개 분기가 소요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사분기의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의 총생산에 비해 4% 증가했고,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의 총생산에 비해서는 10.7% 증가했다.

영국의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1.4%에 그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감세를 통한 방법이었다. 부양은 주로 2009년에 실시되었고 보수당 캐머런 정부가 들어선 2010년에는 미세하나마 긴축정책이 시행이 되었다.<sup>47)</sup>

<그림 I -49> 영국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47) OECD(2009)를 참조하라.

출처: FRED

## ② 스위스

스위스는 2008년 2.3%, 2009년 -2.1%, 2010년 3.0%, 2011년 1.8%, 2012년 1.1%, 2013년 1.8%, 2014년 1.9%의 성장을 하였다. 그래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스위스의 2015년 분기별 성장률은 1사분기 -0.3%, 2사분기 0.2%, 3사분기 0.0%에 이른다. 2015년 들어서 성장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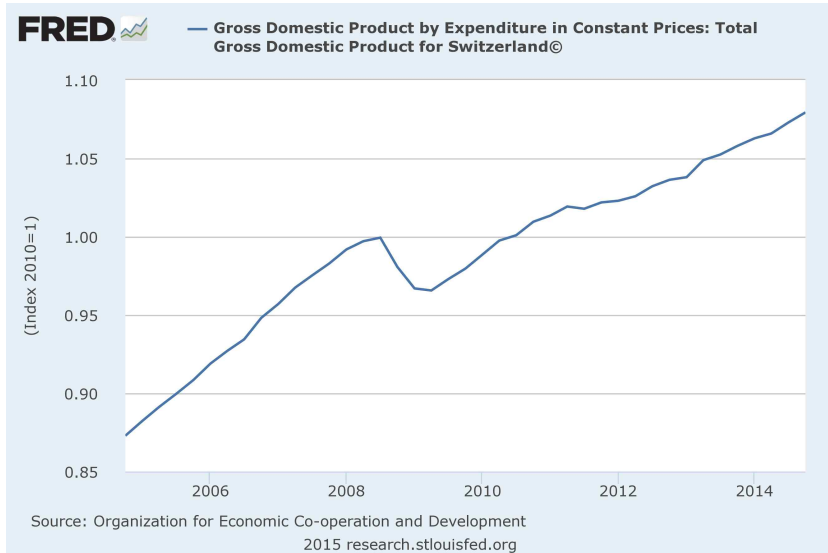
위기 와중에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른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3사분기의 총생산에서 3.4% 하락했다. 그리고 총생산이 하락한 기간은 3개 분기 동안이다. 스위스 국내총생산 규모는 위기 이후 2년이 지난 2010년 3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4년 4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3사분기에 비해서 8.0%가 증가한 것이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1.8% 증가한 것이다.

유로존에 속한 오스트리아보다는 총생산 감소도 더 적고 (-3.4% 대 -5.7%), 총생산 감소기간과 이전 최고치 회복기간도 더 짧았고, 회복세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부양 규모 2008년 국내총생산의 0.5%에 그치고 있다.<sup>48)</sup>

---

48) OECD(2009)를 참조하라.

<그림 I -50> 스위스의 실질국내총생산지수(2010=1.00)



출처: FRED

### ③ 비유로존 서구 요약

영국은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를 내려간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1사분기의 그것에 비해 6%가 하락했고, 2014년 4사분기의 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4% 증가했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0.7% 증가했다.

스위스는 실질국내총생산이 최저치에 이른 2009년 2사분기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3사분기의 총생산에서 3.4% 하락했고, 위기 이후 2년이 지난 2010년 3사분기에 위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4년 4사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3사분기에 비해서 8.0%가 증가한 것이고, 최저치에 비해서는 11.8% 증가한 것이다(<표 I -4> 참조).

<표 I -4 > '비유로존 서구'의 2014년까지의 위기 및 성장 요약

| 나라  | 최고치 시점 | 하락 기간(분기) | 하락 정도 | 최저치 시점 | 최고치 회복 기간 | 더블딥 | 최고치 대비 | 최저치 대비 |
|-----|--------|-----------|-------|--------|-----------|-----|--------|--------|
| 영국  | 08.1/4 | 5         | 6.0%  | 09.2/4 | 22        | 무   | 4.0%   | 10.7%  |
| 스위스 | 08.1/4 | 3         | 3.4%  | 09.2/4 | 8         | 무   | 8.0%   | 1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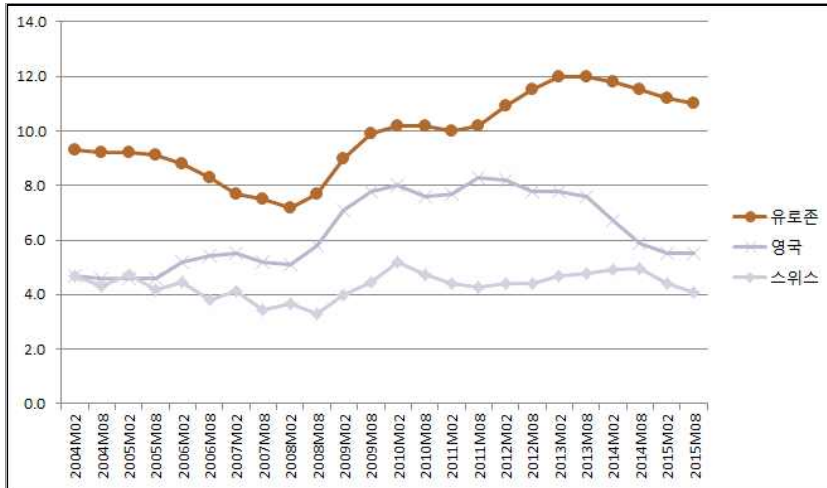
주) 영국은 2015년 1/4분기까지

## (2) 실업률

영국의 실업률은 다른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다소 낮고 스위스는 많이 낮다. 영국은 위기 발생 이후 실업률이 약 3%포인트가 상승했다가 최근년 약 2%포인트가 하락해 2015년 6월 현재 5.5%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는 위기 이전 실업률이 4% 이하에 머무르다가 위기가 심했을 때 5%를 조금 넘어갔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4% 초반대로 내려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양호한 상태다.

한편 영국의 경우 최근 들어 유로존에 비해서 실업률 하락이 더 크다. 이는 긴축중단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말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긴축이 회복을 하던 경제를 주춤거리게 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고 보수당 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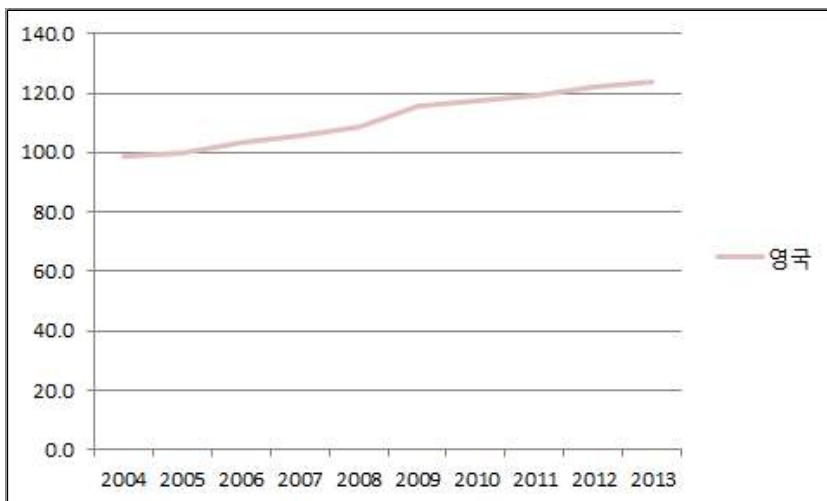
<그림 I -51>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분기 실업률



주 ) 각 년도 2월과 8월의 통계치. 단, 영국과 스위스의 2015년 8월 실업률은 6월달 실업률임

출처: Eurostat, ONS(<http://www.ons.gov.uk/ons/index.html>), Swiss Statistics (<http://www.bfs.admin.ch/bfs/portal/en/index/news.html>)

<그림 I -52> 영국의 명목 단위노동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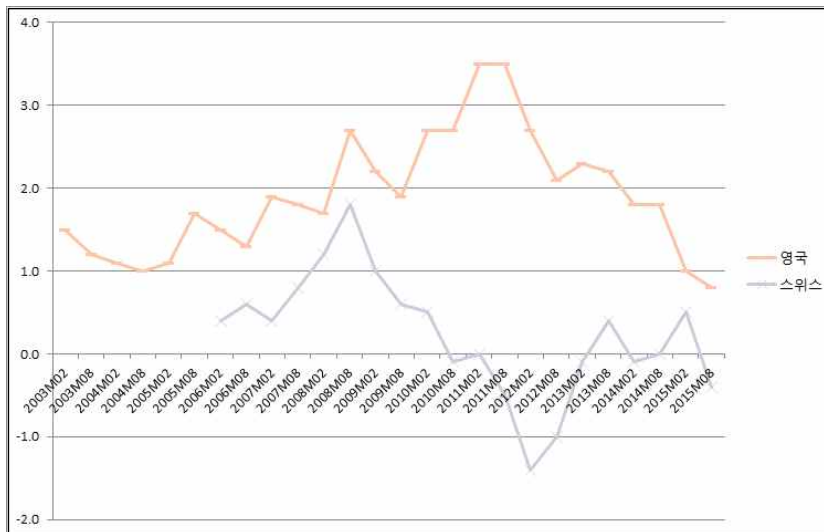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 (3) 물가상승률

영국은 2010년 10월 대규모 긴축정책을 발표해 실행에 들어갔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하반기에 3.7%까지 상승하였다. 2015년 들어서는 1% 이하로까지 내려왔다.

스위스는 이번 위기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고, 지금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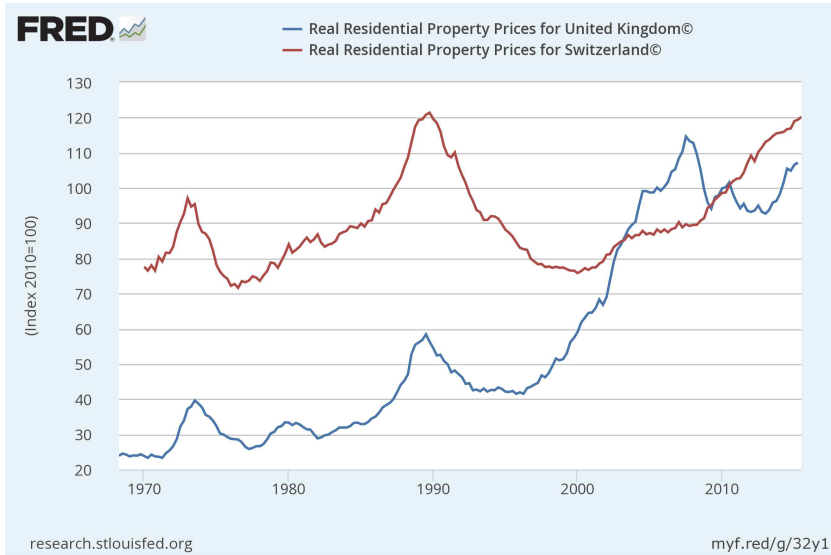
<그림 I -53>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근원물가상승률



출처: Eurostat

영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이번 위기 직전 약 10년 사이에 거의 3배가 상승했다가 위기 이후 약간 하락하였다. 스위스의 실질 주택가격은 변화가 크지 않고 2000년대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는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림 I -54>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실질 주택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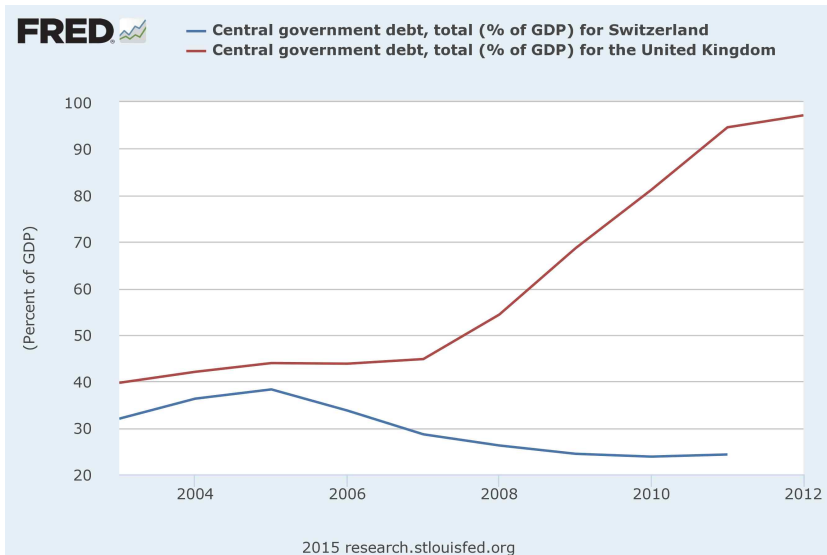


출처: FRED

#### (4) 정부부채 비율

영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했다. 위기 이전 40%대에서 90% 수준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투입 때문이다. 스위스는 정부부채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역시 유럽 다른 나라들과 궤적이 다르다.

<그림 I -55>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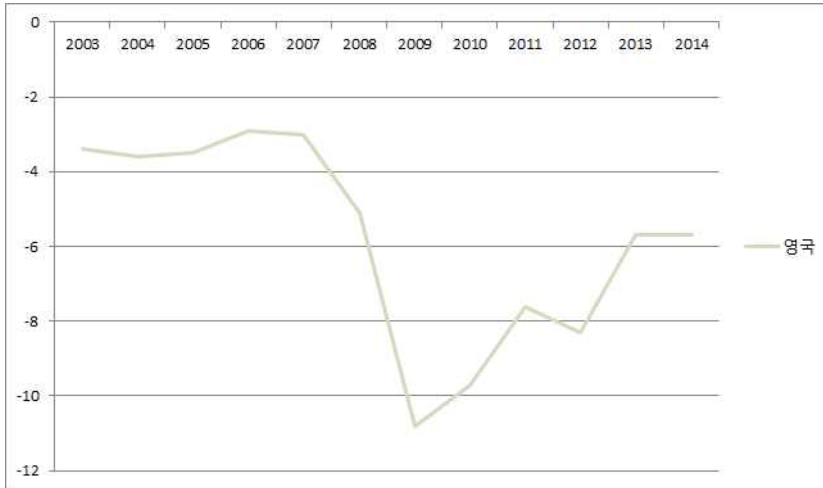


주) 윗선: 영국, 아래선: 스위스

출처: FRED

한 때 영국의 대 국내총생산 재정적자 비율이 한 때 10%를 넘기도 했다. 그 이후 긴축정책이 대체로 지속되었는데 최근에는 추가적인 긴축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림 1 -56> 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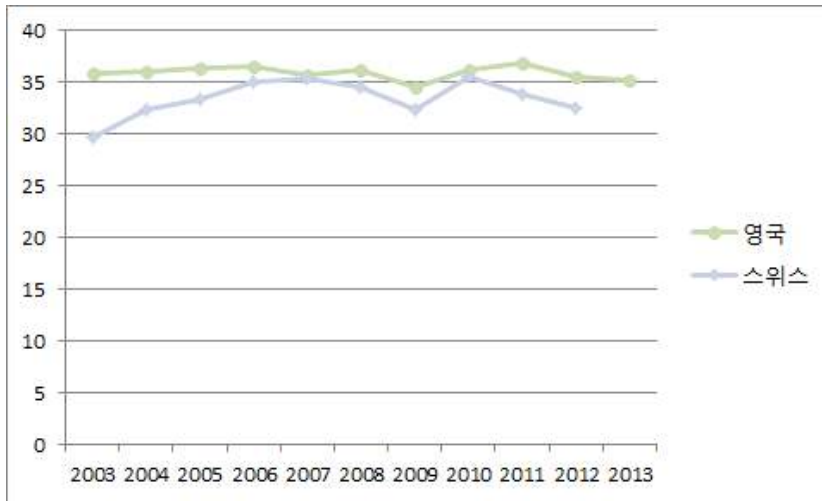


출처: Eurostat

#### (5) 영업잉여

영국의 영업잉여 비율이 스위스의 그것보다 더 높다. 위기 이후 두 나라 다 낮아지고 있다.

<그림 1 -57> 비유로존 서구 나라들 법인기업의 영업잉여 비율  
(대 부가가치, %)



출처: Eurostat

## 4. 각국 진보정당 및 노조의 대응과 정치지형의 변모

### 1) 유로존 내 재정위기 겪지 않은 나라들

#### (1) 독일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sup>49)</sup>

독일의 주요정당으로는 기민/기사연합, 사민당이 있고 2013년에 창당한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독일대안’(AfD)<sup>50)</sup>이 있다. 독일 진보정당으로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sup>51)</sup> 이외에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당(die

49) 이하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달리 언급하지 않는다면 영문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와 eurofound(<http://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comparative-information/working-life-country-profiles>)를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관련 항목이나 관련 나라와 관련한 사이트에 대해 일일이 적시를 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들의 검색 최종일은 2015년 12월 31일이다. 또한 유럽의 진보정당들에 대해서는 장석준(2014),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개마고원과 Sassoon, Donald(2014), 『사회주의 100년 20세기 서유럽좌파정당의 흥망성쇠』(강주현, 김민수, 강순이, 정미현, 김보은 번역), 황소걸음(원서출판 1996)를 참조하라.

50) 2015년 7월 15일 반무슬림, 친러시아 경향의 보다 극우적인 분파가 당권을 장악하면서, 창당대표를 포함한 보다 온건한 분파가 분당해 2015년 7월 19일 ‘진보와 혁신 동맹’(ALFA)이라는 이름의 새 당을 창당했다.

51) 독일 사민당과 관련한 약사는 다음과 같다. 1863년 설립된 전독일노동자연합(ADAV)과 1869년 설립된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가 1875년에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SAPD)으로 통합되었다. 이 당은 반사회주의법으로 활동이 금지되다가 1890년 이 금지가 풀리자 현재의 이름, 즉 독일사회민주당(SPD)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사민당이 제 2 인터내셔널에서의 약속과는 달리 전쟁에 대해 찬성을 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이런 사건들의 효과로 사민당 내 좌파 혹은 극좌파들이 분리하여 스파르타쿠스연맹, 독립사민당, 그리고 독일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우선 1917년에 개량주의와 볼셰비즘의 중간적 길을 가고자 한 독일 독립사민당(USPD)이 만들어졌다. 스파르타쿠스연맹과 평의회공산주의자들(ISD)은 독립사민당에 있다가 1919년에 독일공산당(KPD)을 만들었

Linke)<sup>52)</sup>, 그리고 녹색당이 있다.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로는 조합원 600만 규모의 독일노총(DGB)가 있다. 노조조직률은 18%(2011)이고, 산별협약 적용률은 구 서독지역에서 53%, 구 동독지역에서는 36%이다.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연정을 꾸리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사정이 조금 나은 독일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이 재정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그리고 그 운동 양상은 자국의 긴축정책 폐기라기보다는 그리스나 위기국 민중들에 대한 지지연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나흘간의 반긴축/반자본주의 행사의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19일에 약 25,000명이 시위를 했다.<sup>53)</sup> 2015년 3월 18일에도 노동조합들과 좌파당이 결합하고 있는 ‘봉쇄점거’(Blockupy) 운동의 이름으로 약 2만명이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프랑크푸

---

다. 독립사민당은 코민테른 가입을 둘러싸고 분열되는데 결국 젊고 좌파적인 그룹이 다수여서 가입이 결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분열되었다. 좌파는 결국 1920년에 공산당에 합류해 통합공산당을 만들었고, 남은 독립사민당은 1921년 국제노동자사회주의당 인터내셔널(2.5인터내셔널 혹은 비엔나 인터내셔널) 창설을 주도했다. 1920년에 일부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독일공산당을 나와 독일공산주의노동자당(KAPD)을 만들었다. 1922년에 독일공산주의노동자당은 에센분파와 베를린분파로 나뉘었는데, 네덜란드 출신 평의회공산주의자 고르터와 판네쿠크는 에센파에서 활동했다. 1922년 독립사민당과 사민당 사이의 차이가 흐릿해지면서 9월 24일 독립사민당과 사민당 내 주력들이 통합사민당(VSPD)을 결성했고 1924년 다시 이름을 사민당으로 하였다. 1931년에 사민당 이탈리아들이 사회주의노동자당을 만들었는데 잔류 독립사민당 사람들이 1932년에 여기에 합류했다.

52) 2차대전 이후 동독지역의 공산당과 사민당은 통합하여 통일사회당(SED)을 만드는데, 2007년에 이 동독의 통일사회당(SED) 후신인 민주사회당(PDS)과, 슈레더 사민당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한 사민당 이탈리아 세력, 즉 ‘노동과 사회정의의 위한 선거대안’(WSWS)이 합쳐져서 좌파당(die Linke)이 만들어졌다.

53) Common Dreams staff(May 19, 2012), "25,000 Rally Against Austerity in Germany", Common Dreams(<http://www.commondreams.org/news/2012/05/19/25000-rally-against-austerity-germany>)를 참조하라.

르트에서 긴축반대 시위를 했다.<sup>54)</sup>

2015년 10월 11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체결 시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25만이 참가했다.

한편 독일노총(DGB)은 26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마셜플랜”을 제안했다.<sup>55)</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1998년 오랜 기민당 집권을 끝내고 사민-녹색당 연정(적녹연정)이 집권했다. 2002년에도 연정 세력이 승리했는데 이 연정세력이 ‘Agenda 2010’(신 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혁인 하르츠개혁이 포함되어 있다)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노동과 사회정의-선거대안’(WASG)이라는 정치조직이 결성된다. 전통 사민당노선의 오스카 라퐁텐도 탈당해 이들에 가담하고 결국 동독의 통일사회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과 합당을 해 좌파당(die Linke)이 결성된다.

좌파당이 참가한 2005년 선거에서 사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좌파당의 지지율은 상승한다. 사민당이 좌파당이 포함되는 연정을 거부했기 때문에(좌파당도 마찬가지로) 2005년에는 급기야 기민당과 사민당 사이의 대연정이 꾸려진다. 2009년 선거에서는 사민당과 기민당 둘 다 대연정의 성과를 옹호했는데, 두 당 다 지지율이 하락했고 그 중에서 사민당의 지지율은 23%로 폭락했다. 자유민주당이 14.6%로 지지율을 크게 올렸고 좌파당도 지지율을 11.9%로 끌어올렸다. 2009년 선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사정이 덜 나쁜 독일에서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지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정세력은 기민/기사연합과 자유민주당으로 바뀐다. 2013년

54) [https://en.wikipedia.org/wiki/Blockupy\\_movement](https://en.wikipedia.org/wiki/Blockupy_movement)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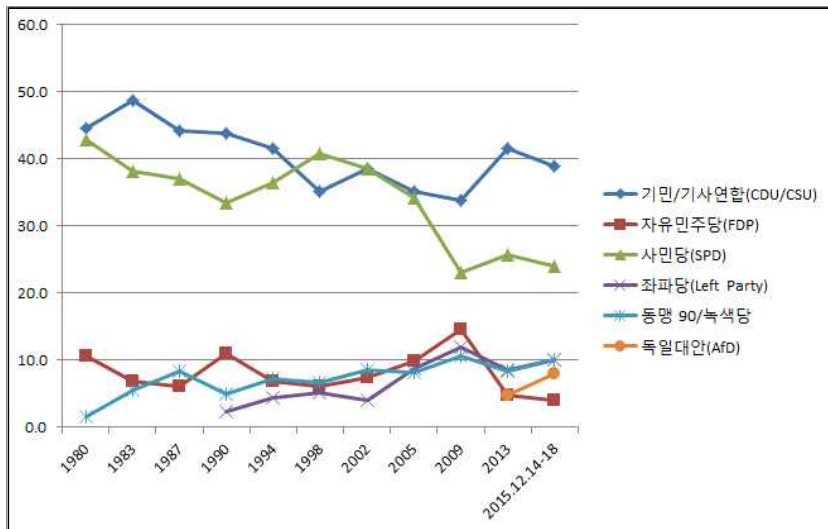
55) Michael Sommer(2013), “A Marshall Plan for Europe”(http://column.global-labour-university.org/2013/05/a-marshall-plan-for-europe.html)를 참조하라.

선거에서 기민/기사연합의 지지율은 41.5%로 뛰어올랐고 연정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은 5% 벽을 넘지 못해 의원수를 전부 잃었다. 사민당의 지지는 25.7%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지지율을 보면 기민/기사연합은 조금 하락하고, ‘독일대안’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민자 사태 이후의 상황이다. ‘독일대안’은 보다 우익적인 분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창당 대표를 포함한 보다 온건한 분파가 탈당하면서 우익적인 색채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 사민당은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좌파당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사민당이 좌파당을 이런 방역선(防疫線: cordon sanitaire) 내지 격리(quarantine)의 대상 혹은 봉쇄(containment)<sup>56)</sup>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조가 지속된다면 독일에서는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대연정, 혹은 우파 안에서의 연정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 -58> 독일 정당 지지율 변화



주 1) 2013년까지는 총선 득표율, 2015년 12월(2015.12.14-18)은 여론조사(기관: Forsa) 지지율

56) 오늘날 유럽 정치에서 방역선의 대상은 극우정당인 경우가 더 흔하다. 독일 이외에 체코에서도 공산당이 대부분의 정당의 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Cordon\\_sanitaire](https://en.wikipedia.org/wiki/Cordon_sanitaire)를 참조하라.

2) 좌파당의 2002년까지의 지지율은 민주사회당(PDS) 지지율

## (2) 프랑스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프랑스 주요정당으로는 중도좌파 사회당과 중도우파 '민중운동연합'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반유럽연합, 반이민,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전선이 주요 3당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사회당 이외에, 공산당과 사회당 분리파에 의해 결성된 좌파당의 선거연합인 '좌파전선', 그리고 '유럽생태-녹색당'이 있다.

노동조합은 이념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은 관계가 소원해 졌지만 옛날엔 공산당과 관계가 깊었던 노총인 CGT, 사회당계열 CFDT, 기독교계열 CFTC, 반공주의적 FO, 관리직 또는 전문직을 조직하는 CFE-CGC가 있다. 조합원은 CGT는 71만, CFDT는 87.5만, CFTC는 16만, FO는 30만, CFE-CGC는 14만 규모이다. 노조조직률은 7.9%이고, 단협적용률은 92%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규제완화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항한 파업과 시위가 있었다. 우선 중도우파 사르코지 정부가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려는 시도를 하자 2010년 9월과 10월에만 걸쳐 7차례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적게는 백만에서 많게는 350만명이 참가하였다.

2014년 4월 12일에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에서 좌파 정치세력의 주도로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렸다.<sup>57)</sup> 2014

---

57) Aljazeera america(April 12, 2014), "Thousands in Paris and Rome protest austerity measures"(http://america.aljazeera.com/articles/2014/4/12/rome-pari-s-anti-austerityprotests.html)를 참조하라.

년 11월 15일에는 올랑드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는 달리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시위가 있었다.<sup>58)</sup>

2015년 4월 9일에는 70여개 도시에서 수만명이 일요일 개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마크론법(loi Macron)과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노총 CGT와 FO 등이 주도하였다.<sup>59)</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07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민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가 경제위기 전반부 동안 집권했다. 그 결과 사르코지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2012년 선거에서는 사회당의 올랑드가 사르코지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올랑드도 긴축정책을 수용해서 지지율이 하락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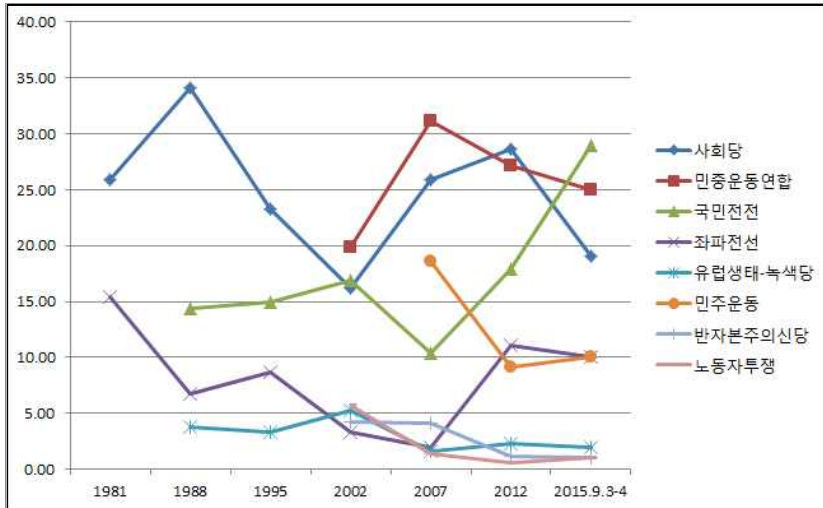
경제위기 와중에서 국민전선이 지지율을 대폭 높였다. 프랑스공산당과 좌파당의 선거연합체인 좌파전선의 지지도 2012년에 조금 올랐다.

---

58) RT(15 Nov, 2014), "'Austerity kills': Thousands rally against French President Hollande in Paris (VIDEO)"(<https://www.rt.com/news/205911-paris-austerity-rally-hollande/>)를 참조하라.

59) euronews(09/04/15), "Anti-austerity, anti-Macron Law: Thousands protest on streets of France"(<http://www.euronews.com/2015/04/09/anti-austerity-anti-macron-law-thousands-protest-on-streets-of-france/>)를 참조하라.

<그림 1 -59>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선거 지지율 변화



- 주 1) 2012년까지는 대선 지지율, 2015년(2015.9.3.-4)은 여론조사 지지율  
 2) 좌파전선의 경우 2007년까지는 프랑스공산당만의 지지율  
 3) '유럽생태-녹색'의 경우 2007년까지는 녹색당만의 지지율  
 4) 반자본주의신당의 경우 2007년까지는 반자본주의신당의 이전 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지지율

### (3) 오스트리아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오스트리아 유력정당으로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중도우파 인민당이 있다. 최근에 극우정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 이외에 녹색당<sup>60)</sup>과 공산당<sup>61)</sup>이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조합원 133만 규모의 오스트리아노총(Austrian Trade

60) 1986년에 보수적인 녹색당(VGÖ: 1982년 창당)과 진보적인 녹색당(ALÖ: 1982년 창당)이 합당해서 탄생한 당이다. 환경보호 같은 생태 이슈 이외에 녹색당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도 하고 사회-생태적 조세개혁을 옹호한다. 2001년 당헌에 따르면 이 당의 기본가치는 "직접민주주의, 비폭력, 생태, 연대, 여성주의 그리고 자결"이다.

61) 1918년 창당되었고, 2004년 이래 유럽좌파당의 일원이다.

Union Federation: ÖGB)이 있다. 대체로 가장 강력한 분파는 사회민주당(SPÖ)과 긴밀하고, 오스트리아노총(ÖGB) 의장은 영향력 있는 사회민주당 당원들이었다.

노조 조직률은 33%이고, 사용자 조직률은 100%로 사회전체가 강력한 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협적용률은 사적부문에서 95-98%에 이르고, 공공부분은 형식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제외된다.

2009년 10월 말 대학 등록금 폐지 혹은 재도입 반대, 대학 민주화 등을 내걸고 학생들의 대학 강의실 점거 시위가 있었다. 중심적인 구호는 “직업 교육 대신에 교육을!”이었다.

## ② 정치지형의 변모

1999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나 자유당과 인민당의 연정이 꾸러졌다. 자유당은 인민당보다 득표를 많이 했으나 자유당의 헤이더 Jörg Haider가 아니라 인민당 출신 슈셀 Wolfgang Schüssel이 수상이 되었다. 자유당의 정부참여에 항의해 사민당과 녹색당의 시위가 있었고, 유럽연합 나라들에서 가벼운 제재가 있었으나 이내 해제되었다.

2002년에 조기선거가 있었다. 자유당 내부 분란 때문이었다. 선거결과는 인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자유당은 이전 선거에서 26.9%의 지지를 얻었는데 10.0%로 지지율이 폭락했다. 인민당은 1966년 이후 최초로 1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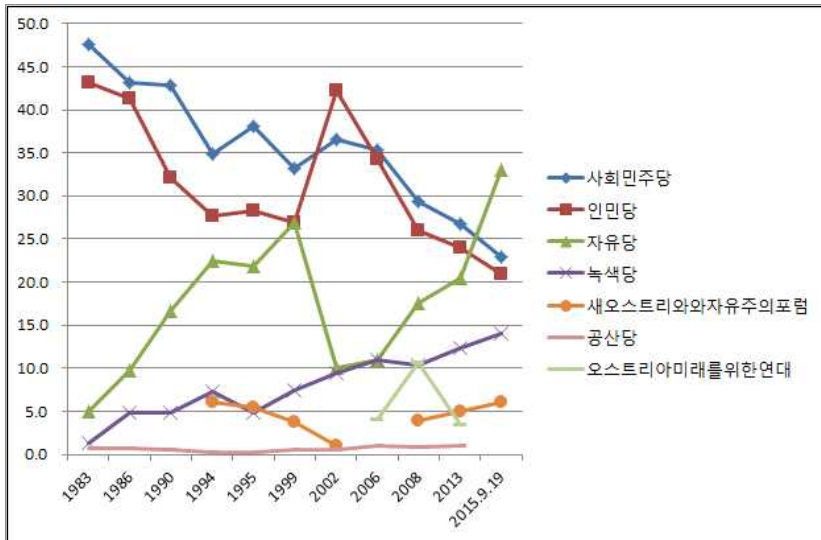
2006년 선거 결과 사회민주당이 승리했고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의 대연정이 꾸러졌다. 2008년 인민당이 대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조기총선이 치러졌다. 대연정 파트너였던 사민당과 인민당의 지지율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선거결과는 극우정당인 자유당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의 대연정이 꾸러졌다.

2013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였다. 대

신 자유당과 녹색당이 지지율을 높였다. 이번에도 연정은 사회민주당과 인민당 사이에 꾸려졌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극우 자유당의 지지율은 치솟고 있다. 사회민주당과 인민당 사이의 대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I -60> 오스트리아 정당 지지율 변화



주 1) 2013년까지는 총선 지지율, 2015년은 2015년여론조사 지지율

2) '새오스트리아와자유주의포럼'은 '자유주의 포럼'과 '시민포럼'이 합쳐진 것임. 2002년까지의 지지율은 '자유주의 포럼'만의 지지율임. 2008년 '새오스트리아와자유주의포럼' 지지율은 '자유주의 포럼'과 '시민포럼'의 지지율의 합계임

#### (4) 네덜란드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네덜란드 정당들의 지지율은 30%를 넘는 지지를 받는 정당이 거의 드물 정도로 정당들의 지지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도 그 동안은 중도우파 기독교

민주당, 중도좌파 노동당, 그리고 자유주의정당인 자유민주인민당이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주요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과 중도좌파 노동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노동당 이외에 사회당, 녹색좌파, 동물권당이 있다. 노동당(PvdA)<sup>62)</sup>은 사회민주주의 지향의 중도좌파 정당이다. 1990년대 복지국가 개혁과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사회당<sup>63)</sup>은 마오주의에서 출발한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알려져 있고, 공기업민영화와 세계화에 비판적이다. 녹색좌파는 1989년 네덜란드공산당<sup>64)</sup> 등 진보정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당이다.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로는 1976년 가톨릭노조(NKV)와 사회주의 노조

---

62) 노동당(PvdA)은 1881년 설립된 사회민주주의 연맹(SDB)에서 연원하는데, 사회민주주의 연맹 내 무정부주의적 경향의 다수파가 선거불참이라는 결정을 취하자 1894년 이 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건설된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이 모태가 되고 있다. 잔류 사회민주주의연맹(SDB)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이름을 '사회주의자연맹'(SB)으로 바꿨는데, 무정부주의자들도 이 조직을 이탈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회주의자연맹'(SB)도 다시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에 합류했다. 그 이후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이 갈등하다가 1909년에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당을 나갔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과 사회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연맹'(VDB), 진보적인 개신교 정치세력인 '기독교민주연합'(CDU) 등 몇몇 진보 정치세력이 1946년에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당이 노동당(PvdA)이다.

63) 네덜란드공산당(CPN) 내 친중국 경향의 세력(KEN(ML))이 1964년에 형성되었는데 이 중의 일부가 나와서 1971년에 나와서 만든 당(KPN(ML))이고, 1972에 당명을 사회당으로 바꾸었다. 이 당은 대중조직화에서 마오주의 원리를 적용하긴 했으나 초기부터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이었다.

64) 사회민주주의 연맹(SDB)에서 1894년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DAP)이 분리되어 창설이 되었고, 1909년에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당을 나와 사회민주당(SDP)을 결성하였고(이는 유럽에서 이런 류의 분당의 첫 사례다), 이 당이 오늘날의 네덜란드공산당(CPN)이 되었다. 네덜란드공산당은 1991년에 '평화사회주의당', '급진주의자당' 등 다른 진보정당 등과 합당해 결국 오늘날의 녹색좌파(GroenLinks)가 되었다.

한편 네덜란드공산당에서 1921년 고르터, 판네쿠크 등 평의회마르크스주의자들 일부가 떨어져 나와 독일공산주의노동자당을 모델로 하여 평의회공산주의적인 네덜란드공산주의노동자당(KAPN)을 결성하였다.

(NVV)가 통합해 결성한 네덜란드노총(FNV)은 조합원 140만 규모이고, 기독교(개신교)계 노조인 CNV는 조합원 35만 규모의 노조이고, 조합원 16만 규모의 관리직과 전문직 노총(MHP)가 있다. FNV는 노동당(PdvA)와 형식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이데올로기적,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따라 나뉘어져 있지만 사회주의노조와 가톨릭노조의 합병 이후 이데올로기는 중요성이 덜해 졌다.

네덜란드의 노조조직률은 17%이고 단협적용률은 80%(2013년)이다.

네덜란드는 파업과 시위가 활발한 나라는 아니지만 긴축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의 강력한 옹호국가이지만 갈수록 노 사 모두로부터 긴축정책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다.<sup>65)</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06년 ‘민주주의자66’ 연정철수로 선거가 치러져, 기독교민주당, 노동당, 기독교연합의 연정이 꾸러졌고, 경제위기 초기 관리를 이들 당이 맡게 되었다.

2010년에 노동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요청한 네덜란드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에 반대하여 연정에서 철수하여 선거가 치러졌는데 기독교민주당의 지지율이 26.5%에서 13.6%로 폭락했고 지지율 순위도 1당에서 4당으로 밀려났다. 이번에는 92년 만에 자유주의 경향의 자유민주당이 수상을 맡으면서 기독교민주당과의 연정이 꾸러졌고(제 1차 루테 Rutte 내각), 인종주의 정당 자유당이 이 연정을 지지하였다.

2012년 긴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긴축정책을 반대한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4월에 연정 지지를 철회하여 같은 해 9월에 선거가

---

65) Matt Steinglass (2013), “Dutch mood shifts against austerity and the EU”, Financial Times(<http://www.ft.com/intl/cms/s/0/e0cef102-0040-11e3-9c40-00144feab7de.html#axzz3yc2Vz1IX>)를 참조하라.

다시 치러졌는데 이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의 지지율은 13.6%에서 8.5%로, 순위는 4위에서 5위로 더욱 하락하였다. 선거 이후, 선거과정에서 긴축정책과 ‘재정협약’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당, 즉 이들을 주도한 자유민주인민당과 이들에 비판적이었던 노동당의 연정이 꾸려졌다(제 2차 루테 내각). 한편 자유당의 반대로 연정은 붕괴했지만 그 직후 긴축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애초 자유당이 반대한 대규모 긴축안보다는 작은 규모의 긴축안이긴 하지만 이에 찬성한 정당 중에는 자유민주인민당 이외에 ‘녹색좌파’와 ‘민주주의자66’이 있었고, 반대한 정당 중에는 노동당과 자유당 이외에 사회당도 있었다. 긴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보장 축소, 은퇴연령 66세에서 67세로 상향, 부가가치세 인상, 대부분의 공무원 임금 2년간 동결 등이다.<sup>66)</sup> 제 2차 루테 내각에서 자유당은 완전한 야당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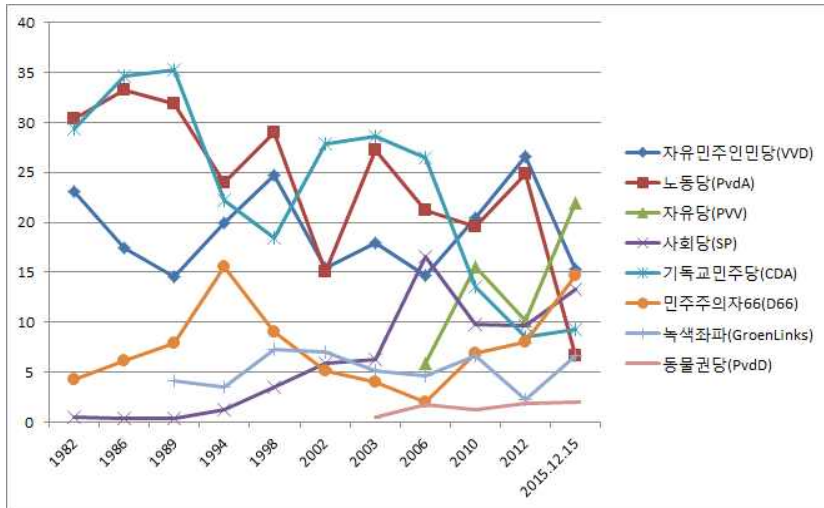
네덜란드는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유로존 국가인데 이들 범주의 국가들 중 경제상황이 핀란드 다음으로 좋지 않은 나라다. 유럽연합의 ‘재정 협약’만 아니라면 긴축정책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재정 협약’을 충실하게 지키느라 성장을 희생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정당의 지지율 부침이 매우 심한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2006년 선거 이후 연정주도세력이었던 기독교민주당의 지지가 2010년에 폭락했고 2012년 선거를 거치면서 또 다시 폭락해 2006년 제 1당에서 2012년 제 5당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12년 연정에 참여한 노동당의 지지율도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 결국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과 2012년 연정을 주도한 자유민주인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반면 반이민 인종주의적 극우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자유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 지지율이 치솟았다가 그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사회당의 지지율이 다시 약간 상승하고 있고 녹색좌파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 동안 오랫동안 연정을 통해 집권을 해 온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세력은

66) Andrew Rettman(27. APR 2012), "Opposition parties rescue Dutch budget plan, euobserver"(<https://euobserver.com/economic/116063>)를 참조하라.

위기에 빠지고 반대파의 지지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 -61> 네덜란드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2년까지는 총선 지지율, 맨 마지막(2015.12.15.)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TNS NIPO) 지지율. 단, 여론조사 지지율 자체의 입수가 어려워 의석수(총 150석)에 비례한 지지율을 추산한 결과

## (5) 핀란드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핀란드 유력정당으로는 농민연맹에서 연원하면서 분권화 주장을 특징으로 한 중도당, 사회민주당, 친유럽연합이면서 유럽인민당 계열의 보수정당인 민족연합당, 그리고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적 민족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인당’이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sup>67)</sup> 이외

67) 1899년 핀란드노동당이었다가 1903년 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 때 40% 넘는 지지를 받다가, 1918년 핀란드내전 이후 사회민주당 간부 출신 난민들에 의해 핀란드공산당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고, 이 당은 코민테른 지부가 되었다. 핀란드공산당은 1944년까지는 비록 불법이었지만 전선체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는데 이 때부터는 표가 분산되면서 사회민주당은 20%대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한편 사회민주당은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벌어진 소련, 독일이

에 좌파동맹<sup>68)</sup>이 있다.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로는 핀란드노총(SAK), 사무직노총(STTK), 전문직노총(AKAVA)이 있다. 핀란드노총(SAK)은 조합원 100만 규모이고 제조업 노동자가 반 정도를 차지한다. 공공 민간영역에 걸쳐 있다, 사무직노총(STTK)은 조합원 64만 규모다. 전문직노총(AKAVA) 56.6만인데 이 중 약 10만명이 학생이다. 총연맹 교섭이 주요하고 지배적이다. 노조조직률은 74%이고 단체협약적용률은 95-100%이다.

핀란드에서도 긴축정책에 대한 항의는 상당하다. 2014년 크고 작은 시위에 이어 2015년 9월 18일에는 핀란드노총 주도로 1993년 이래 최대의 파업이 벌어졌고, 30,000여명이 긴축정책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sup>69)</sup> 그리고 2015년 11월과 12월에는 우편노동자들의 순환파업이 있었다.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09년 -8.3% 성장을 해 1918년 이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을 44%를 유지해 '60% 미만'이라는 유럽연합 기준을 지켰다.

2011년 선거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과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

---

개입된 '계속전쟁'에서의 반공노선 때문에 종전 이후 공산당과 심각한 갈등 혹은 경쟁관계에 들어서야 했다.

68) 좌파동맹은 1990년에 핀란드민중민주연맹의 계승자로 설립되었다. 핀란드민중민주연맹은 1944년 공산당 불법화가 폐지된 이후 핀란드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핀란드사회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세력들을 묶기 위해 설립된 정치조직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20%가 넘는 지지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한 1987년에는 9.4%의 지지를 받았다. 1990년에 몇몇 좌파 정치세력과 함께 좌파동맹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핀란드공산당은 불법화 시기에는 몇몇 전선체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핀란드민중민주연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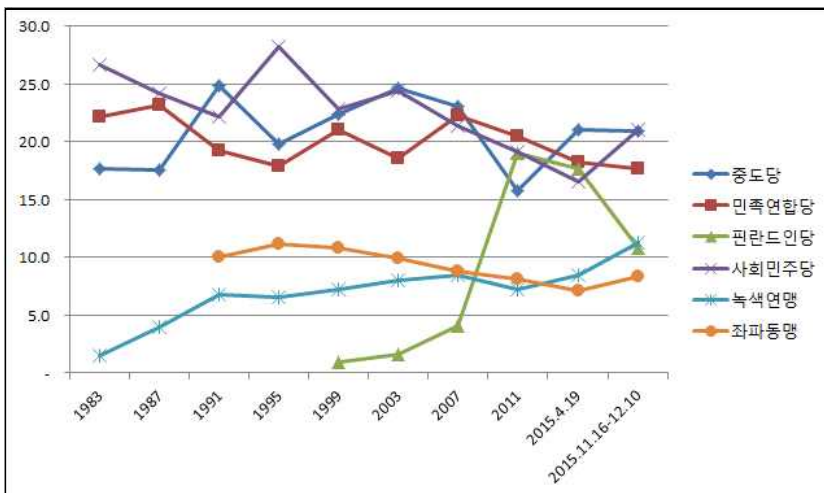
69) RT(2015), "30k Finns protest govt-planned cuts, nationwide strike grinds country to a halt (PHOTOS, VIDEO)" (<https://www.rt.com/news/315843-finland-nationwide-strike-cuts/>)를 참조하라.

가 쟁점이 되었다. 핀란드인당의 지지가 치솟았고, 중도당의 지지는 폭락했다. 다른 주요 두 정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중도파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족연합당, 사민당, 좌파동맹, 녹색연맹 등이 연정을 꾸렸는데 좌파동맹은 2014년 긴축정책에 항의해 연정에서 탈퇴했고 녹색연맹은 다른 이유로 철수했다.

2015년 선거에서는 중도당이 다시 1위에 복귀해, 핀란드인당, 민족연합당과 연정을 꾸렸다. 최근에는 핀란드인당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다.

<그림 I -62> 핀란드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5.4.19까지는 총선 지지율, 마지막(2015.11.6.-12.10)은 여론조사(기관: TNS Gallup) 지지율

## 2) 위기국들

### (1) 그리스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스 정치는 전통적으로 중도우파 정당인 신민주당과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당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소정당으로 공산당, 유럽좌파당 계열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있었고, 그리고 극우정당으로 최근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는 황금새벽당이 있다. 유럽에서 경제위기 정도가 가장 심각했던 그리스의 경우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정당의 부침이 심하고 정당의 분할 및 급조도 빈번하다.

진보정당으로는 1974년 군부독재(1967-1974) 퇴진 이후 등장한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사회당, 유럽좌파당 계열의 시리자<sup>70)</sup>, 그리고 공산당<sup>71)</sup>이 있고, 시리자에서 최근에 갈려나온 ‘민중단결’이 있다.

그리스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로서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 45만 규모의 그리스노총(GSEE)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28만 규모의 공공부문 노총(ADEDY)이 있다. 그리스공산당에 가맹된 노조(PAME)가 있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긴축정책에 대항한 격렬한 투쟁이 있었다. 두 차례의 구제금융협약 체결을 두고 그리고 각각의 구제금융협약에 근거하여 대여섯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이 지급되고 이에 맞춰 새로운 긴축법안이 제출되고 통과가 되는데 이 때마다 두 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혹은 48시간 총파업이 있고, 후속하여 격렬한 거리시위가 있었다.

---

70) 1968년 소련군의 체코 프라하시위 진압을 계기로 그리스공산당(KKE)을 탈당한 ‘그리스 공산당 국내파’(KKE Interior) 중의 한 그룹인 ‘그리스 좌파’(Greek Left)가 모태가 되고, 나중에 ‘그리스 좌파’와 그리스공산당(KKE)과의 연합(Synaspismos), 그리고 그리스공산당의 ‘연합’의 이탈 과정에서 공산당을 탈당하고 남은 세력들이 가세한 정치세력이 중심이 되어 다른 군소 좌파 조직들과 함께 2004년에 만든 정치세력이다. 그런데 2015년 3차 구제금융안합의를 계기로 시리자 내 좌파들이 탈당하였다. 이 세력은 몇몇 다른 좌파 세력과 함께 ‘민중단결’(Popular Unity)을 꾸렸다.

71) 러시아 혁명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여러 좌파 정치세력들이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아 건설된 정당이 이후 그리스공산당(KKE)으로 개칭된 것이다. 코민테른에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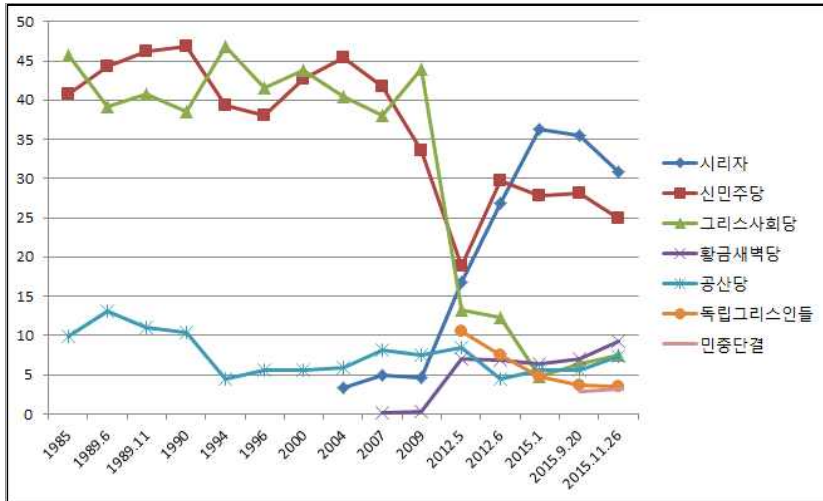
우선 2010년 5월 구제금융협약에 기초한 긴축정책에 대한 항의로 전국적인 총파업이 있었다. 아테네 시내로 10만명의 시위대가 행진을 하는 등 군부독재 이후 가장 커다란 규모의 시위를 전개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도 구제금융 갹신과 긴축정책에 대한 항의로 10만에 이르는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한편 2011년 5월에서 8월에 이르는 동안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에 영향받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6월 28일에는 노조의 48시간 총파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2011년 11월에도 총파업이 있었다. 2012년 2월 12월에는 파파데모스 위기관리내각의 긴축정책에 항의해 50만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그 이전 7일엔 양대 노총의 24시간 총파업이 있었다.

## ② 정치지형의 변모

그리스는 재정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커다란 시위가 있었다. 이는 2008년 한 학생의 경찰에 의한 살인을 두고 발생했는데, 1974년 군부독재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시위였다.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신민주당 정권의 카라만리스 Karamanlis 수상이 사임을 발표하면서 2009년 9월 정상적인 선거일을 2년 정도 앞서 선거가 치러졌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경제는 그리스의 중심 산업인 해운과 관광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휘청거리고 있던 터였다.

<그림 1-63> 그리스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5년 9월 20일(2015.9.20.)까지는 총선 지지율, 2015년 11월 26일(2015.11.26.)은 여론조사(기관: Kapa Research) 지지율

2009년 선거에서 신민주당 정권에 뒤이어 그리스 양대 정치세력 중의 하나인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사회당이 43.9% 지지를 얻어 집권에 성공하였다. 집권하자마자 사회당은 그리스 재정적자의 실상이 감추어져 있고 실제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표하였다. 결국 2010년 5월에 그리스는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그리스의 국채수익률이 너무 높아져서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구제금융은 긴축정책을 강요했는데 이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와 임금 삭감 등을 동반했다. 긴축정책을 집행한 사회당에 대한 지지는 당연히 식어갔다. 2차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했으나 국내외의 압력으로 이 계획을 포기한 사회당 파판드레우 수상이 2011년 11월에 물러났고 사회당, 신민주당 등이 지지한, 유럽중앙은행 부총재 출신 파파데모스를 수상으로 한 거국내각이 구성되었다.<sup>72)</sup>

신민주당과 연정을 꾸려 긴축정책을 집행하던 사회당에 대한 지지율이

72) 관련하여 메르켈과 사르코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등의 개입은 Peter Spiegel(May 14, 2014), "How the euro saved", Financial times(<http://www.ft.com/intl/cms/s/0/f6f4d6b4-ca2e-11e3-ac05-00144feabdc0.html#axzz3mGGesocE>)를 참조하라.

하락하면서 그 지지자들이 사회당보다 좌파적인 경향의 정당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지지가 공산당->시리자->민주좌파->시리자로 옮겨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자는 2012년 4월 모든 좌파와 진보적인 ‘반 구제금융/긴축정책 세력’의 단결을 제안하고 권력획득의 필요성 제기하였다. 이 전술이 주효하면서 시리자의 지지율은 다른 좌파세력보다 더 높아졌다.

시리자는 2012년 5월 17일 1차 선거에서 16.8%의 지지를 얻어 제 2당의 자리를 차지했고(제 1당 신민주당 18.9%), 2012년 6월 7일 2차 선거에서도 26.9%의 지지를 얻어 제 2당의 지지를 차지했다(제 1당 신민주당 29.7%). 직전 선거에서 4-5% 지지를 받던 정치세력으로서는 비약적인 성장이었다. 이는 긴축정책을 집행한 사회당의 몰락, 시리자의 완강한 긴축반대 천명, 그리고 유효한 대안적 정치세력을 갈망하는 그리스 민중들의 열망에의 시리자의 부응이 낳은 결과라 해야겠다.

한편 2012년 2차 선거 이후 구제금융을 집행한 신민주당, 사회당과 연정에 참여한 시리자에서 갈려져 나온 ‘민주좌파’는 연정세력의 정책에 항의해 중간에 연정에서 탈퇴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세가 하락해 갔다. 국민들의 눈에는 ‘민주좌파’가 긴축정책 찬성으로 비춰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긴축정책 반대, 유로탈퇴를 외치면서 고립노선을 걸었던 공산당은, 1차 선거를 앞두고는 시리자, 민주좌파 등과 함께 사회당지지 이탈자들을 흡수하면서 한때 12% 내외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했으나 2012년 2차 선거에서는 4.5%의 지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결국 2012년 선거 이후 긴축정책을 집행한 신민주당 주도의 연정세력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기에 마찬가지였는데 이 실망한 국민들은 2012년 선거 이후 대안적 프로그램과 대안적 세력화를 추진한 시리자에 대한 지지로 옮겨갔다. 그 결과 2014년 5월 25일 유럽연합 선거에서 승리하고 조기선거로 치러진 2015년 1월 25일 선거에서 마침내 승리해 집권의 길에 올랐다. 이 선거에서 사회당은 거의 괴멸했다.

시리자는 집권 이후 2차 구제금융 마지막 회차분을 받기 위한 협상, 그리고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했다. 협상 과정은 지속적인 후퇴의 과정이었다. 치프라스 수상은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을 일컫는 말이다)의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까지 진행했다. 국민들은 트로이카의 안에 60% 이상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 시리자 정부는 자본이탈, 트로이카의 압력에 굴복해 3차 구제금융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시리자 내 좌파(나중에 탈당해 ‘민중단결’을 결성한다)의 반발 등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시리자의 치프라스 수상은 사임을 택하고 2015년 9월 조기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선거 결과는 시리자의 승리였고 시리자는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 국민들의 패배주의 혹은 대안부재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4년 민주주의로의 회복 이후 가장 낮은 56.57%의 투표참여율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리자를 탈당한 ‘민중단결’과 공산당은 그리스 통화 ‘드라크마’로의 복귀를 주장했는데, 이는 독자통화를 도입하면 평가절하가 가능해 수출을 통해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유로존에 잔류하는 한 유럽연합이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시리자는 유럽차원의 해결책을 고수하면서 결국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선거 이후 지지율을 보면 시리자와 신민주당 공히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고 있고,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과 스탈린주의적 경향의 그리스 공산당의 지지율은 약간 상승하고 있고, 시리자에서 탈당한 ‘민중단결’의 지지율도 조금 더 올랐다.

그리스에서는 사회당과 신민주당의 양당체제가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시리자와 신민주당의 양당체제로 바뀐 것으로 보이나 양당의 지지율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였다. 그만큼 더 불안정해 졌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민주주의보다 좌파적인, 과거 공산당에서 연원하는 시리자의 부상, 집권, 그리고 일정한 좌절은 유럽 다른 나라들, 특히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정치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아일랜드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아일랜드 두 주요 정당은 중도파 내지 중도우파 경향의 아일랜드전사당과 아일랜드 가족당이 있다. 둘 다 신페인당에서 갈려져 나왔다.

아일랜드 진보정당으로는 북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해방 및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합과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1905년에 창당한 신페인당(“우리 스스로”당), 1912년에 아일랜드 노총인 아일랜드 노조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ICTU)의 정치적 날개로 설립된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노동당 등이 있다.

신페인당은 1970년 마르크스-레닌주의 경향의 아일랜드노동자당이 분당해 나갔으며 오늘날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아일랜드공화군(IRA)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73)</sup> 아일랜드공화군(IRA)은 1997년 휴전 발표, 1998년 벨파스트 합의 동의, 2005년 국제적 감시 하의 해체 과정을 밟아왔다. 이후 신페인당은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정당들이 그 연원으로 따지면 신페인당과 일정한 연관이 있지만 노동당은 예외다. 민족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아일랜드의 노동당은 유럽의 다른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노동당에 비해 그 존재감이 떨어지고, 중도파 내지 중도우파 정당의 연립정부 파트너 역할을 해 왔다.

아일랜드 노동조합으로는 아일랜드 노조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ICTU)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영국 내 북아일랜드 노조까지 포함하고 있다. 조합원의 반 정도가 공공부문 조합원이다. 노조조직률은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31%(2012)이고 ICTU에 따르면 40% 이상이고 조합원수는 약

---

73) 신페인당과 연관된 아일랜드공화군(IRA)의 정식 명칭은 Provisional IRA이고 이 외에도 유사 IRA 조직들이 많이 존재했고 지금도 일정하게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직이 대체로 IRA를 자신의 조직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58만이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약 44%이다. 1987년부터 2009년까지 노사정 위에 참여했고, 2009년에 사회협약이 종료되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5-8% 삭감이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노조는 노동당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일지라도 노동당이 아일랜드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서 어떤 정당이 되었든 다른 집권정당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20여년에 걸친 사회협약이 유지되었다.<sup>74)</sup>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아일랜드에서도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2008년 10월 22일에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학생과 연금생활자 약 2만5천명이 의회 앞으로 행진했다. 2009년 2월 21일에는 12만명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26일에는 공무원 13,000명이 연금보험료에 대한 항의로 하루 파업을 단행했는데, 이런 류의 파업으로는 20년만에 처음이었다.

2010년 11월 3일 더블린에서 등록금 인상, 학생 보조금 삭감 등에 항의하는 2만5천명-4만명의 대규모의 학생시위가 있었다. 일주일 뒤에는 영국 런던에서도 대규모 학생시위가 시작되었다.

2010년 11월 27일에는 “더 나은 길을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아일랜드노총(ICTU) 주최의 집회가 있었는데 10만명이 참가하였고, 노조 집회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이 집회는 정부가 11월 21일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개최되었는데, 28일에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은 아일랜드에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승인하였다.

2010년 11월 22일 녹색당이 연정에서 철수하면서 조기선거를 하게 되었고, 2011년 2월 아일랜드가족당(중도우파)과 노동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2011년 11월 16일 수천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

74) Rebecca Gumbrell-McCormick and Richard Hyman(2013), *Trade Unions in Western Europe: Hard Times, Hard Choices*, Oxford University Press. 144-145쪽을 참조하라.

시위를 하였다. 2013년 2월 9일에는 11만명이 은행부채 부담에 대해 항의해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10일에는 10만 명이 구제금융을 제공한 대가로 트로이카가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요구한, 수돗물 값 현실화(요금이 일반세금에 포함되고 개별적으로는 부과되지 않다가 사용량에 따른 부과로의 변경)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2015년에도 3월, 4월, 8월에도 1만5천에서 8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수돗물 값 인상에 항의를 하였다.

## ② 정치지형의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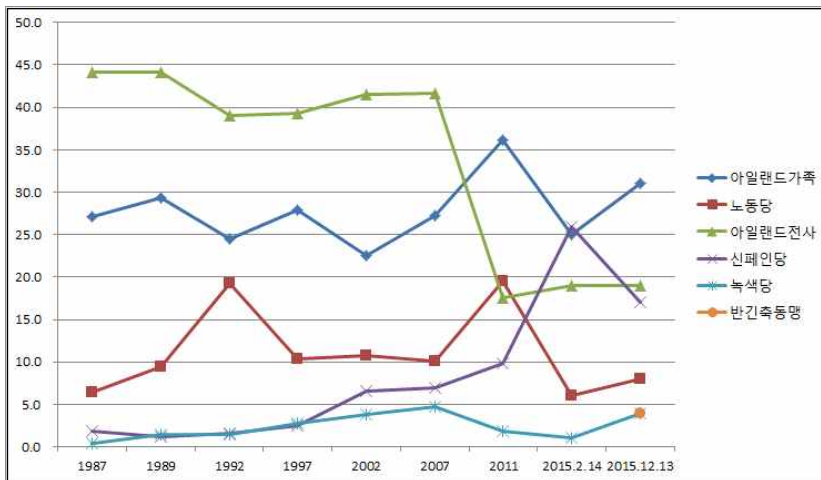
아일랜드는 2008년 1사분기에 이어 2사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 1983년 이래 최초로 경제위기에 돌입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07년 5월 총선에서 아일랜드전사당(Fianna Fáil: 중도파)과 녹색당이 집권했다. 그런데 2010년의 엄청난 재정적자, 그리고 구제금융을 둘러싼 불안으로 인해 정권이 붕괴되었고 총선이 실시되었다. 아일랜드전사당은 2007년 41.6%의 지지율이 2011년 선거에서 17.5%로 폭락했고 녹색당은 2007년 4.7%의 지지율이 1.8%의 지지율로 폭락했다. 대신 중도우파 정당인 아일랜드가족당과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노동당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민주사회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당보다 좌파적인 신페인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족당과 노동당의 지지율도 지속되는 경제위기 아래에서 유지되지 못했고 결국 2014년 5월 유럽연합 선거에서 폭락했다. 즉 처음에 아일랜드전사당(중도파)과 녹색당 연정이 위기를 관리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족당(중도우파)과 노동당이 지지율이 상승해 집권했는데 역시 지지율 폭락했다. 그 빈 공백을 노동당보다 왼쪽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긴축정책 반대를 외친 신페인당이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한 때(2015년 2월 14일)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슷한 계열의 그리스 시리자가 트로이카와 구제금융을 연장하고(2015년 2월

25일), 집권공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긴축정책을 수용한 3차 구제금융을 합의하기에 이르면서 신페인당의 지지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아일랜드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집권당인 아일랜드 가족당과 연정파트너인 노동당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아일랜드가족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I -64> 아일랜드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1년까지는 총선 지지율, 그 이후는 여론조사 지지율. 2015년 2월 14일 (기관: Sunday Independent), 2015년 12월 13일(기관: The Sunday Times)

### (3) 포르투갈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포르투갈의 두 유력 정당은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이다.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과는 달리 포르투갈의 사회민주당은 중도우파 정당이고 유럽 인민당의 일원이다.

포르투갈의 진보 정치세력으로는 1973년에 설립된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사회당(Partido Socialista, PS)이 있고, 공산당(Partido Comunista

Português or PCP)<sup>75)</sup>과 생태주의 정당 “녹색”이 주도하는 민주단일연합(Coligação Democrática Unitária or CDU), 그리고 1999년에 좌파 정치 세력의 통합으로 설립된 좌파블록(Bloco de Esquerda)<sup>76)</sup>이 있다.

포르투갈에는 80만의 조합원을 가진 가장 큰 전국조직인 포르투갈노총(General Confederation of the Portuguese Workers)과 40만의 조합원을 가진 General Union of Workers (UGT)이 있는데 전자는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고 후자는 사회당 계열이다.

이번 경제위기에 포르투갈에서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최대의 시위가 있었다. 2011년 3월 12일에 10여개의 도시에서 긴축과 경제위기에 항의하고 노동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는 정당이나 노조가 조직한 것이 아니었고 몇몇 음악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어 조직되었다. 수도 리스본과 제 2의 도시 뽀르토에서만 약 30만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 시위 이후 “3월 12일 운동”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2011년 ‘10월 15일 세계 저항의 날’ 시위에는 리스본에서 8만, 뽀르토에서 2만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 운동은 5월 15일에 시작한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2012년 11월 14일에도 노조는 유럽노총(ETUC) 차원에서 결정된 ‘긴축반대 파업과 저항의 날’ 투쟁에 참여하였다.<sup>77)</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

75) 러시아혁명과 코민테른의 영향으로 1921년에 설립되었다.

76) 트로츠키주의 계열인 제 4 인터내셔널 소속 조직인 ‘혁명적 사회주의자 당’과 ‘민중민주연합’의 통합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전자 소속 Francisco Louçã는 ‘좌파블록’의 후보로 2006년 대선에 출마해 5.32%를 얻었다.

77) SPIEGEL ONLINE International(Nov 14, 2012), “'European Day of Action': Anti-Austerity Protests Spark Violence”(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anti-austerity-protests-spark-violence-in-european-countries-a-867316.html)를 참조하라.

1980년대 이해 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은 다른 정당들의 심각한 도전 없이 지지율이 옆치락뒤치락하고 있다.

2005 총선에서 사회당은 45.03%의 지지를 받아 승리했고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호세 소크라테스 수상은 우익인 인민당까지 포함하는 내각을 구성하였다. 2009년 총선도 사회당은 지지율이 36.56%로 하락했으나 역시 승리하였다.

2008년과 2009년 투자실패, 횡령, 회계조작 등으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포르투갈의 두 은행(Banco Português de Negócios (BPN) and Banco Privado Português (BPP))에 구제금융이 주어졌다.

2009년과 2010년 국내총생산 규모의 축소와 세출 증대 및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증대로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1년 3월 사회당 정부가 정부의 긴축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소크라테스 수상이 사임하고 조기선거가 치러졌다. 4월 6일 위기관리 내각 수반 역할을 하는 중에 소크라테스는 긴축정책을 동반하게 될 구제금융 신청을 하였다.

2011년 6월 총선에서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과는 달리 중도우파인 사회민주당 집권이 집권하였고 인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사회당은 2005년, 2009년, 2011년 선거에서 지지율이 45%, 36.6%, 28.1% 계속 하락하였다.

중도우파 사회민주당 집권하에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0월 4일에 열린 총선에서 사회당의 지지율은 32.4%로 2011년 28.1%에 비해 조금 상승했다. 반면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의 선거연합 조직인 ‘전진 포르투갈’은 두 정당이 2011년 선거 때 각각 얻은 지지의 합(50.4%)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38.6%의 지지를 얻었으나 이 선거연합은 제 1당이 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선거 때의 27.7%에 비해서 지지율을 많이 끌어 올렸다. ‘전진 포르투갈’은 긴축정책으로 지지를 많이 잃었으나 재정위기가 사회당 때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거 막판에 지지세를 약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sup>78)</sup>

공산당이 주도하는 민주단일연합은 2005년, 2009년, 2011년 지지율이 7.5%, 7.9%, 7.9%로 별 변화가 없다가 유럽연합 선거에서 12.7%로 지지율이 상승하였다. 2015년 10월 총선에서 8.3%의 지지를 받았다.

좌파블록은 2005년 6.4%, 2009년 9.8%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가 2011년 지지율이 다시 5.2%로 하락했다. 이런 하락은 사회당의 긴축정책을 좌파블록 일부에서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위키). 2015년 10월 선거에서 지지율이 다시 10.2%로 상승해 공산당의 주도하는 민주단일연합을 능가하였다.

그 동안 중도우파 정당들과 연합을 해 오다가, 2014년 5월 유럽연합 선거에서 7.1%의 놀라운 지지를 받았던 대지당은 이번 선거에서 거의 괴멸되었다.

10월 4일 선거가 끝나고 의석수에 있어서는 사회당, 민주단일연합, 좌파블록의 합이 과반을 넘어섰으나 사회당과 다른 두 좌파 정당 사이의 정책적 간극이 커서 이들이 연정을 꾸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진 포르투갈’이 사회당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아 소수파 집권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긴축정책 비판은 이제 정치적 효력이 다 한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좌파블록은 긴축정책 반대를 외쳤고, 민주단일연합은 나토와 유로존 탈퇴를 주장했는데 이런 정책기조는 사회당의 정책기조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태가 달리 돌아갔다. 사회당이 이제껏 한 번도 합작 경험이 없는 공산당과 좌파블록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려 한 것이다.<sup>79)</sup> 결국 공산당과 좌파블록은 자신의 정책적 강령 일부를 포기하고 사회당을 지지

---

78) Patricia Kowsmann(Oct. 4, 2015), "Portuguese Coalition Loses Parliamentary Majority", The Wallstreet Journal(<http://www.wsj.com/articles/portugals-ruling-coalition-finishes-first-in-parliamentary-election-exit-polls-show-1443987627>)를 참조하라.

79) theguardian(Nov 9, 2015), "Portuguese Socialist party to vote to oust minority government"(<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nov/09/portuguese-socialist-party-to-vote-to-oust-minority-government>)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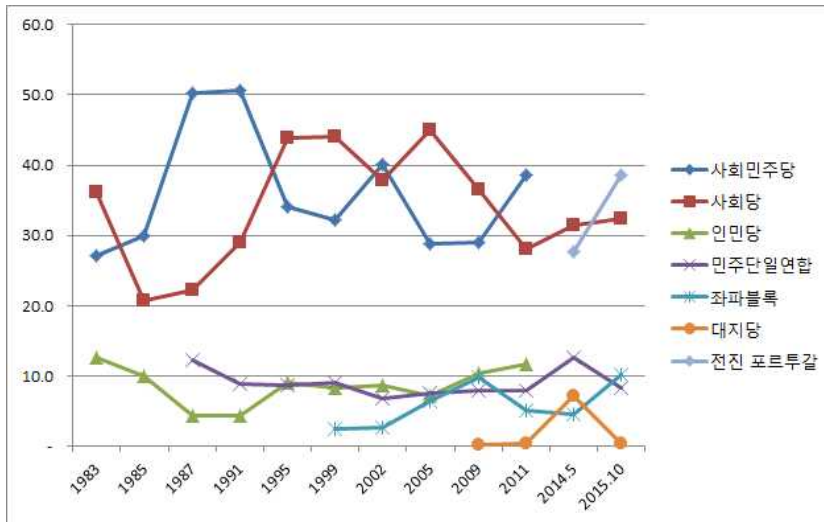
하기로 했다. 사회당은 ‘전진포르투갈’의 주요세력인 중도우파 사민당에 비해서는 긴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긴 하지만, 공산당과 좌파블록에게 유럽에서 긴축의 주요 기제인 ‘재정협약’을 따를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아 긴축정책 폐기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거 이후에 이들 두 좌파정당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며 사회당과 두 좌파정당 사이에 ‘전진 포르투갈’을 대체하여 좌파정부를 출범시키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실현된 것이다.

독일 등에서 보듯 집권을 자주 하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들은 그 보다 왼쪽의 좌파 정당들을 배제하고자 한다. 중도우파 정당과 대연정을 꾸릴지 언정 좌파하고는 합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좌파 정당들도 사민당을 경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포르투갈에서 이런 공식이 깨지고 중도좌파와 그 왼쪽인 좌파, 그리고 공산당과 합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중도좌파 사회당과 중도우파 사회민주당이 긴축정책에 동의하거나 이를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의 시리자와 친화적인 좌파블록의 지지율 상승과 공산당이 주도하는 민주당일연합의 지지율 유지, 그리고 정권교체에서의 이들 두 좌파 정당의 개입 등은 다른 나라에서의 좌파 정치세력의 약진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해야겠다.

<그림 1 -65> 포르투갈 정당 지지율 변화



- 주 1) 2014년 5월(2014.5) 지지율은 유럽연합 선거 득표율, 나머지는 총선지지율  
 2) 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은 2014년 5월 유럽연합 선거부터 2015년 10월 선거에서 '전진 포르투갈'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연합을 했음

#### (4) 스페인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스페인의 유력 정당으로는 중도좌파인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PSOE)(이하 사회당)과<sup>80)</sup> 중도우파인 인민당이 있다. 스페인의 진보정당으로는 사회당 이외에, 스페인공산당(PCE)<sup>81)</sup>이 주도하는 통합좌파가 있다. 최근에 '분

80) 스페인 사회당은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정당으로서 1879년에 창당했고, 1921년 국제노동자사회주의당 인터내셔널(2.5인터내셔널 혹은 비엔나 인터내셔널)에 가입했고, 1923년 이 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혹은 베른 인터내셔널(제 2 인터내셔널을 복원하겠다는 조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동자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LSI)의 일원이었으며(1923-40), 1951년부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의 가맹조직이다.

81) 러시아혁명 여파로 두 개의 공산주의 조직이 1921년 11월에 합쳐졌고 1922년 3월에 첫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제 3 인터내셔널 혹은 코민테른(1919-43)의 가맹조직이었다.

노한 시민들' 운동에 기초해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가 새롭게 진보 정당으로 창당이 되었다.

노조조직률은 16.4%(2010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노조조직으로는 114만 규모의 CCOO(Confederación Sindical de Comisiones Obreras)와 105만 규모의 UGT(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가 있다. CCOO는 공산당과 가깝고, UGT는 사회당과 가깝다. 그리고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무정부주의 노조 CNT가 있고 CNT에서 분리된 8만 규모의 노조 CGT가 있다.

CCOO와 UGT는 곤잘레스 사회당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해 세차례(1988, 1992, 1994)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안자르 인민당 정부를 향해 실업보험 변경을 이유로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이번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스페인 노조는 수차례 총파업을 단행했다. CCOO와 UGT는 2010년 9월 29일에 유럽노총(ETUC) 차원에서 결정된 총파업에 참여했다. 두 노총은 자파테로 사회당 정부를 향해 퇴직연령 늦추기,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였다. 이 파업에는 스페인 노동자들의 거의 70%가 참가했다고 알려졌다. 2012년 3월 29일에도 두 노총은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집권한 지 100일이 된 인민당 정권을 향했다. 쟁점은 유럽연합이 강제하는 긴축과 노동법 개악이었다.<sup>82)</sup> 2012년 11월 14일에도 두 노총은 유럽노총(ETUC) 차원에서 결정된 '긴축반대 파업과 저항의 날' 투쟁에 참여하였다.

노조의 투쟁과 별개로 스페인 민중들은 2011년 5월 15일 스페인 정치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 시위대 중의 일부는 경찰과의 마찰 이후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한 달 동안이나 '태양의 문' 광장에서 머물렀다. 그 동안 수차례의 집회와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다. 6월 19일엔 80여개 도시에서 300만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

82) theguardian(March 29, 2012), "Spain general strike begins"(<http://www.theguardian.com/world/2012/mar/29/spanish-general-strike-begins>)를 참조하라.

그리고 ‘10월 15일 세계 항의의 날’에는 마드리드에 50만, 바르셀로나에 45만의 시민들이 항의행동에 참여했다. 미디어들은 이 시위를 경제위기와 프랑스의 스테판 에셀 옹의 베스트셀러 “분노하라”와 연결하기도 했다(“분노한 사람들”이 이들의 별칭이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아이슬란드 시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중동, 이란, 그리스, 포르투갈의 시위와 연결하기도 했다. 한편 시위 기간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패배하고 인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sup>83)</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08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 사회당은 다시 승리했고 소수파 정부를 구성하였다. 통합좌파는 내부투쟁 격화 이후 3.8%라는 최악의 선거결과를 냈다.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선거로 치러진 2011년 11월 선거에서 사회당은 참패했다. 2008년 43.9% 지지율에서 28.8%로 하락했다. 악화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 1982년 이래 집권당으로서는 최악의 선거결과를 기록했고 사회당으로서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선거결과였다. 대신 인민당은 44.6%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였다. 통합좌파는 2008년 지도부선거에서 대표로 선출된 Cayo Lara가 사회당에 대한 이전의 우호적인 태도에서 대결적인 자세로 전환함으로써 1996년 이후 최고의 선거결과를 냈다.

2014년 5월 유럽연합 선거와 2015년 12월 20일에 치러진 총선결과를 가지고 경제위기와 정당 지지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2011년 선거에서의 인민당의 지지율은 2014년 유럽연합 선거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폭락했다. 이로써 경제위기 이후 중도우파 인민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이 동시에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다. 사회당과 마찬가지로 인민

---

83) 이 운동은 나중에 기존 정당들을 정치적 ‘카스트’라고 비판하면서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을 표방한 ‘포데모스’ (“우리는 할 수 있다”)의 기반이 되었다.

당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5년 12월 총선에서 인민당은 1위를 했지만 지지율이 2011년 44.6%에서 2015년 28.7%로 하락했다. 사회당은 간신히 2위를 했는데 2008년 43.9% 지지율이 2011년에 28.8%로 낮아졌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22%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포데모스는 처음 참가한 총선에서 20.7%의 지지율로 3위를 했고, 카탈루냐 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한, 우파 포데모스라 불리는 ‘시민들’은 13.9%로 4위를 했다. 그리고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통합좌파’는 지지율이 3.9%로 다시 하락했다.

한편 ‘분노한 사람들’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정치세력을 정치적 ‘카스트’(인도의 신분제도)라 비판을 하고 등장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포데모스라는 신생정당은 창당 3개월여만에 유럽연합 선거에서 8% 지지를 얻고, 2015년 1월에는 두 주요 정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1월 23일은 그리스에서 유럽을 휩쓴 긴축정책을 거부한 시리자가 선거에 승리해 집권을 한 직후이고 시리자가 집권공약과는 달리 트로이카와 구제금융안 연장을 합의한 2월 25일 이전이다. 포데모스도 긴축정책을 거부한다고 천명했고, 그리스에서의 시리자 승리가 스페인에서 포데모스의 비약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시리자가 유럽연합 등 트로이카와 애초의 공약에 어긋나는 합의를 하기 시작하자 포데모스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7월에 3차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에 합의를 하자 9월쯤에는 1월의 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포데모스의 지지율은 선거기간 내 상당폭 회복하여 ‘시민들’을 제치고 지지율이 2위인 사회당에 버금가는 3위를 하였다.<sup>8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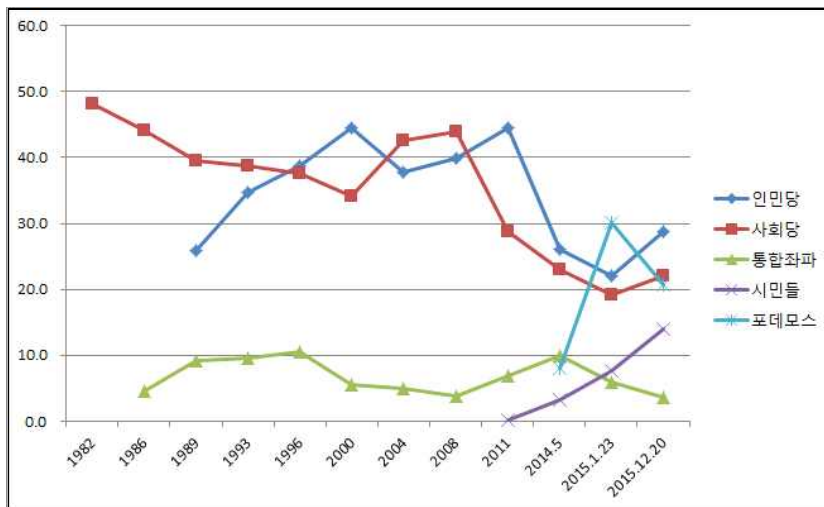
사회당과 통합좌파의 지지율은 유럽연합 선거를 논외로 친다면 2011년

84)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데에는 포르투갈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포르투갈은 10월 총선에서 이전 집권당인 중도우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이전 선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지율로 1위를 하였으나 집권을 하지 못하고 공산당과 좌파블록의 지지를 받는 사회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긴축정책 비판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포데모스는 긴축정책에 가장 비판적이었다.

선거 지지율보다 더 하락했다. 인민당이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1위를 유지한 것은 최근 스페인 경제가 약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페인에서 민주화로의 이행 이후 이어진 양당체제는 거의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 이후 정부구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정부구성에 실패하면 재선거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막대한 대외부채를 지고 있는 유럽 4위의 경제규모인 스페인의 정정불안은 유럽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I -66> 스페인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1년까지와 2015년 12월 20일 지지율은 총선 지지율, 2014년 5월 (2014.5)은 유럽연합 선거 지지율, 2015년 1월 23일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조사기관: Encuestamos) 지지율

## (5) 이탈리아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이탈리아의 주요정당으로는 그 주력이 공산당에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중도좌파 민주당과 해체된 기독교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진이탈리아’가 있다. 최근에는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분류되는 ‘오성운동’이 주요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지역(특히 북부)의 더 많은 자치와, 이탈리아의 연방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극우 경향의 지역주의 정당 북부동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민주당 이외에 공산주의재건당에서 분리된 세력이 중심이 된 ‘좌파생태자유’, 그리고 잔류 공산주의재건당이 있다.

노조 내셔널센터로는 이탈리아 제1노총(CGIL), 가톨릭계 노총(CISL), 그리고 제 3노총(UIL)이 있다. 제 1노총 CGIL은 조합원 578만(2011) 규모고, 제 2노총 CISL은 450만 규모이고, 제 3노총 UIL은 220만 규모이다.

이탈리아 노총들은 정당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노조들 사이의 공동행동이 모색되고, 짝을 맺던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식적 관계는 많이 얹어졌다.<sup>85)</sup> 노조조직률은 37.1%, 단협적용률은 80%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노동조합과 학생들이 노동법 개악과 긴축정책에 항의해 시위를 하고 파업을 단행했다. 우선 2011년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제기한 ‘10월 15일 세계 저항의 날’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20만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19일 25,000, 2014년 4월 13일 15,000명이 긴축반대 시위를 했고, 2014년 10월 25일과 11월 14일에는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가 있었다.

또한 2014년 12월 12일 민주당 렌치내각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일자리 법’에 반대해 제 1노총(CGIL)과 제 3노총(UIL)이 총파업을 단행했다.<sup>86)</sup>

---

85) Rebecca Gumbrell-McCormick and Richard Hyman(2013) 6장을 참조하십시오.

86) 노동법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고, 기업들에게 새로 채용하는 노동자들의 연금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고용을 쉽게 할

또한 2012년 10월 5일과 2013년 11월 15일에는 학생들이 긴축정책에 항의해 시위에 나섰다. 11월 15일 시위는 12월 18일까지 계속되었다.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08년 ‘전진이탈리아’의 전신인 ‘자유의 인민’(PDL)과 북부동맹(LN)의 연정이 꾸려졌다.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도중에 수상 베를루스코니가 사임했다. 경제학자 몬티를 수상으로 하는 기술관료 내각이 들어섰고, 2013년 총선 이후 민주당 수상 후보 베르사니가 정부구성에 실패해 사임하고 나서 대통령 나폴리타노의 초청으로 레타가 대연정을 꾸리게 되었다. 레타가 다시 사임하고 렌치가 수상을 이어받았다.

이런 어지러운 과정을 경과하면서 ‘자유의 인민’(PDL)-전진이탈리아(FI)로 이어지는 베를루스코니의 당은 탈당 분당이 발생했고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성운동이라는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베를루스코니의 연정파트너였던 북부동맹의 지지가 최근에는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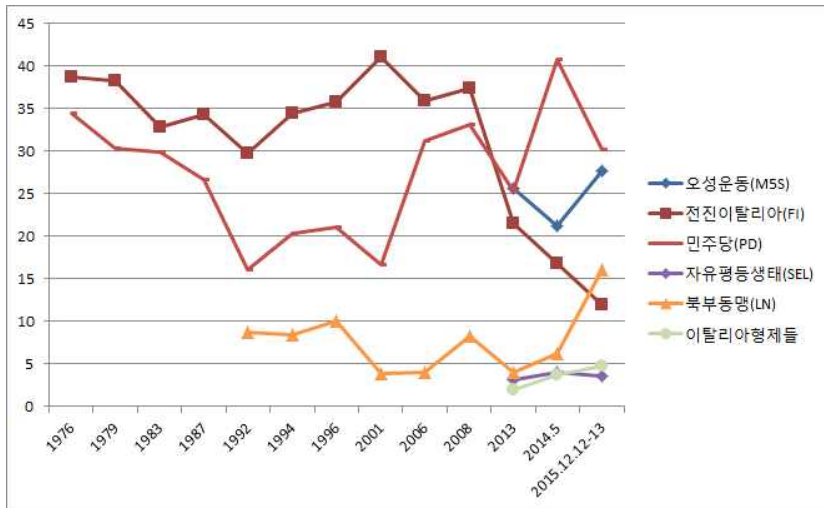
민주당은 2013년 선거 이후 지지율이 꽤 높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경제, 노동법개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도좌파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중도우파의 대표적인 정당 ‘전진이탈리아’는 지지율이 폭락했다. 경제위기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틈새를 비집고 오성운동이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북부동맹이 지지를 높여가고 있다.

---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5년 9월에 발효가 되었다.

<그림 1 -67> 이탈리아 정당 지지율 변화



- 주 1) ‘전진이탈리아’의 2008년, 2013년 때 이름은 ‘자유의 인민’(PDL)((구)전진이탈리아와 민족동맹이 합쳐진 조직)이었고, 2006년까지의 지지율은 ‘(구)전진이탈리아’와 민족동맹 지지율의 합이다. 1992년까지는 1994년 해산된 기독교민주당의 지지율이다.
- 2) ‘민주당’은 1987년까지는 공산당, 1992-1996년은 ‘좌파민주당’, 2001년과 2006년에는 ‘좌파민주주의자들’의 이름이었고, ‘좌파민주당’, ‘좌파민주주의자들’, ‘민주당’으로 오면서 군소정치세력과의 합당 및 합당 반대를 이유로 한 분당이 이어졌다.
- 3) 북부동맹의 2015년(2015.9.7.)의 지지율은 북부동맹의 자매조직인 ‘살비니와 함께(NcS)’의 지지가 합쳐진 것이다.
- 4) ‘자유평등생태’(SEL)의 2014년 유럽연합 선거 지지율은 ‘공산주의재건당’이 포함된 ‘다른 유럽’이라는 선거연합의 지지율이다.

### 3) 비 유로존 복구

#### (1) 스웨덴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스웨덴의 주요 정당으로는 중도좌파 경향의 사회민주당과 중도우파 경향의 온건당이 있다. 최근 극우정당 ‘스웨덴민주주의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진보정당으로는 스웨덴사회민주당 외에 좌파당, 녹색당, 여성주의당이 있다. 스웨덴사회민주당은 1889년에 설립된 당으로서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1917년 당이 분할되어 스웨덴공산당(오늘날의 좌파당)이 만들어졌다.<sup>87)</sup>

스웨덴사민당은 1930-1990년 사이의 모든 총선에서 40-5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1920년대 이후 총선에서 지지율이 35%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2006년 34.99%를 기록한 이래 2010년과 2014년에도 각각 30.7% 31.0%를 기록해 최근 선거에서 세 차례나 35% 이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좌파당은 1917년 스웨덴사회민주당에서 분리하여 스웨덴사회민주주의좌파당으로 있다가 코민테른의 창설멤버가 되었고,<sup>88)</sup> 1921년 스웨덴공산당으로 당명을 개칭했고, 1967년 ‘좌파당-공산주의자들’, 1990년 좌파당으로 계속해서 당명을 바꿨다.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고, 노북구녹색좌파동맹의 일원이다.

극우정당 ‘스웨덴민주주의자들’은 1988년 창당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2.9%, 2010년 5.7%, 2014년 1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스웨덴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로는 스웨덴노총(LO), TCO, Saco가 있다. LO는 생산직을 조직하고 조합원 148만(2012) 규모이다. 자매조직인 덴마크 LO가 사회민주당과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한 반면 스웨덴 LO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TCO는 사무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조합원 125만(2012년) 규모이다. 학생, 공무원, 학위를 가진 전문직을 조직하고 있는 Saco는 62.5만 조합원 규모이다. TCO와 Saco는 특정 정당과의

---

87) 1917년 스웨덴사회민주당을 분할해 나가 스웨덴공산당을 만든 Zeth Höglund와 1929년 스웨덴공산당에서 출당되어 사회당을 만들었던 Karl Kilbom은 둘다 결국 스웨덴사회민주당으로 돌아왔다.

88) 스웨덴사회민주주의당을 나와서 스웨덴사회민주주의좌파당(이후 ‘스웨덴공산당’으로 개칭)을 만들었던 지도자 Zeth Höglund는 1924년 레닌 사후 코민테른의 운행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스웨덴공산당을 나와 코민테른과 독립적인 공산당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이 신설 공산당은 1926년에 스웨덴사회민주당과 합당하였다.

연계가 없다.

노조조직률은 70%(2011년)이고, 단협적용률은 88%(2011년)이다. 산별교섭이 주요하고 지배적이다.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10년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2006년에 이어 다시 승리했다. 반이민 인종주의 정당인 ‘스웨덴민주주의자들’이 최초로 의회에 진입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당에 대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2010년 선거에서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은 협력을 했고 적녹연정을 꾸리려고 했다. 2014년 선거에서는 2010년과는 달리 진보정당들(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은 각자 따로 선거운동을 했다. 금속노조 출신 사민당 당수 Stefan Löfven가 이후 정부에서 중도당, 자유인민당과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반이민 인종주의 정당인 ‘스웨덴민주주의자들’(49석)을 제외하고 진보정당(사민당, 녹색당, 좌파당)과 보수정당의 의석수는 각각 159대 141이었고, 선거 결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소수파 정부가 꾸려졌다. 반이민 인종주의 정당인 ‘스웨덴민주주의자들’이 의석수를 대폭 늘렸고, 진보정당인 여성주의당은 4% 벽을 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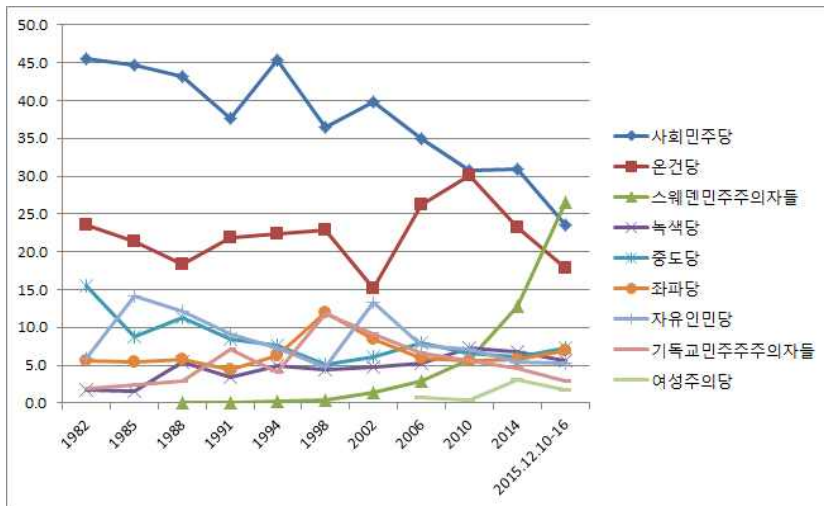
2006년 부터 유럽의 경제위기 전 과정을 온건당이 중심이 된 보수정당 연정이 담당해 오면서 지지율이 약간 하락해 진보정당이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으나 부진한 경제상황에 책임이 있는 보수정당 지지율의 하락이나 이러한 상황에 책임이 없는(?) 진보정당 지지율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스웨덴 경제위기 회복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때문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한편 2014년 진보정당 집권 이후 스웨덴 사민당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는 반면 반이민 인종주의 정당인 ‘스웨덴민주주의자들’의 지지가 치솟고 있다.

덴마크와는 달리 반이민 인종주의 정당과 기존 정당들의 협력관계는 아

직 없으나 2015년 여름 유럽의 ‘이주민 위기’에 따라 ‘스웨덴민주주의자들’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어서(2015년 12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사민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언제까지 이런 배척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림 I -68> 스웨덴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4년까지는 총선 지지율, 2015년 12월(2015.12.10-16) 수치는 여론조사(기관: Sentio) 지지율

## (2) 노르웨이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노르웨이 유력 정당으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노르웨이 최대 정당인 노동당<sup>89)</sup> 이외에 사회주의좌파당<sup>90)</sup>, 적색당이 있다. 그리

89) 1887년에 창당되었고, 1918년 코민테른에 가입했다가 1923년에 탈퇴했다. 그 과정에 소수가 노르웨이공산당으로 분리되어 코민테른에 잔류했다. 노동당은 현재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많은 부분을 수용했고 민영화도 많이 단행했다.

90) 1973년 공산당 일부, 노동당의 친나토정책에 반발해 분리한 사회주의 민중당.

고 농민에 기반한 중도당도 최근에는 노동당과 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노조 내셔널 센타로는 조직 노동자의 반을 점유하면서 조합원 85만 규모의 노르웨이 노총(LO), 공공부문의 전문직을 조직하는 전문직 노총(Unio), 그리고 전문직 연맹(Akademikerne), 직업별 노조 연맹(Yrkesorganisasjonenes Sentralforbund, YS)이 있다. YS는 LO와 경쟁적인데 사무직이 많다. 조직률은 약 52%이고, 단협적용률은 약 70%에 이른다.

생산직, 전문직, 사무직을 대표하는 노르웨이 3개 노총(LO, Unio, YS)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규직 감소, 노동시간 연장, 빈번한 주말노동, 일요일 개점 등을 담고 있는 보수 정권의 ‘노동환경법’ 개정안에 반대해 2015년 1월 18일에 2시간 동안 총파업을 단행했고 전국 200여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슬로에서만 20,0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sup>91)92)</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심각했던 노르웨이에서는 2009년 선거에서 노동당, 사회주의좌파당, 중도당의 중도좌파 연정세력이 득표수에서는 우파에게 뒤졌지만 의석수가 많아서 2005년에 이어 다시 집권하였다. 2013년에는 보수당 중심의 중도우파가 승리하였다.

현재로서는 노동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보수당과 우익인민주의 경

---

민주적 사회주의자-유럽연합가입반대노동자위원회 등 좌파 정치세력의 ‘사회주의자 선거연맹’으로 출발했다가 1975년에 단일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공식적으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여성주의와 생태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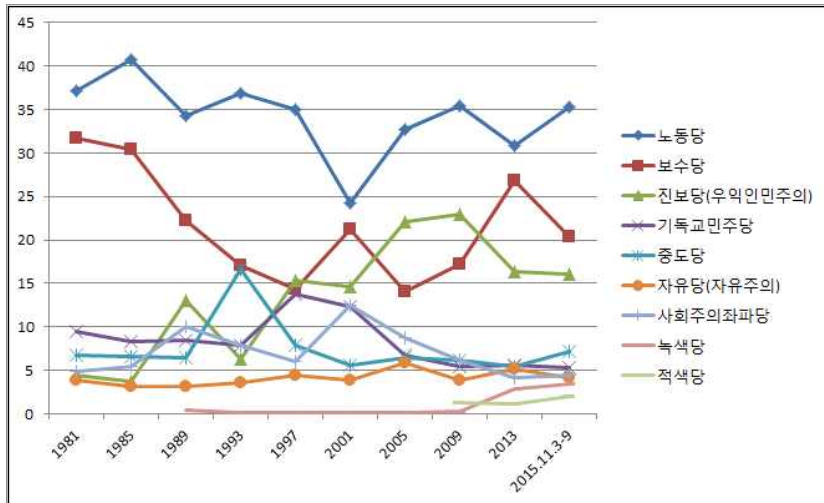
91) UNI(Jan 18, 2015), "Huge strike in Norway after proposed changes to working laws"(<http://www.uniglobalunion.org/news/huge-strike-norway-after-proposed-changes-working-laws>)를 참조하라.

92) CWI(Feb 3, 2015), "One and a half million workers involved in political strike"(<http://www.socialistworld.net/doc/7064>)를 참조하라.

향의 진보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노동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사회주의좌파당의 지지율은 2001년 12.5%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나은 노르웨이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당과 보수당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림 I -69> 노르웨이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3년까지는 총선 지지율, 2015년 11월(2015.11.3-9) 수치는 여론조사(기관: Opinion Perduco) 지지율

### (3) 덴마크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덴마크 주요 정당으로는 1871년에 창당하였고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민주당과 1870년에 농민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중도우파 정당인 ‘좌파, 덴마크자유당’<sup>93)</sup>이 있다. 최근에는 반이민 극우성향의 덴마크인민당<sup>94)</sup>이

93) 이 정당은 출발 당시 사회상황에서는 의회 내에서 귀족계급을 대변하는 ‘우파’에 대항한 ‘좌파’였다.

급부상하고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 적녹연합, 사회주의인민당, 오래 전에 ‘좌파, 덴마크자유주의당’으로부터 갈려나온 사회자유주의당, 그리고 녹색당인 ‘대안’이 있다.

적녹연합은 덴마크 의회 안에서 가장 좌파적 당인데 덴마크 공산당, 좌파 사회주의자들(사회주의인민당으로부터 분리), 사회주의노동자당(제 4인터내셔널 소속)이 1989년에 연합한 정치세력이다.

사회주의인민당은 소련의 헝가리 침공 이후 이를 비판하고 쫓겨나온 세력들이 소련으로부터의 독자노선을 걸을 것을 주장하면서 만든 당이다.

덴마크 노조는 기본적으로는 길드시스템 전통에 따라 직종별로 나뉘어 있다. 노동조합 내셔널 센터로는 LO, FTF, AC가 있다.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LO는 조합원 89만 규모의 노조로 사회민주당과 형식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나 2003년 공식 관계는 끊어졌다. 사무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FTF는 조합원 35만 규모의 노조로 간호사, 교사, 금융노동자들이 주축이다. 전문직을 조직하고 있는 AC는 31만(2014년) 조합원 규모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67%이고(2010년), 단체협상 적용률은 65%이다(2010년).

2013년에 덴마크 교사노조와 지자체 사이의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고, 지자체당국은 중도좌파 정부의 지지하에 학교에 대한 4주간의 직장폐쇄를 단행했다.<sup>95)</sup>

---

94) 덴마크인민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노인에 대한 복지 강화를 주장한다. 즉 덴마크인만을 위한 복지국가가 이들의 지향이다.

95) Helmut Arens and Christoph Dreier(April 24, 2013), "70,000 Danish teachers locked out", World Socialist Web Site(<https://www.wsws.org/en/articles/2013/04/24/denm-a24.html>)와 Education international(30 April 2013), "Denmark: Union dismay as Government intervention ends teachers' lock-out"([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2554](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2554))를 참조하라.

## ② 정치지형의 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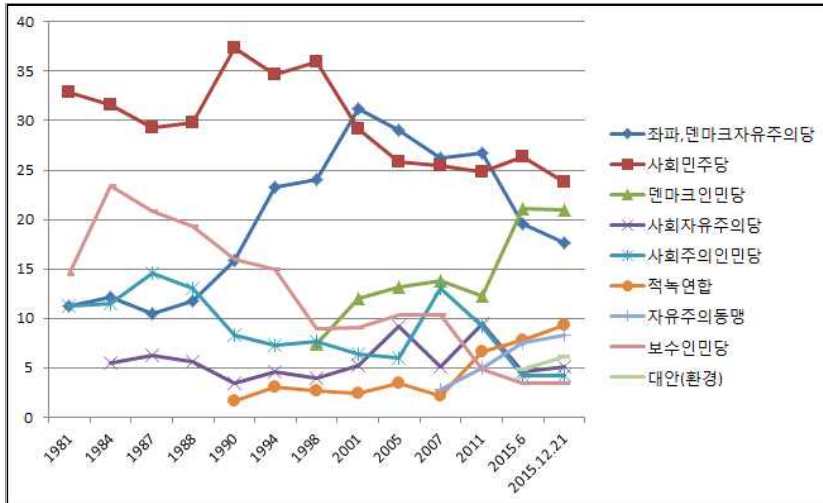
덴마크는 2007년 4사분기에 이어 2008년 1사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 유럽에서 최초로 경기침체에 돌입했다.

2011년 총선에서 진보진영 3개 정당(사회민주당, 사회자유주의당, 사회주의인민당)이 적녹연합의 지지를 얻어 소수파 정부를 꾸렸다. 진보진영 정부에서 긴축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2014년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정당간 지지율 변화가 심한 선거였고 두 주요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좌파,덴마크자유주의당’의 지지가 하락하고 반이민 극우성향의 덴마크인민당이 최초로 전국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선거쟁점은 덴마크인민당이 제기한 것으로 유럽연합 신규가입국들로부터의 ‘복지수혜를 겨냥한 이주’(복지이주: benefit tourism)가 덴마크 복지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쟁점이었다.

2015년 6월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일원인 사회민주당이 지지율과 의원수를 늘렸으나 보수진영 전체로 보면 진보진영 전체보다 의원수가 많아 ‘좌파,덴마크자유주의당’에게 정부구성권이 주어졌다. 보수진영 전체 내부의 의견이 불일치해 ‘좌파,덴마크자유주의당’만의 소수정부가 구성되었다.

최근의 덴마크 정당들의 지지율을 보면 기존의 지배적인 두 정당 중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에 비해 중도우파 ‘좌파,덴마크자유주의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한편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적녹연합의 지지율이 꽤 상승했고, 반이민 극우성향의 정당인 덴마크인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덴마크인민당은 2014년 유럽연합 선거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런 정당이 기존 정당의 배척을 받고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연정협상에도 참가하고 보수정권을 지지해 보수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 -70> 덴마크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5년 6월(2015.6)까지는 총선 지지율, 2015년 12월 21일(2015.12.21.)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Yougov) 결과임.

#### (4) 아이슬란드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아이슬란드 유력 정당으로는 우파 독립당, 농민당에서 출발한 중도우파 정당인 진보당, 그리고 2000년 4개 정치조직(‘사회민주당’, 공산주의적/사회주의적 ‘인민연합’, ‘여성연합’, ‘민중운동’)이 합당을 해 결성한 ‘사회민주주의 동맹’이 있다. 최근에는 2012년에 결성된 초자유주의적인 해적당이 여론조사에서 제 1당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정당으로는 ‘사회민주주의 동맹’ 이외에 ‘사회민주주의 동맹’으로의 합당에 반대한 좌파 정치세력이 결성한 민주사회주의경향의 ‘좌파-녹색 운동’이 있다.

노조 내셔널 센타로는 전체 노동자의 반을 조직하고 있는, 조합원 약 10만 규모의 아이슬란드 노총 (ASÍ)과 조합원 약 22,000 규모의 아이슬란드 공무원노총(BSRB)이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2008년 10월 3개 상업은행이 붕괴되자 매주 국회 앞에서 정권 퇴진 시위가 있었다. 2008년 10월 이후 정부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 산발적인 시위가 있다가, 2009년 1월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발이 되면서 2011년까지 지속적인 대중 시위가 있었다. 시위대는 냄비와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들고 나와 시위를 했다. 이 운동은 새로운 개헌 시도로까지 이어졌는데 시민단체들의 운동과 새 좌파 정부의 결정으로 ‘개헌시민의회’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개헌시민의회에서 만든 개헌안은 의회에까지 제출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었던 이전 정부 수상이 특별 법정까지 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다. 의회가 마련한, 파산한 상업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떠맡게 된 영국과 네덜란드에 진 외채의 상환 방안을 대통령이 반대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의회의 안을 두 차례 다 부결시켰고(첫 국민투표에서는 98%가 반대), 개헌시민의회가 작성하게 될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찬성을 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운동이 활성화하면서 광범위한 직접민주주의와 제한적 실천이 진행된 것이다.<sup>96)</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07년 선거 결과 종래의 독립당과 진보당의 연정이 끝나고 독립당과 사회민주주의동맹의 연정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로 결국 독립당 출신 수상이 물러나고 2009년 조기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2009년 선거에서 그 동안 18년 연속 집권세력이었고 그 동안 계속해서 제 1당이었던 독립당이 선거에서 패배해 최초로 1당의 지위를 ‘사회민주주의동맹’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동맹’은 2007년

---

96) [https://en.wikipedia.org/wiki/2009\\_Icelandic\\_financial\\_crisis\\_protests](https://en.wikipedia.org/wiki/2009_Icelandic_financial_crisis_protests)를 참조하라.

선거에 이어 또 다시 대거 약진한 민주사회주의 경향의 ‘좌파-녹색 운동’과 연정을 구성했다. 아이슬란드에서 최초로 좌파가 집권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치열하게 전개된 대중운동의 효과라 해야겠다.

그런데 좌파의 집권도 잠깐이었고 유럽연합 가입 여부가 쟁점이 된 2013년 선거에서는 다시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한 독립당이 1당이 되었고 2위를 한 중도우파 진보당과 연정을 구성하였다. 긴축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유럽연합 가입에 긍정적인 ‘사회민주주의동맹’은 패배했고, 이전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지만 유럽연합 가입에 비판적인 독립당은 다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럽연합 혹은 긴축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아이슬란드 국민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9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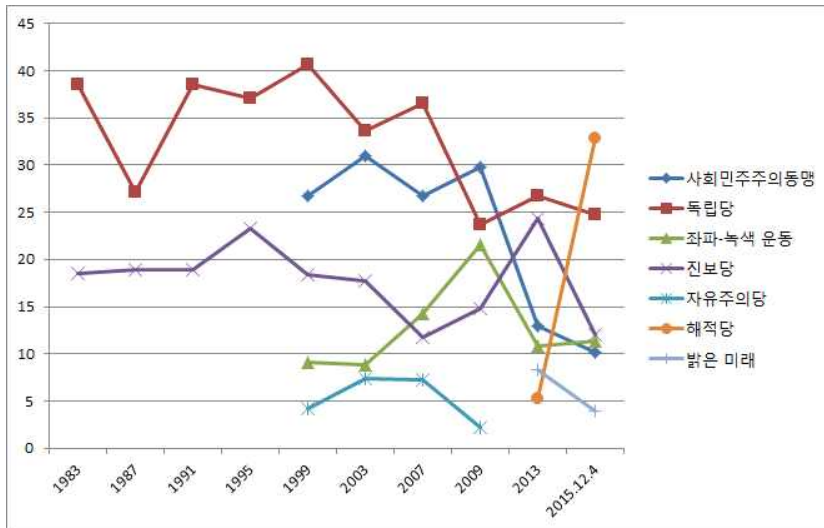
경제위기 와중에 창당한 신생 정당인 ‘밝은 미래’와 ‘해적당’이 5% 한계를 넘어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동맹’과 ‘좌파-녹색 운동’은 지지율이 폭락하여 실권하였다.

한편 2015년 현재 유럽연합에 비판적이고 초자유주의적 경향의 해적당이 지지율을 대거 끌어올려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기존의 유력정당들이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 아이슬란드에서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97) Alda Sigmundsdóttir(April 26, 2013), theguardian, "Iceland's election: voters fear the EU more than a return to the bad old days"(<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apr/26/iceland-elections-voters-fear-eu>)를 참조하라.

<그림 I -71> 아이슬란드 정당 지지율 변화



주) 2013년까지는 총선 지지율, 2015년 12월 4일 수치는 여론조사(기관: Gallup) 지지율

#### 4) 비유로존 서유럽

##### (1) 영국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영국의 주요정당으로는 중도우파 정당인 보수당과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중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당, 반유럽연합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 스코틀랜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스코틀랜드독립당, 녹색당 등이 있다.

영국의 유일 노총으로는 ‘노동조합회의’(TUC)가 있다. 그런데 이 TUC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조합원 63만(2007) 규모의 스코틀랜드노조회의(STUC)가 있고,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괄하는 조합원 60만 규모의 아일랜드노조회의

(ICTU)가 있다. TUC는 노동당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 노조조직률은 1980년 56.3%를 피크로 오늘날 26% 정도로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조직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민간부문 조직률이 14.4%인 반면 공공부문 조직률은 56.3%에 이른다. TUC 가맹 노조의 총조합원수는 1980년 약 1200만에서 현재는 약 61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 11월과 12월에 등록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규모 학생시위가 있었다. 11월 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의 대규모 학생시위에 이어 영국 런던에서 11월 10일에 3만-5만 규모의 대규모 학생시위가 있었다. 11월 24일에는 대학 점거와 시위가 있었다. 11월 30일과 12월 9일에도 런던에서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는 등록금의 대폭 인상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유당 당수 닉 클레그 Nick Clegg가 선거 전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 공약을 했으면서 보수당과 정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이 공약을 어기고 등록금 인상 계획에 찬성한 것도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뒤에서 보겠지만 다음 선거에서 자유당은 참패했다.

2011년 3월 26일 영국노총(TUC)이 조직한,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의 긴축에 대한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다. 25만에서 50만이 참여하였다. 백만 이상이 참여한 2003년 이라크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고, 노동조합이 조직한 시위로서는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30일 연금개약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 200만이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30년 동안 가장 커다란 파업규모로 알려졌다.<sup>98)</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2005년에 중도좌파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제3의 길을 주

---

98) BBC(December 1, 2011), "Public sector strike rallies held across UK"(<http://www.bbc.com/news/uk-15953806>)를 참조하라.

창한 수상 블레어는 이라크전 참전으로 인기가 폭락했다. 그래서 블레어가 도중에 사임하고 고든 브라운이 수상을 이어받았다. 고든 브라운은 경제위기 초기 은행구제를 시행했다. 2010년 5월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당과 자유당이 승리했다. 선거전에서 자유민주당이 선전했고 지지율을 약간 올렸고 득표수로는 창당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이 꾸러졌다.

2015년 5월 선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보수당은 2010년 36.1% 지지에서 36.9% 지지로 지지율을 약간 올렸고 의석은 307석에서 331석으로 늘렸다. 단독으로 과반 325석을 넘어섰다. 노동당은 29%에서 30.4%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의석은 258석에서 232석으로 줄었다. 소선거구제로 스코틀랜드지역에서 의석을 대거 잃었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지율이 23%에서 7.9%로 폭락했다. 영국독립당은 3.1%에서 12.6%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스코틀랜드에서만 선거에 나서는데 전국지지율로 계산하면 1.7%에서 4.7%로 지지율은 약 3%포인트 상승했는데, 의석은 6석에서 56석으로 무려 50석이 늘어났다.

2015년 총선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당은 참패했고, 노동당은 아쉬운 패배를 했으며, 보수당이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비교적 여유로운 승리를 했다. 노동당보다 왼쪽인 스코틀랜드민족당이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싹쓸이 승리를 했으며,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은 소선거구제로 인해 의원수는 1명에 그쳤으나 지지율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합산해 보면 긴축정책을 집행한 보수당과 자유당의 의석수와 지지율은 하락했는데, 그 내부의 분배의 결과가 불균등해 보수당은 상당한 정도의 승리를 한 것으로 귀결되었고, 자유당은 엄청난 패배의 결과를 낳았다.

사실 자유당의 참패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자유당이 2010년 보수당과 연정을 꾸린 이후 깨뜨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 5월 선거에서는 23% 지지를 획득한 자유당의 지지율이 긴축정책이 시작된 2010년 말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아래로 떨어

졌다. 2010년 말에 대학생들의 시위가 몇 차례 대규모로 일어났고 그 타겟이 공약을 어긴 자유당에 맞춰져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유당의 지지율이 폭락했는데 이렇게 하락한 지지율은 그 이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다.<sup>99)</sup>

한편 자유당의 지지율 하락은 스코틀랜드에서 유난히 크고 신속했다. 이 자유당 지지율 하락을 흡수한 정당이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과 지지세가 비등해진 스코틀랜드민족당은 독립투표를 거치면서 노동당을 저 멀리 뒤에 남겨두고 압도적인 제 1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민족당은 긴축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이전 선거에 비해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노동당은 40석을 잃고 자유당은 10석을 잃었는데 이들이 잃은 의석을 스코틀랜드민족당이 전부 거둬들였다. 스코틀랜드에서 보수, 노동, 자유당은 각각 1석밖에 건지지 못했다.

노동당은 지지율이 약간 오르긴 했으나 스코틀랜드에서 40석을 내줘 의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저번 선거와만 비교하면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지율도 의석수도 약간 늘었다.

결국 2015년 선거결과는 자유당과 스코틀랜드민족당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들 정당의 부침에는 2010년 긴축정책에서 비롯한 등록금 반대 학생시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야겠다.

결국 긴축정책/복지 감축 정책 비판이 영국에서도 관철된 셈인데 그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는 자유당에게 타격을 가했고, 그리고 노동당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국의 긴축정책은 중간에 주춤해 졌다(<그림 I -73>를 참조하라).<sup>100)</sup> 그래서 그 이후 경제회복도 약간 빨라졌다. 보수당의 이번 선거에서의 양호한 성적은 긴축정책을 중도에서 중단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연정 초기 가혹한 긴축의 비난은 자유당이 고스란히 떠안았고, 후반의 긴축중단 효과는 보수당이 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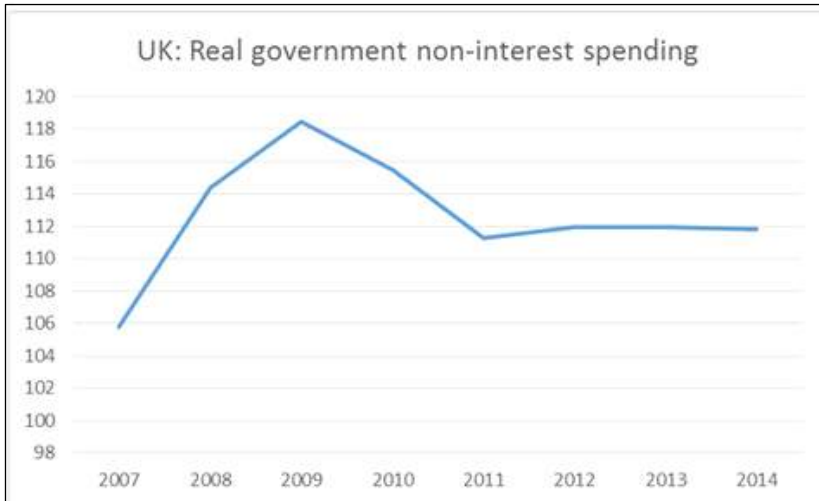
99)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15\\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15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를 참조하라.

100) 긴축정책이 취해졌느냐 여부는 정부지출 규모 아니라 정부지출 규모가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로 얘기된다. 즉 영국의 경우 2012년 이후 정부지출 규모가 감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긴축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 -72> 영국의 실질 이자지불 이외의 정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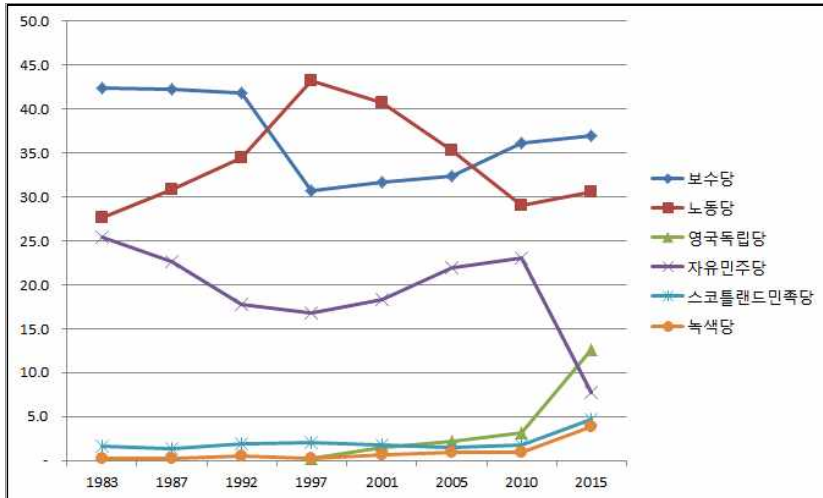


출처: Paul Krugman(2014), "The Return of Expansionary Austerity", The Conscience of a Liberal([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

결국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노동당) 및 중도(자유당)의 쇠퇴, 우경화한 사회민주주의보다 왼쪽 경향의 정당(스코틀랜드민족당)의 약진(비록 스코틀랜드 지역에서이긴 하지만), 극우 정당의 부상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9월에 치러진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는 노동당 내 좌파로 분류되는 코빈이 등장하여 긴축정책을 옹호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부자감세, 공공투자 증대, 국방비 감축, 국가투자은행 설립 등의 정책을 내걸었다. 우경화한 사회민주주의보다 왼쪽 경향의 세력의 부상은 노동당 이외의 좌파세가 현저히 약한 영국에서는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의 좌경화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3> 영국 정당 지지율 변화



주) 총선 지지율

## (2) 스위스

### ① 진보정당 및 노동조합 현황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스위스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이 있다. 그리고 최근 쇠락하고 있는 기독교민주인민당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인 인민당이 있다. 그리고 군소정당으로 녹색당과 보수민주당이 있다.

인민당은 농민당에 뿌리를 둔 보수정당이었는데, 1990년대에 유럽연합 반대, 반이민 지향을 하면서 급성장하였다. 인민당이 2015년 10월 총선에서 얻은 29.4%의 지지율은 스위스 정당 역사상 1개 정당이 얻은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자유민주당은 2009년에 ‘자유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이 합해진 중도우파 정당이고 기독교민주인민당은 중도파 정당이다. 보수민주당은 인민당 중에 온건파가 분리한 정당이다.

진보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sup>101)</sup>과 녹색당, 대안좌파가 있다. 사회민주당은

101) 스위스 사회민주당은 1988년에 창당했고, 국제노동자사회주의당 인터내셔널(2.5인터내셔널 혹은 비엔나 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혹은 베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다.

노조 내셔널센터로는 조합원 38만 5천명의 스위스노총(SGB)과 17만 규모의 Travail.Suisse이 있다. 전자는 사회민주당과 가깝고 후자는 기독교계가 중심이다. 스위스는 다른 유럽나라들과는 달리 노조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2015년 11월 27일 1만명 이상의 농민이 베른에 모여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sup>102)</sup>

## ② 정치지형의 변모

스위스는 다른 나라들보다 늦은 2009년 1사분기에 경기침체의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자유민주당과 기독교민주인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인민당의 지지가 치솟고 있다. 1959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정부를 위한 대연정이 구성되었는데, 연방정부 평의회 집행위원(장관직을 겸하고 돌아가면서 대통령이 된다)의 수가 자유민주당, 기독교민주인민당, 사회민주당 각 2인, 인민당 1인이었다가, 2003년 선거 이후 기독교민주인민당이 1명으로 줄고 인민당이 2인으로 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회에서 인민당 출신 평의회 집행위원이 인민당 지도부에 반한 사람이 선출되면서 인민당이 분열되었고, 인민당 출신 2인이 탈당해서 보수민주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인민당 출신 평의회 집행위원이 없어지게 되었고 인민당은 연정에서 빠지고 야당이 되었다. 결국 2008년에 보수민주당 1인이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인민당 출신이 차지함으로써 현재는 자유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인민당 인민당 보수민주당 5개 정당의 연정이 구성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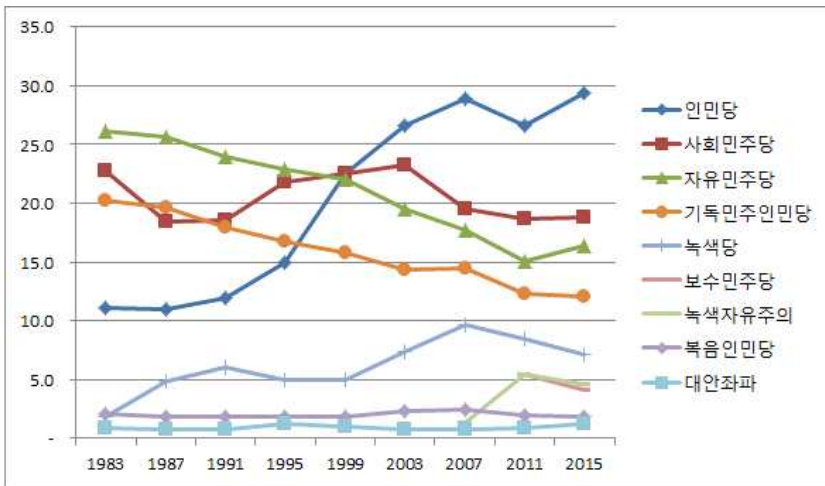
---

른 인터내셔널(제 2 인터내셔널을 복원하겠다는 조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동자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LSI)의 일원이었으며(1927-40),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의 가맹조직이다.

102) euronews(Nov 27, 2015), “Swiss farmers march against austerity”(http://www.euronews.com/2015/11/27/swiss-farmers-march-against-austerity)를 참조하라.

스위스는 유럽 나라들 중 그래도 경제위기 정도가 가장 덜하고 회복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하고, 주요 정당들의 연정으로 정부가 운영되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긴축정책”)과 관련하여 정당의 지지율 변화는 심하지 않다. 다만 유럽연합과 반이민 이슈와 관련하여 인민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그림 I -74> 스위스 정당 지지율 변화



주 1) 총선 지지율

주 2) 자유민주당은 2009년 기존 ‘자유민주당’과 ‘자유주의당’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 지지율도 이 두 정당의 지지율을 합한 결과다.

## 5) 소결

경제위기 이전 유럽의 정치지형은 대체로 신자유주의로 수렴해 있었다. 중도우파 뿐만 아니라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정당들도 큰 차이가 없었다. 독일 사민당 슈레더 정권하에서의 ‘하르츠개혁’과 네덜란드 노동당의 복지국가 개혁과 공기업민영화 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들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정당들은 중도우파 정당들과 대연정을 시도하였다.

사회민주당과 관련을 맺고 있던 노동조합들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당연히 반발하였고, 이들 정당과의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들 중 일부는 사회

민주주의 경향의 정당들보다 좌파적인 유럽좌파당 계열의 정당들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가 심각한 나라들 중에는 국민들의 불만이 파업과 시위로 터져 나왔다. 아일랜드는 20여년만에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고 핀란드에서도 20여년 만에 가장 커다란 파업이 벌어졌다. 노르웨이에서는 최초로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이 전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리고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의 ‘분노한 사람들’의 운동 같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투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으로 집권세력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나거나 그 결과 조기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긴축정책이 일반적으로 취해졌다. 긴축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대량해고 및 근로조건 저하, 연금개악, 대학등록금 인상, 수돗물 가격 인상, 노동법 개악 등이 시도되었고, 자유무역협정도 추진되었다. 이는 중도우파 정권은 물론이고 중도좌파 정권에서도 대체로 동일했다. 그리고 선거 전에는 긴축정책에 비판적이었다가 집권 이후에는 긴축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프랑스 올랑드 정부). 이는 경제위기가 재정위기 형태로 발생한 때문이기도 하고, 유럽차원의 ‘재정협약’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재정협약’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에도 엄격한 긴축정책을 요구해 수요부족의 유럽 각국의 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리거나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 긴축정책으로 정부부채를 줄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긴축적 확장’이라는 동화(童話)는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에서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있었다라면 해당 국가의 성장에도, 그리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 긴축이 불가피한 나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을텐데 사태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긴축정책을 집행한 집권정당은 중도우파 정권이든 중도좌파 정권이

든 예외 없이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경제위기 시기에 집권을 하고 있던 정당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재집권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거의 독일 기민/기사연합만이 예외였는데 이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하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극우 정치세력이나 포퓰리스트 정당의 강한 부상과 유럽좌파당 경향의 정당들의 지지율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극우 정치세력 부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프랑스 국민전선, 오스트리아 자유당, 네덜란드 자유당, 스웨덴 민주주의자들이 해당 나라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인민당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 나라는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도 아니고 유럽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은 나라들이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이 중도좌파 민주당을 위협하는 2위 정당으로 등장했고, 극우 정당인 ‘북부연맹’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극우정당이나 포퓰리스트 정당이라 해도 그 색조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헝가리 조빅당 등 외국인혐오, 반유태인, 대의민주주의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극우정당도 있고, 영국의 독립당, 독일의 ‘독일대안’, 스웨덴의 ‘스웨덴민주주의자들’, 핀란드의 ‘핀란드인당’ 등의 경우 자국문화에 섞이지 않는 외국인 제외, 폭력반대, 자국통화 복귀, 국경통제, 유럽연합 탈퇴 등을 주장하고 있다.<sup>103)</sup>

경제위기 와중에 부상하거나 집권한 유럽좌파당 경향으로는 아이슬란드의 ‘좌파-녹색 운동’, 그리스의 시리자,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아일랜드의 ‘신페인당’, 네덜란드의 ‘사회당’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로존 내 위기국가들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기존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보다 좌파적인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새로운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시리자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강제되는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

---

103) Mark Leonard and José Ignacio Torreblanca (2014), “THE EUROSCEPTIC SURGE AND HOW TO RESPOND TO IT”, ecfr.eu, ([http://www.ecfr.eu/page/-/ECFR98\\_EUROSCEPTIC\\_BRIEF\\_AW\\_\(4\).pdf](http://www.ecfr.eu/page/-/ECFR98_EUROSCEPTIC_BRIEF_AW_(4).pdf))를 참조하라.

수다. 이는 독일 등 정부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유럽의 '재정협약'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이들 나라가 유로를 버리고 자국통화를 다시 채택하는 조건에서나 가능할텐데 전자같은 변화가 가능할지(독일이 선도하거나 독일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할텐데) 아니면 후자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을지 쉽사리 예상을 할 수 없다.

## 5. 결

유럽의 경제위기는 그 정도도 미국보다 심각했고, 더불답에 빠졌으며, 회복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하다. 그리스는 1929년 대공황에서의 미국의 불황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2014년 말 현재까지도 회복으로 돌아서지 못한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있다. 현재까지만 봐도 유럽 많은 나라들은 1929년 대공황 때보다 위기의 심도가 깊고 위기 지속기간이 길다. 주류경제학 일각에서 얘기하는 ‘장기정체’ 혹은 ‘장기불황’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다. 실업율은 폭등해서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고,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부채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는 통화정책의 오류, 인색한 재정지출 규모, 과다한 정부부채, 부익부빈익빈, 평가절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유로화의 문제, 긴축정책,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많은 변수들이 개재되어 있다. 긴축정책을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문제가 긴축정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도 재정위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쟁점은 공무원 대량해고 및 근로조건 저하, 연금개혁, 등록금 인상, 수돗물 값 등 공공요금 인상, 노동법 개혁, 자유무역협정 체결, 외채 지불 거부 등이었다.

총파업과 격렬한 거리시위는 유럽 차원에서, 그리고 일국적 차원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외채지불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두차례,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한 차례, 도합 세 차례의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비록 불리하게 바뀐 의회에서 통과가 되진 않고 있지만 ‘개헌시민의회’ 중심으로 개헌안까지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정권 교체도 활발했다. 아니 기존 지배정당들인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계열 둘 다 혹은 그 중의 하나는 소멸 수준으로 몰락하거나 그 세가 대폭 약화되었다. 대신 신자유주의로 경도된 중도좌파보다 좌파적인 정당이나 세력이 집권을 하거나 정부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그랬고 이후에도 이들 나라 이외에 몇 나라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경화한 영국 노동당은 좌파 코빈이 대표가 되었다. 코빈을 등장시킨 것은 물론 노동당원과 국민들이다. 한편 반이민 인종주의적 정치세력이 비약적으로 세를 확장하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나라도 많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런 변화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미국의 극심한 불평등과 월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가 대세라 일컬어지던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하고 있고, 공화당 경선과정에서 인종주의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긴축정책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자신의 약속을 배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의 시리자 정권이 그렇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대응역량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조직적 실천적 역량에서도 그리고 대안에 있어서도.

그리고 극우 정치세력이 단독으로 집권에까지 이르는 나라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유럽의 극우 인종주의 세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나치당과는 다른 비교적 연성화한 극우 세력인 경우가 많지만 그 세력 범위가 전 유럽에 걸쳐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장기정체의 경제위기가 유럽민중들과 극우세력을 더욱 극단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유럽의 경제위기는 정치에 있어서 유동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고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극우로 치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비판과 더불어 이에 그치지 않는 유럽차원의 진보적인 대안의 실천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단행본>

장석준(2014),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개마고원

Rebecca Gumbrell-McCormick and Richard Hyman(2013), *Trade Unions in Western Europe: Hard Times, Hard Choices*, Oxford University Press

Sassoon, Donald(2014), 『사회주의 100년 20세기 서유럽좌파정당의 흥망성쇠』(강주현, 김민수, 강순이, 정미현, 김보은 번역), 황소걸음(원서출판 1996)

### <웹 뉴스기사와 자료들>

Alda Sigmundsdóttir(April 26, 2013), theguardian, "Iceland's election: voters fear the EU more than a return to the bad old days". Retrieved from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apr/26/iceland-elections-voters-fear-eu>

Aljazeera america(April 12, 2014), "Thousands in Paris and Rome protest austerity measures". Retrieved from <http://america.aljazeera.com/articles/2014/4/12/rome-paris-anti-austerityprotests.html>

Andrew Rettman(27. APR 2012), "Opposition parties rescue Dutch budget plan, euobserver". Retrieved from <https://euobserver.com/economic/116063>

BBC(December 1, 2011), "Public sector strike rallies held across UK". Retrieved from <http://www.bbc.com/news/uk-15953806>

Bloomberg(2015), "Finland Should Never Have Joined Euro, Foreign Minister Says". Retrieved from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12-22/finland-should-never-have-joined-euro-foreign-minister-says>

Common Dreams staff(May 19, 2012), "25,000 Rally Against Austerity in Germany", Common Dreams. Retrieved from <http://www.commondreams.org/news/2012/05/19/25000-rally-against-austerity-germany>

A. Crimmann, F. Wiessner, L. Bellmann(2010),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25: The German work-sharing scheme: An instrument for the crisis", ILO. Retrieved from [http://www.ilo.org/public/libdoc/ilo/2010/110B09\\_105\\_engl.pdf](http://www.ilo.org/public/libdoc/ilo/2010/110B09_105_engl.pdf)

Coen Teulings and Richard Baldwin(eds.), *Secular Stagnation:Facts, Causes, and Cures*,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 2014. Retrieved from [http://www.voxeu.org/sites/default/files/Vox\\_secular\\_stagnation.pdf](http://www.voxeu.org/sites/default/files/Vox_secular_stagnation.pdf)

CWI(Feb 3, 2015), "One and a half million workers involved in political strike". Retrieved from <http://www.socialistworld.net/doc/7064>

Danske bank(2014), "Austerity hits growth in Finland". Retrieved from

[http://danske-research.danskebank.com/link/ResearchFinnishFiscalPolicy270814/\\$file/Research\\_FinnishFiscalPolicy\\_270814.pdf](http://danske-research.danskebank.com/link/ResearchFinnishFiscalPolicy270814/$file/Research_FinnishFiscalPolicy_270814.pdf)

Education international(30 April 2013), "Denmark: Union dismay as Government intervention ends teachers' lock-out". Retrieved from [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2554](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2554)

euronews(09/04/15), "Anti-austerity, anti-Macron Law: Thousands protest on streets of France". Retrieved from <http://www.euronews.com/2015/04/09/anti-austerity-anti-macron-law-thousands-protest-on-streets-of-france/>

Helmut Arens and Christoph Dreier(April 24, 2013), "70,000 Danish teachers locked out", World Socialist Web Site. Retrieved from <https://www.wsws.org/en/articles/2013/04/24/denm-a24.html>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2): 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 Retrieved from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2/pdf/text.pdf>

IMF(2015), 『Fiscal Monitor(October 2015): The Commodities Roller Coaster A Fiscal Framework for Uncertain Times』. Retrieved from <ht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5/02/pdf/fm1502.pdf>

Mark Leonard and José Ignacio Torreblanca (2014), "THE EUROSCEPTIC SURGE AND HOW TO RESPOND TO IT", [ecfr.eu](http://www.ecfr.eu). Retrieved from [http://www.ecfr.eu/page/-/ECFR98\\_EUROSCEPTIC\\_BRIEF\\_AW\\_\(4\).pdf](http://www.ecfr.eu/page/-/ECFR98_EUROSCEPTIC_BRIEF_AW_(4).pdf)

Matt Steinglass (2013), "Dutch mood shifts against austerity and the EU", Fina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www.ft.com/intl/cms/s/0/e0cef102-0040-11e3-9c40-00144feab7de.html#axzz3yc2Vz1IX>

Michael Sommer(2013), "A Marshall Plan for Europe". Retrieved from <http://column.global-labour-university.org/2013/05/a-marshall-plan-for-europe.html>

OECD(2009), "The Effectiveness and Scope of Fiscal Stimulus",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09』.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co/outlook/42421337.pdf>

Patricia Kowsmann(Oct. 4, 2015), "Portuguese Coalition Loses Parliamentary Majority", The Wallstreet Journal. Retrieved from <http://www.wsj.com/articles/portugals-ruling-coalition-finishes-first-in-parliamentary-election-exit-polls-show-1443987627>

Paul Krugman(2010), "The Icelandic Post-crisis Miracle", The Conscience of a Liberal. Retrieved from [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

Paul Krugman(2011), "The Mistake of 2008", The Conscience of a Liberal. Retrieved from [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

Paul Krugman(2012), "Europe's Economic Suicid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12/04/16/opinion/krugman-europes-economic-suicide.html?\\_r=0](http://www.nytimes.com/2012/04/16/opinion/krugman-europes-economic-suicide.html?_r=0)

Paul Krugman(2013), "Melancholy Danes". The Conscience of a Liberal. Retrieved from [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

Paul Krugman(2014), "The Return of Expansionary Austerity", The Conscience of a Liberal. Retrieved from [http://krugman.blogs.nytimes.com/?\\_r=0](http://krugman.blogs.nytimes.com/?_r=0)

Peter Spiegel(May 14, 2014), "How the euro saved", Fina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www.ft.com/intl/cms/s/0/f6f4d6b4-ca2e-11e3-ac05-00144feabdc0.html#axzz3mGGesocE>

Richard Milne(2014, May 7), "Riksbank raises concern on household debt", Fina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www.ft.com/intl/cms/s/0/670e9564-d5ee-11e3-a239-00144feabdc0.html#axzz3HUx6Fzde>

RT(15 Nov, 2014), "'Austerity kills': Thousands rally against French President Hollande in Paris (VIDEO)". Retrieved from <https://www.rt.com/news/205911-paris-austerity-rally-hollande/>

RT(18 Sep, 2015), "30k Finns protest govt-planned cuts, nationwide strike grinds country to a halt (PHOTOS, VIDEO)". Retrieved from <https://www.rt.com/news/315843-finland-nationwide-strike-cuts/>

SPIEGEL ONLINE International(Nov 14, 2012), "'European Day of Action': Anti-Austerity Protests Spark Violence". Retrieved from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anti-austerity-protests-spark-violence-in-european-countries-a-867316.html>

The economist(2012), "Finland and the euro crisis Northern

gripes". Retrieved from <http://www.economist.com/node/21560865>

theguardian(March 29, 2012), "Spain general strike begins". Retrieved from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2/mar/29/spanish-general-strike-begins>

theguardian(Nov 9, 2015), "Portuguese Socialist party to vote to oust minority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nov/09/portuguese-socialist-party-to-vote-to-oust-minority-government>

<Wikipedia 검색어들(검색일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Wikipedia, "Anti-austerity movement",  
[https://en.wikipedia.org/wiki/Anti-austerity\\_movement](https://en.wikipedia.org/wiki/Anti-austerity_movement)

Wikipedia, "Blockupy movement",  
[https://en.wikipedia.org/wiki/Blockupy\\_movement](https://en.wikipedia.org/wiki/Blockupy_movement)

Wikipedia, "Cordon sanitaire",  
[https://en.wikipedia.org/wiki/Cordon\\_sanitaire](https://en.wikipedia.org/wiki/Cordon_sanitaire)

Wikipedia, "European Central Bank",  
[https://en.wikipedia.org/wiki/European\\_Central\\_Bank#Long-term\\_refinancing\\_operation](https://en.wikipedia.org/wiki/European_Central_Bank#Long-term_refinancing_operation)

Wikipedia, "Fiscal Compact",  
[http://en.wikipedia.org/wiki/European\\_Fiscal\\_Compact](http://en.wikipedia.org/wiki/European_Fiscal_Compact)

Wikipedia, “2009 Icelandic financial crisis protests”,  
[https://en.wikipedia.org/wiki/2009\\_Icelandic\\_financial\\_crisis\\_protests](https://en.wikipedia.org/wiki/2009_Icelandic_financial_crisis_protests)

Wikipedia, “Irish general election, 2016”,  
[https://en.wikipedia.org/wiki/Irish\\_general\\_election,\\_2016](https://en.wikipedia.org/wiki/Irish_general_election,_2016)

Wikipedia, “Mario Draghi”,  
[https://en.wikipedia.org/wiki/Mario\\_Draghi](https://en.wikipedia.org/wiki/Mario_Draghi)

Wikipedia, “Opinion polling for the 2015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15\\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15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

Wikipedia,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https://en.wikipedia.org/wiki/Outright\\_Monetary\\_Transactions](https://en.wikipedia.org/wiki/Outright_Monetary_Transactions)

Wikipedia, “Workers’ Commissions”,  
[https://en.wikipedia.org/wiki/Workers%27\\_Commissions](https://en.wikipedia.org/wiki/Workers%27_Commissions)

Wikipedia, “2009 student protests in Austria”,  
[https://en.wikipedia.org/wiki/2009\\_student\\_protests\\_in\\_Austria](https://en.wikipedia.org/wiki/2009_student_protests_in_Austria)

그 외 Wikipedia 검색어들,  
“Next German federal election”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y”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The Left (Germany)”  
“Alliance '90/The Greens”  
“Christian Social Union in Bavaria”  
“Free Democratic Party (Germany)”  
“Alternative for Germany”  
“West German federal election, 1983”  
“West German federal election, 1987”  
“German federal election, 1990”  
“German federal election, 1994”  
“German federal election, 1998”  
“German federal election, 2002”  
“German federal election, 2005”  
“German federal election, 2009”  
“German federal election, 2013”

등 다수

<유럽 노동조합 자료 웹사이트>

Eurofound Working life country profiles

<http://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comparative-information/working-life-country-profiles>

<경제통계 기관들>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FRED(<https://research.stlouisfed.org/fred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http://www.ons.gov.uk/ons/index.html>)

Swiss Statistics(<http://www.bfs.admin.ch/bfs/portal/en/index.html>)

Trading economics(<http://www.tradingeconomics.com/>)

## **Ⅱ.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 - 그리 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 1. 서

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는 몇 가지 계기를 통해 약화되었다. 첫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동맹 정당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경향의 동맹 정당의 약화, 해체, 전환이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이념적, 정치적 지향을 지닌 노동조합 간 공동행동이다. 노동조합과 정당 간 동맹관계의 약화라는 역사적 경향은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역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2007-2009년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남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부채위기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남부 유럽,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투쟁이 분출하고 그 결과 기존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정당과 스스로 분별 정립하는 새로운 좌파 정당이 등장했다. 새로운 정당은 노동조합-정당 동맹관계라는 측면에서도 그 외부에 존재한다.

그리스에서 시리자의 집권은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전환한 민주당을 논외로 한다면) 공산주의 운동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이 서유럽에서 집권한 최초의 사례다. 시리자는 과거 공산당에 뿌리를 둔 정당이 참여한 유럽 차원의 연합체인 유럽좌파당(Party of European Left)에 참가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자의 행보는 새로운 좌파 정당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글은 먼저 유럽 전반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현황을 북유럽, 중부유럽, 남부유럽, 영국-아일랜드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뿌리를 둔 정당의 현황도 살펴본다. 그 후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금융위기 이후 사회운동의 분출과 새로운 좌파 정당의 부상과 그 위기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좌파 전략을 케인즈주의 전략과 급진적 대안으로 대별하여 검토한다.

## 2. 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

역사적으로 노동조합 대부분은 특정한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공유했다.<sup>1)</sup>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일체성은 현재 거의 보편적으로 약화되었다.

노동조합과 동맹 정당은 상호의존적인 조직으로서 삼쌍둥이와 같다는 분석이 존재했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분류하려는 여러 시도도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분류법이 있다. 첫 번째는 ‘레닌주의 모델’로 정당이 노동조합의 정책과 활동을 통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영국 사례로 상당히 예외적인데 노동조합이 노동당을 건설한 경우다. 세 번째는 상당히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 유형인데, ‘상호의존성과 공생’이 그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정당과의 어떤 동맹을 거부하는 경우다. 여기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해야 하는데, 몇몇 국가에서는 기독교민주주의 성향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와 지향은 산업화의 전개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친밀한 상호의존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느슨한 지지 관계로 바뀌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결별로 전환되었다.

역사적 사례를 들자면, 20세기 초에 독일 노동조합은 사회민주당의 헤게모니를 거부했다. 그 후 몇몇 국가에서 기독교 노동조합은 교회와 정당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지향의 노동조합이 모체 정당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 선봉이 된 사례는 이탈리아다. 1970년대 초반 CGIL이 경쟁적인 두 총연맹과의 단결을 모색하면서 비양립성

---

1) 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최근 관계에 대해서는 Rebecca Gumbrell-McCormick and Richard Hyman(2013), *Trade Unions in Western Europe: Hard Times, Hard Choices*, Oxford University Press의 6장, Unions and Politics: Parties, Alliances, and the Battle of Ideas를 참조했다.

(incompatibilità) 원칙에 합의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동시에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이처럼 정당과 노동조합의 공식적 구별이 있었으나 밀접한 연락 관계는 허용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세 가지 핵심적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변화다. 노동조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퇴색되었다. 세속화로 인해 과거 기독교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잠식되었다. (유일한 예외는 벨기에의 ACV/CSC와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독일의 CNV다.) 가장 극단적인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거의 반세기 동안 정치를 지배했던 기독교민주주의 세력은 1990년대에 붕괴하였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대규모 공산당이 존재하던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프랑스공산당(PCF)에 대한 선거지지도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2% 아래로 하락했고, 2012년 선거에서는 ‘좌파연합’이라는 우산조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이탈리아에서 공산당(PCI)은 1991년에 해산했고,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서 현재에는 민주당(PD)의 지배적 분파가 되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탈리아공산당의 소수 좌파는 ‘공산주의재건당’을 건설했고,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2008년 선거에서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 기독교 노동조합과 공산주의 노동조합은 사회민주주의 형태를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 이미 사회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위기가 나타난 상태다.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는 유럽 노동조합의 위기와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 변화는 구조적이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은 육체노동자를 핵심 지지층으로 구성했다. 제조업과 채취산업의 쇠락, 화이트칼라와 전문직의 성장, 교육수준 상승은 노동조합과 정당 양자에 도전이 되었다. 다수의 노동조합은 확장하는 직업부문에서, 특히 민간부문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충원에 성공하더라도 조합원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희석되는 결과를 낳았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분리된 총연맹이 화이트칼라 직업군과 대졸전문직을 조직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자 했다. (물론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전형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다.) 많은 연구자는 구조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상호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간주한다.

세 번째 변화는 신자유주의의 진전이다. 국제경쟁력을 추구하고 공공재정을 억제하고 케인즈주의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며 ‘작은 정부’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중도우파뿐 아니라 중도좌파의 특징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정당-노동조합 결합에 불가피한 압력을 가했다. 정당과 노동조합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노동조합과 정당의 역사적 관계가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대부분 상실했다면 오직 관성만이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계가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는 과정이 어떤 통일성을 보였던 것은 아니고,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여러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쇠퇴하며, 대안 좌파 또는 녹색 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두 집단의 합은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과 같거나 능가했다. (물론 투표율이 낮았고, 사민당에 대한 항의 투표의 성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불완전한 지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09년 독일 의회 선거에서 동독 지역의 조합원은 1/4 미만이 독일사민당에 투표한 반면, 1/3이 좌파당(die Linke)에 투표하였다. 독일 전체적으로 좌파 정당과 녹색 정당의 득표를 합하면 독일사민당과 거의 같았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에서 우파 민족주의 정당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모았다.

유럽 주요국의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II -1> 유럽 주요국 노동조합-정당 관계

| 나라    | 노동조합-정당 관계                                                |
|-------|-----------------------------------------------------------|
| 스웨덴   | 1987년 노총 LO, 정당 사회민주노동자당(SPA) 집단가입 중단                     |
| 덴마크   | 2003년 노총 LO, 정당 사회민주당(A) 공식적 관계 단절                        |
| 중부    | 전후 노총 DGB 재건 과정에서 정당/정치 중립성 선언                            |
| 오스트리아 | 2008년 연방노조는 사회민주당 지도부 직위(의원)를 맡지 않기로 합의                   |
| 네덜란드  | 1970년대 노총 NVV가 3대노총 통합에 참여하며 노동당(PvdA)과 거리두기              |
| 벨기에   | 노총 ABVV/FGTB 사회당과 연계 유지, 정당 집행부에 자문                       |
| 프랑스   | 노총 CGT, 2003년 정치중립성을 선언                                   |
| 이탈리아  | 노총 CGIL, 1970년대 초반 3대노총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당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선언 |
| 영국    | 노동조합, 노동당에 대한 집단적 가입을 유지 (일부 노조는 탈퇴, 또는 출당)               |
| 아일랜드  | 노총 SIPTU, 노동당에 집단 가입을 유지                                  |

## 1) 유럽 북부 그룹: 스웨덴과 덴마크

북유럽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동안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육체노동자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 총연맹 간 밀접한 제도적 관계가 있었다. 스웨덴에서 1970년대에 사회민주노동자당(SAP)이 노총(LO)과 충돌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그 관계에 긴장이 형성되었다. LO 조합원 중에서 SAP에 투표하는 비율이 1980년대에 65~70%에서 1990년대에 50%로 하락했고, 1998년에 이르러 20%는 좌파당을 지지했다. LO는 1987년에 SAP 집단가입을 중단했으나, 일부 지역 노동조합 지부는 여전히 제휴관계를 유지했고, 여전히 총연맹은 정당 집행부 구성원을 추천한다. 2006년 강력한 우익 정당이 부상하자 LO와 정당의 관계가 다소 회복되었다.

덴마크에서도 역사적으로 노총(LO)과 사회민주당(A) 간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인기를 잃었다. 정당과의 공식적인 관계 때문에 노동조합을 떠나는 조합원이 늘었다. 그에 따라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노총도 2003년에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했는데, 역시 상당수 개별 노동조합은 정당과 제휴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우익 정부는 자신의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서 대한 노동조합의 찬성을 얻고자 했다. (사회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였다.) 이는 노동조합 지도부에 딜레마를 안겼다.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협상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원하지 않는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었다.

## 2) 유럽 중부 그룹: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중부 그룹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기독교민주주의 성향의 노동조합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그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기독교민주주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일반적 표준이 되었다. (독일은 예외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전후 노동조합의 재건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분할을 초월했다. 독일에서 이는 공식적인 정당 또는 정치 중립성을 수반했다. 물론 노동조합 지도자는 항상 사회민주당 당원이었다. (독일 통합서비스노동조합(ver.di) 의장 프랑크 브시르스케는 녹색당 당원이다.)

관습에 따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의 집행체계 내에서 소수 의석은 조직적 분파인 기독교민주피고용인연합(CDA)에 배정한다. 이는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6년간 이어진 콜 정부(1982-1998)에서 노동부 장관 노베르트 블뤼름은 CDA의 지도자이자 금속노조(IG Metall) 조합원이었다. 하지만 정당과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은 쇠퇴하였고, 현재 금속노조 집행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사민당 의원 대부분과 기독교민주연합의 상당한 소수 의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했고, 현재 정치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력서를 꾸미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력 노동조합은 최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첫째, 독일 적녹연정기(1998-2005년) 노동조합과 정당에서 핵심적인 유권

자 집단으로서 전통적인 육체노동자가 규모면에서의 중요성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 충성도도 하락했다. 둘째, 정부의 ‘아젠다 2010’ 개혁은 노동조합과 심각한 분쟁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셋째, 좌파 경쟁자 정당이 사민당의 쇠락을 대가로 지반을 획득했다. 상당수의 지역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좌파당을 지지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노총(ÖGB) 내부의 정치적 다원주의는 준공식적 분파 구조로 나타난다. 이는 조합원 지지에 따른 지도부 직위 분배로 표현된다. (노동자평의회 선거에서 각각 분리되어 제출되는 명부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다.) 오스트리아 사민당(SPÖ)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선거에서 3분의 2를 득표하며, 기독교민주주의 성향의 오스트리아 인민당(ÖVP)이 그 뒤를 잇는다. 이는 여당 또는 연립정부 내에서 노동조합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보다 더 강하다.) 제도화된 ‘사회적 파트너십’이라는 예외적 전통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노동조합 최고 지도자는 대개 의회 의원이기도 하며, 정당의 집행위원회에서 직위를 맡는다. 오스트리아도 대개 이러한 경향을 따른다.

2008년 새로운 사민당 주도 정부는 노동부 장관으로 오스트리아노총의 장 루돌프 훈트스토퍼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현재의 노동조합-정당의 친밀성이 과도하다고 간주한다. 긴축 시대에 정부는 점점 더 인기 없는 정책을 추구하며, 정부의 활동에 연방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방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방어하게 하고 조합원과 시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민당/연방노조의 정치에 대한 환멸은 선거에서 극우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다. 2009년 선거에서 극우세력은 거의 30%의 득표를 얻어서 인민당을 능가했고 사민당에 필적했다. 2008년 사민당과 노총의 집행부는 서로 지도부 직위를 맡는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데 합의했다.

전후 수십 년간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지닌 세 개의 조직에 의해 지배되었다. 가장 큰 네덜란드노동조합연합(NVV)은 온건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배경에서 발

전했고, 노동당(PvdA)과 비공식적이지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톨릭 성향의 네덜란드노동운동연맹(NKV)과 개신교 성향의 네덜란드기독교 노동조합전국연맹(CNV)은 기독교 민주주의 성향의 정당들과 각각 연계를 맺었다. (기독교 민주주의 성향의 정당들은 그 후 통합했다.) 1970년대에 세 노동조합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CNV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 노동조합은 1981년 네덜란드노동조합연맹(FNV)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통합은 PvdA와 완전히 거리를 둘 것을 요구했으나 PvdA는 여전히 FNV 조합원과 간부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폴더 모델(폴더는 간척지라는 뜻이다)은 합의된 공공정책에 대한 헌신을 동반했으며, 모든 총연맹은 최고 수준의 양자협상, 삼자협상에 강력히 개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난 20년간 반복적으로 긴장에 빠졌다. 이는 복지체제의 삭감에 기인한 것이고, 복지삭감은 노동당이 소수파 파트너로 참여한 정부에 의해 강제되었다. 최근에 FNV는 더욱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적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당을 포함해) 정치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과 결합하며, 조합원이 다른 좌파 정당(특히 사회당(SP))이나 극우정당 '자유를 위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벨기에는 유럽 남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나 노동조합이 이데올로기적 지주에 따라 강력히 분할된 채로 남아 있는 국가에 속한다. 물론 정당과의 관계는 복잡한데 각각 분리된 정당구조와 프랑스어 공동체와 네덜란드어 공동체 사이 교차 분할도 그 하나의 원인이다. 가장 큰 총연맹인 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ACV/CSC)은 기독교 노동자운동 ACW/MOC의 일부분이며 이를 통해 기독교민주주의 정당과 연계를 맺는다. 현재 기독교민주주의 정당은 중도우파 성향의 '플라망어 공동체 기독교민주주의당'(CD&V)과 중도파 성향의 프랑스어 공동체 '인본주의적 민주주의 센터'(cdH)로 구성되어 있다. MOC는 1972년 정치적 다원주의를 채택한 반면, ACW는 CD&V와 특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총연맹은 간부가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유지했으며, 지도부는 동맹 정당과 거리를 유지

했다. 그들은 1990년대에 데하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충돌했으며, 현재 CD&V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벨기에노동총동맹(ABVV/FGTB)은 전통적으로 사회당과 연계를 맺었는데, 사회당은 현재 지역적으로 사회당(PS)과 ‘또다른 사회주의와 진보’로 분할되었고, 노동조합 지도부는 양 정당 집행부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다. 세 번째 훨씬 작은 총연맹은 전통적으로 자유당과 연계를 맺었으나, 1961년 자유당이 반노동조합 강령을 채택하면서 1962년 노동조합이 정당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했다.

한편으로 상층 단체협상은 정부의 보조금을 필요로 하거나 (2008년 합의된 것처럼 단기 노동에 대한 보조금 제공)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는 예를 들어 입법을 통해 종종 단체협상 과정에 강제적으로 간섭한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축함으로써 상층 단체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상당히 크지만, 노동조합은 이러한 체계에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 3) 남부 유럽 그룹: 프랑스와 이탈리아

프랑스의 노사관계는 언제나 고도로 정치화되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가는 법이나 규제를 통해 임금, 노동시간, 보건안전에 대한 규범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의 경우 다른 사회적 행위자에게 맡겨졌던 영역이다. 공식적으로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지만 (이는 대부분 국가가 단체협약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그 실질적 영향은 법적 결정력보다 훨씬 더 적다. 노동법은 광범위한 범위의 고용조건을 정의한다. 전국최저임금(SMIC)은 단체협약의 참조점이다. 노동조합은 국가기구의 복합적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특권적 역할과 연관된 보조금에서 그들 자원의 대다수를 끌어온다.

또한 정당 정치 지형도 예외적이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처럼 전후 기간 동안 공산당이 좌파에서 지배적 역할을 했고, 다수 노동조합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따라서 좌파에서 대규모 포괄정당(catch-all party)가 존재하지 않

았다. 사회당(PS)은 다른 국가처럼 대규모 노동자계급 대중 기반을 지닌 사회민주당으로 존재한 적 없다. 분할된 노동조합운동은 전후 시기에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고 결코 사회민주주의적 정체성을 공유한 적이 없다. (물론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와 ‘노동자힘’(FO)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 지향으로 얘기할 수 있다.)

프랑스공산당(PCF)이 쇠락하면서 CGT는 점점 단체협약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타협은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2009년 CGT 지도부가 선언한 바다. 2003년 CGT는 공산당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1세기 이전에 CGT가 정당 정치 중립성을 채택한 것으로 복귀했음을 의미했다. (정치 중립성은 1948년 노동자힘이 결성 당시에 채택했던 바이기도 하다.) CFDT는 1970년대에 사회당이 긴밀했지만, 1978년에 정치적 지지에 관한 입장을 전환했다.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테랑을 지지한 이후 선거에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입장은 어느 정도 모호한데, 최근 CFDT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립성도 아니고, 당파성도 아니다.” 역으로 연대단결민주(SUD)는 반자본주의 정당과 비공식적 연계를 맺고 있는데, 그 정당들은 최근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노동조합이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에서 여전히 국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과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려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도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특권적인 교섭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전투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냐를 두고 분할되어 있다. CFDT는 전자를 선호한다. 반면 CGT와 FO, 특히 SUD는 가두에서의 저항을 더욱 지향하는 편이다.

이탈리아 노동조합이 직면한 정치적 환경 변화는 중요한 측면에서 프랑스와 비교된다. 프랑스에서 공산당의 득표는 1960년대까지 사회당보다 훨씬 높았지만, 1970년대부터 상황이 역전되었고 공산당의 득표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은 (분할된)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당들보다 훨씬 높았고, 1976년 선거에서는 거의 33%의 득표를 얻었다. 1990년대 초반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탈리아사회당(PSI)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고, 선거 득표가 붕괴하여 1994년 해산되었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해산되었으나, 공산당의 후신은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의 강력한 소수분파와 연계된 공산주의재건당(PRC)을 논외로 한다면) 좌파의 유일한 주요 정당을 구성했다. 이와 대비하여, 1948년에 창립된 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CISL)은 카톨릭 노동조합 전통을 반영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했다. 1960년대 CISL은 ‘비양립성’ 원칙을 수용했다. (노동조합 간부는 정치적 공직을 맡지 않는다는 원칙.) 세 번째 주요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연합(UIL)은 CGIL 탈퇴파로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노조다. 세 개의 노총이 정당으로부터 공식적 자율성을 획득하는 변화가 있었고, 프랑스에 비해 단체협상을 향한 더 효과적인 전환이 있었으나 비공식적으로 밀접한 연계가 남아 있고 정치영역에는 여전히 공동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1970년대부터 이탈리아 노사관계에서는 정치적 교환이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정치적 교환이 이뤄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불안정한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노동조합이 승인하는 것이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1990년대 연금개혁이라는 거대한 이슈의 경우에 그러했다. 이탈리아 정치는 새롭게 양극화되었는데 베를루스코니 하에서 우파가 부상한 반면 좌파는 취약하고 분할된 형국이었다. 이러한 정세는 노동조합 내부에,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 긴장을 가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재임한 2001-11년 기간 동안 CGIL은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강경노선을 채택했고, 베를루스코니를 승계한 ‘기술관료’ 정부에서도 그러했다. 역으로 CGIL이 2006-2008년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민주당이 참여한 올리브동맹 선거연합이 주도한) 프로디 정부의 요구를 지나치게 묵인하면서 정치적으로 동정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07년에 설립된 민주당은 주로 과거 공산당 출신으로 구성되었는데, 카톨릭 좌파인 마르게리타(‘민주주의는 자유’)를 포괄했고, 세 노총의 주요 구성원을 포용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러한 흐름과는 지금까지보다 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에서는 가장 주요한 노동조합이 노동당에 대한 집단적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유럽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예외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논쟁적인 동맹’ 내부에서 긴장은 노동당이 1990년대 ‘신노동당’ 노선을 채택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정당 지도자들을 노동조합과의 공식적 연계가 선거에서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 의존을 줄이려 시도했고 (하지만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개인 당원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할 정책을 채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정당 의사결정과 의회 후보의 선택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상당히 감소했다. 1997년 선출된 정부(노동당 토니 블레어 총리)는 사유화와 공공부문 예산억제에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는 더욱 전투적인 새로운 세대가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 한 계기였다. (새로운 세대는 대중적으로 ‘신병부대’(awkward squad)라고 불렸다.)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 소방단노조는 2004년 노동당에서 탈퇴하였고 ‘철도/해운/운수 전국노조’(RMT) 철도부문은 노동당 후보에 반대하여 경쟁 좌파 후보를 지지한 후 출당 당했다. 다른 노동조합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례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줄였고 그들의 자금을 더욱 넓은 의미의 정치적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치는 20세기 초반 독립투쟁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남아 있다. 즉 민족주의가 계급정치를 능가했다. 따라서 노동당은 소수 정당인데, 종종 연립정부에서 소수파 파트너로 참여하기도 한다. 일부 노동조합, 특히 가장 큰 ‘서비스/산업/전문직/기술직 노동조합’(SIPTU)은 노동당에 가입했으나, 영국에 비하면 영향력은 크지 않다. 실제로 아일랜드 노동조합은 어떤 정부가 구성되든 협력을 모색했고, 지난 20년간 사회적 파트너십 합의가 이뤄졌다.

### 3. 유럽 비사회민주주의 좌파 정당 현황

비사회민주주의 좌파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좌파로서 불충분하다고 보거나 심지어 전혀 좌파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지난 30년 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비교할 때 좌파 정당은 심오한 변화를 경험했다.

March의 분류 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첫째, ‘급진좌파’와 ‘극좌파’의 구별. 그에 따르면 급진좌파는 자본주의 체계를 철저히 변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적 참여민주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인민(예를 들어 실업자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정치체계 내부에서 포괄하고자 한다. 그들의 반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루어진 자본주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무역자유화, 시장화, 사유화 등등)에 반대한다. 그들은 더 이상 계획경제를 지지하지는 않고, (서비스와 중소기업에 제한된) 민간기업을 포함한 혼합경제를 주장한다. 반면 ‘극좌파’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적대감을 표시하며,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포함해 부르주아 정치세력과의 타협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며, 의회 외부에서의 투쟁을 강조하며, 반자본주의를 더욱 엄격히 정의하여 대부분의 시장 기업을 격렬히 반대한다.

---

2) 유럽의 비사회민주주의 좌파 정당 현황에 대해서는 Luke March(2008), *Contemporary Far Left Parties in Europe: From Marxism to the Mainstream?*, Friedrich Ebert Stiftung를 참조했다.

<표 II -2>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의 비사회민주주의 좌파 정당(2008년)

|               | 급진좌파                       | 유럽정당/유럽의회 정치집단        | 극좌파                   | 유럽정당/유럽의회 정치집단         |
|---------------|----------------------------|-----------------------|-----------------------|------------------------|
| 개혁적<br>공산주의   | 보헤미아/모라비아공산당<br>(KSČM, 체코) | PEL(참관)/GUE-NGL       |                       |                        |
|               | 공산주의재건당<br>(PRC, 이탈리아)     | PEL/GUE-NGL           |                       |                        |
|               | 이탈리아공산주의자당<br>(PdCI)       | PEL/GUE-NGL           |                       |                        |
|               | 스페인공산당(PCE)                | PEL/GUE-NGL           |                       |                        |
|               | 노동인민진보당<br>(AKEL, 사이프러스)   | PEL(참관)/GUE-NGL       |                       |                        |
|               | 프랑스공산당(PCF)                | PEL/GUE-NGL           |                       |                        |
| 보수적<br>공산주의   |                            |                       | 그리스공산당(KKE)           | INITIATIVE/없음          |
|               |                            |                       | 슬로바키아공산당<br>(KSS)     | INITIATIVE, PEL(참관)/없음 |
|               |                            |                       | 포르투갈공산당<br>(PCP)      | 없음/GUE-NGL             |
|               |                            |                       | 라트비아사회주의당<br>(LSP)    | INITIATIVE/GUE-NGL     |
| 민주적<br>사회주의   | 좌파연합(VAS, 핀란드)             | PEL/GUE-NGL           |                       |                        |
|               | 좌파당(V, 스웨덴)                | NGLA/GUE-NGL          |                       |                        |
|               | 사회주의인민당<br>(SF, 덴마크)       | NGLA, EGP/Greens-EFA  |                       |                        |
|               | 사회주의좌파당<br>(SV, 노르웨이)      | NGLA/없음               |                       |                        |
|               | 좌파-녹색운동<br>(VG, 아이슬란드)     | NGLA/없음               |                       |                        |
|               | 좌파블록(BE, 포르투갈)             | PEL/GUE-NGL           |                       |                        |
|               | 좌파운동생태동맹<br>(SYN, 그리스)     | PEL, EACL(참관)/GUE-NGL |                       |                        |
| 인민주의적<br>사회주의 | 사회주의당(SP, 네덜란드)            | 없음/GUE-NGL            | 반자본주의신당<br>(NPA, 프랑스) | EACL/없음                |
|               | 스코틀랜드사회주의당<br>(SSP)        | 없음/없음                 |                       |                        |
|               | 좌파당(독일)                    | PEL/GUE-NGL           |                       |                        |
|               | 신페인당(아일랜드)                 | 없음/GUE-NGL            |                       |                        |
| 사회적<br>인민주의   | 슬로바키아노동자연합<br>(ZRS)        | 없음/없음                 |                       |                        |

주 1) PEL: 유럽좌파당 (Party of European Left), INITIATIVE: 공산주의노동자당 이니셔티브 (Initiative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NGLA: 북유럽 녹색좌파연합 (Nordic Green Left Alliance), EGP: 유럽녹색당 (European Green Party), EACL: 유럽반자본주의좌파 (European Anti-Capitalist Left)

- 주 2) GUE-NGL: 유럽연합좌파-북유럽녹색좌파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reens-EFA: 녹색당-유럽자유연맹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 주 3)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의 유럽의회 정치그룹은 GUE-NGL이다.

March는 이에 더하여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를 추가했다.

## 1) 개혁적 공산주의와 보수적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광범위한 집단이다. 보수적 공산주의는 대체로 자신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고, 소련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정당을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특히 그리스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최근 들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는 민족주의나 인민주의에 호소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 개혁적 공산주의는 점점 더 분기하고 있고, 절충적이다. 그들은 소련 모델을 폐기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의 경우 민주집중제의 폐기, 프랑스와 사이프러스의 경우 시장 경제 반대에 대한 폐기) 1968년 이후 신좌파의 의제, 예를 들어 페미니즘, 생태주의, 풀뿌리민주주의 등을 채택했다.

## 2) 민주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들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양자를 반대한다고 스스로 정의하며, 페미니즘, 생태주의, 자주관리와 같은 신좌파의 의제를 옹호하며, 참여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비교조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며, 대안적 생활양식과 소수인종을 지원한다. 이러한 입장의 주요 옹호자는 북유럽 녹색좌파 정당으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이 주 거점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비판과 생태적 비판을 종합하는 생태-사회주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다.

### 3) 인민주의적 사회주의

인민주의적 사회주의 정당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내용을 공유하지만, 더욱 강력한 반엘리트주의, 반제도주의적 호소를 강조한다. 또한 계급 사안보다는 지역주의, 민족주의, 법질서 문제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인민주의는 논쟁적인 용어이지만, 여기서 인민주의는 사회가 ‘순수한 인민’ 대 ‘부패한 엘리트’로 분할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정치하는 인민의 ‘일반의지’가 표출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민주의 정당은 자신이 다른 주류 또는 제도 정당에 대항하여 보통 사람들을 방어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 4) 사회주의적 인민주의

사회주의적 인민주의 정당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인민주의 정당과 가장 유사하다. 정치지도자 개인의 지배적인 지도력,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직, 본질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이데올로기, (반제도주의적 호소를 중심으로) 좌익적 수사와 우익적 수사의 혼합 등. 급진좌파는 이들이 좌파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다수는 일시적인 ‘플래시 정당’(설립 후 최초의 선거에서 크게 약진하지만 그 다음의 선거에서 후퇴·소멸해 가는 정당)이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은 (공산당을 논외로 하면) 좌파 정당이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취약한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급진좌파 정당이 다수 소속된 유럽의회 정치그룹 ‘유럽연합좌파-북유럽녹색좌파’(GUE-NGL)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 규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II -3> 유럽의회 선거 결과

| 선거 연도 | 의석수 (/전체의석) | 의석비율(%) | 증감 |
|-------|-------------|---------|----|
| 1995  | 34/567      | 6       |    |
| 1999  | 42/626      | 6.7     | 8  |
| 2004  | 41/732      | 5.6     | -1 |
| 2009  | 35/766      | 4.6     | -6 |
| 2014  | 52/751      | 6.9     | 17 |

GUE-NGL은 1995년에 구성된 유럽의 내부 정치그룹이다. 그들은 유럽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유럽의 현존 정치구조에는 반대한다. 1994년 결성 선언은 또 다른 유럽연합을 건설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1)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의 총체적 변화. (2) ‘신자유주의 화폐주의 정책’과의 단절. (3) 공동발전과 공평한 협력을 위한 정책. 또한 그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해산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들은 유럽의 제도 내에서 공동결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부자’이자, 마스트리히 조약을 폐지하는 ‘또 다른 유럽’을 추구하는 ‘외부자’가 되고자 했다.

GUE-NGL은 연맹 형식의 구조로 그것은 각국 정당의 유럽의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각국 정당은 결성선언에서 명시된 것과 같은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공유한다. 물론 각국 정당은 유럽의회 의원을 통제할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GUE-NGL은 특정 이슈에 따라 분할될 수도 있다.

<표 II -4> 유럽의회 녹색파의 정치적 지향

유럽의회 녹색파(GUE-NGL)가 최근 발표한 팜플렛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가><sup>3)</sup>는 그룹의 기본적인 정치적 지향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 긴축 교리와 단절하는 유럽을 위하여

- (2)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를: 연대의 유럽을 위하여
- 평등한 사회보호와 복지공급
  - 보건과 물 사유화 반대
- (3) 지금 노동권을: 생활임금과 품위 있는 노동(dignified work)을 위하여
-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모든 조치에 대한 반대
  - 이민노동자의 권리 방어
- (4) 청년실업: 우리는 모든 청년을 위해 만족스럽고 품위 있는 노동을 요구한다
- 청년보장(Youth Guarantee, 대학 또는 직업교육 무료 프로그램)
- (5) 젠더평등을 우선에 두자: 유럽에서 젠더 불평등의 공간은 없어야 한다
- 임금의 성별격차 제거, LGBT 권리를 위한 투쟁, 의사결정에서 평등한 참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투쟁
  - 여성할레, 가정 내 폭력, 인신매매, 성폭력, 젠더사이드(성별에 따른 대량살상)에 대한 반대
  - 여성이 교육권,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세계적 인정, 젠더 기반 박해에 따른 망명의 권리
- (6) 세계 평화를 촉진하자: 우리는 세계에서 평화를 촉진하기를 원한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 평화로운 2국가 체제의 수립
  - 유럽연합 군산복합체 반대
- (7) 국제관계: 세계적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유럽을 위하여
- (8) 인권을 우선에 두자: 인권기준을 방어하는 유럽을 위하여
- (9) 이주자를 옹호하자: 모든 사람의 이주의 자유를 위하여
- (10)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자: 소비의 다른 형태를 위하여
- 원산지에 대한 완전한 증명
  -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기준이 상품수입의 전제가 되어야
- (11)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더욱 푸르고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하여
- 유럽의 생물다양성 보호, 재생에너지 옹호
- (12) 공정한 어업: 지금 자원과 공동체를 보호하자
- 어류남획 종식
- (13) 지속가능한 농업: 우리는 농민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요구한다
- 환경보호, 소규모 농촌공동체의 보호
- (14) 시민자유 보호: 우리는 시민자유와 데이터 보호가 방어되는 유럽을 원한다
- 수백만 유럽연합 시민, 유럽의 외교관, 유럽의회 의원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규탄한다

(15) 지역정책: 유럽인의 연대를 확장하는 지역정책

-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16) 무역 정의: 무역관계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

- 우리는 자유무역을 통제해야 한다

(17) 개발: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하여

- 개발도상국의 발전 목표에 기반을 둔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을 요구한다

---

3) <http://www.guengl.eu/uploads/publications-documents/EN.pdf>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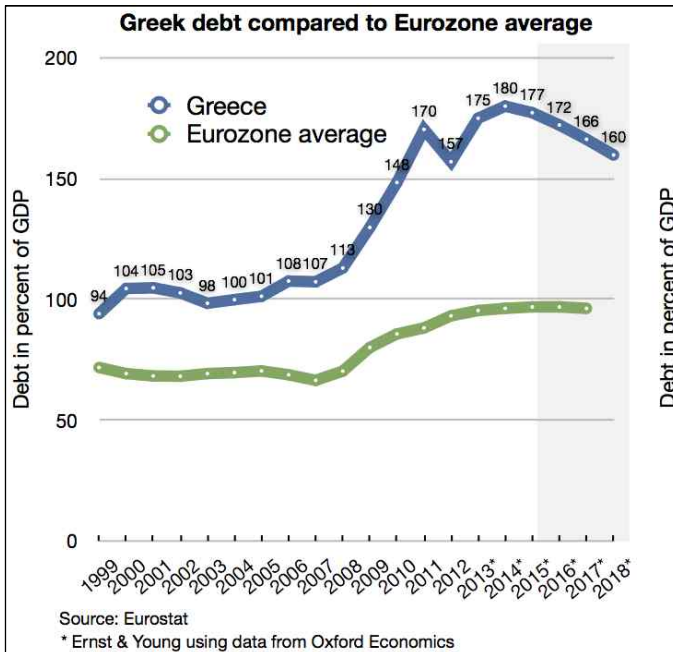
## 4. 그리스와 시리자

한편 2007-2009년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남부 유럽,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투쟁이 분출했다. 그 결과 기존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정당과 스스로 분별 정립하는 새로운 좌파 정당이 등장했다. 새로운 정당은 노동조합-정당 동맹관계라는 측면에서도 그 외부에 존재한다. 먼저 그리스에서 경제위기의 전개와 사회적 투쟁의 분출, 시리자의 등장에 대해 살펴본다.

### 1) 그리스 경제위기의 전개

2000년대 중반 그리스 경제는 유로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 중 하나였고, 동시에 대규모 구조적 적자를 보유했다. 2007-8년 금융위기 속에서 그리스는 특히 타격을 입었는데, 주요산업인 해운업과 관광업이 경기변동에 지극히 민감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는 경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상당히 늘렸고, 정부부채도 증가했다.

<그림 II -1> 유로존 평균에 대비한 그리스 부채 비율  
(대 국내총생산)



2009년 10월에 이르러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했으나 그리스의 차입금리는 그렇게 빨리 상승하지 않았다. 2010년 4월 그리스가 시장에서 차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4월 23일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IMF에 450억 유로의 대출을 요구했다. 며칠 후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그리스 정부부채의 신용등급을 BB+ 또는 '정크' 상태로 강등했다. (이 경우 투자자는 30~50%의 투자금 손실이 예상된다.) 2010년 5월 1일 그리스 정부는 3년간 1100억 유로의 대부를 받기 위해 일련의 긴축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동,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2010년 5월의 운동에 대해서는 뒤의 항목을 참조하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으로 구성된 삼자위원회, 트로이카는 2011년 10월 1300억 유로에 달하는 두 번째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나, 더욱 심화된 긴축조치와 부채조정 합의를 요구했

다. 놀랍게도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2011년 12월에 새로운 구제 금융 계획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트로이카의 요구에 응답했다. 하지만 그리스가 12월 중순까지 필요로 하는 60억 유로의 대출금 지출을 보류하겠다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위협을 가하자 파판드레우 정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2011년 11월 10일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임하면서 의회 의원이 아니라 기술관료 출신인 루카스 파파데모스를 후임으로 지목했다. 긴축조치의 실행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감축되었으나, 그리스의 경제악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9%이었고, 11만여 개 기업이 파산했다. 위기가 시작된 후 그리스의 구매력은 40% 감소했다. 2013년 6월 실업률이 27.9%, 특히 청년실업률이 62%에 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최선의 선택은 ‘질서 있는 디폴트’라고 주장했으나, 트로이카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2012년 2월 1300억 유로에 달하는 두 번째 구제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며 더욱 가혹한 긴축조치를 요구하여 2012년에 33억 유로, 2013년과 2014년 100억 유로의 정부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그 후 2012년 3월 정부는 부채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대의 정부 디폴트였다. 이는 ‘신용사건’(credit event)로 간주되어 신용부도스왑(CDS)의 보유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불을 받았다. 여기에는 그리스 정부가 새로 제정한 법도 포함되는데, 그리스 정부채권의 민간보유자(은행, 보험, 투자기금)는 ‘자외에 따라’ 명목 가격이 53.5% 할인된 채권과의 교환을 수용할 수 있다. 교환되는 채권은 단기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증권이나 (이자율이 인화되고, 만기가 11-30년으로 연장된) 새로운 그리스 국채였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채조정이었고, 2060억 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국채에 영향을 끼쳤다. 사실상 부채가 1070억 유로 탕감되었고, 이에 따라 그리스 부채 수준이 2012년 3월에 이르러 3500억 유로에서 2400억 유로로 감소하고, 그리스의 부채규모가 2020년에는 GDP의 117% 수준이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2012년 12월 그리스 정부는 국채를 33유로센트 가격으로 210억 유로만큼

되셨다.

2012년 5월 총선이 끝난 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긴축을 반대하는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부상하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만 한다는 새로운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렉시트’(Grexit)라고 알려졌고, 국제시장의 변동을 좌우하기 시작했다. 6월 17일 총선에서 중도우파가 근소하게 승리하자 그리스가 의무를 다하고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다.

개혁일정이 연기되고 경제악화가 심화되자 새로운 정부는 트로이카에 데드라인을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2015~16년 기간 동안 326억 유로에 달하는 세 번째 구제금융 패키지를 요구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2012년 11월 11일 그리스 의회는 그 달 말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여 188억 유로에 달하는 새로운 긴축 패키지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노동시장 개혁, ‘중기재정계획 2013-2016’이 포함되었다. 그에 따라 유로그룹은 그 다음날 이자율을 낮추고, 만기를 연장하며 부채환매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적으로 100억 유로를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부채환매 프로그램은 그리스가 민간채권자에게 빌린 620억 유로의 거의 절반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거의 200억 유로의 부채를 줄이게 했다.

2014년 6월 독립적으로 발표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감사 보고서는 계획대로 구제금융 기금이 이전되고 합의된 구조조정 패키지가 완전히 실행되더라도 2014년 56억 유로, 2015년에 123억 유로의 재정공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자본시장에서 추가 차입을 하든가, 지출삭감, 세입증가 또는 사유화 확대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재정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014년 하반기 동안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와 다시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2015년 재정예산의 영향을 계산하면서 양자는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스 정부는 그것이 ‘중기 재정계획 2013-2016’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으나, 트로이카는 25억 유로의 재정공백이

나타나므로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는 자신의 계산이 더욱 정확하다면서 11월 21일 원래 예산안을 변화 없이 의회에 제출했다. 그리스 정부의 예산안은 의회에서 격론 끝에 155대 134로 통과되었다.

## 2) 그리스 좌파 정치운동의 역사

1974년은 그리스 좌파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치 전반의 전환점이었다. 7년간의 독재 이후 민주주의로의 진정한 이행이 개시되었다. 이는 좌파에게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기원과 지향을 가진 정당들의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이 창립되었다.

급진적 환경 속에서, 또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덕분에 Pasok은 당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보다 더 좌파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 공산주의 정당들 중 일부보다 더 급진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Pasok의 ‘사회주의’는 인민주의적 급진주의와 케인즈주의적 개혁주의의 혼합물이었고, 계급기반 정치형태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좌파의 사회적 기반 중 상당부분을 끌어들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Pasok이 집권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리스 국가 구래의 후견주의(clientelism)에 몰두했고, 그들의 현실 정책적 의지는 당시 유럽의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지 않았다.

<표 II -5> 그리스사회당(Pasok), 1974년 이후 의회선거 성과

| 연도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의회 내 지위                   |
|------------|-----------|--------|-----------|---------------------------|
| 1974       | 666,413   | 13.60% | 12 / 300  | 소수 야당                     |
| 1977       | 1,300,025 | 25.30% | 93 / 300  | 제1야당                      |
| 1981       | 2,726,309 | 48.10% | 172 / 300 | 여당                        |
| 1985       | 2,916,735 | 45.80% | 161 / 300 | 여당                        |
| 1989 (6월)  | 2,551,518 | 39.10% | 125 / 300 | 제1야당                      |
| 1989 (11월) | 2,724,334 | 40.70% | 128 / 300 | 모든 정당이 참여한 정부 구성          |
| 1990       | 2,543,042 | 38.60% | 123 / 300 | 제1야당                      |
| 1993       | 3,234,777 | 46.90% | 170 / 300 | 여당                        |
| 1996       | 2,813,245 | 41.50% | 162 / 300 | 여당                        |
| 2000       | 3,007,596 | 43.80% | 158 / 300 | 여당                        |
| 2004       | 3,002,531 | 40.60% | 117 / 300 | 제1야당                      |
| 2007       | 2,727,853 | 38.10% | 102 / 300 | 제1야당                      |
| 2009       | 3,012,373 | 43.92% | 160 / 300 | 여당/2011.11.11. 이후 연립내각 참여 |
| 2012 (5월)  | 831,181   | 13.18% | 41 / 300  | 연립정부 참가                   |
| 2012 (6월)  | 755,832   | 12.28% | 33 / 300  | 연립정부 참가                   |

Pasok은 1993년 다시금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Pasok은 1970년대에 수용했던 급진주의의 흔적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코스타스 시미타스 지도부 하에서 (그는 ‘현대화’, ‘새로운 Pasok’ 지향의 확고한 주역이었다) 그들은 영국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과 매우 닮은 모습이 되어갔다. (‘새로운 Pasok’은 2004년 선거패배까지 그리스 정치를 지배했다.)

한편 그리스 공산당(KKE)은 좌파 스펙트럼의 다른 한 부분이었다. 공산당은 2차 세계대전 시기 저항을 주도했던 ‘영광스러운 정당’의 계승자이자,

그 후 내전의 패배자였다. 군사정부 시대에 공산당은 중대한 위기를 경험했다. 1968년 내부 분파(KKE-Interior)를 형성했던 집단이 이탈하여 유로코뮤니즘 정당을 결성한 반면, 공산당은 전형적인 제3인터내셔널 전통의 정당으로 남아 있었고, 동유럽 정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소비에트 유형의 공산주의를 더욱 강력히 고수했다.

<표 II -6> 1974년 이후 그리스 공산당의 의회선거  
성과

| 연도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
| 1974       | 464,787 <sup>1)</sup> | 9.47%  | 8   |
| 1977       | 480,272               | 9.36%  | 11  |
| 1981       | 620,302               | 10.93% | 13  |
| 1985       | 629,525               | 9.10%  | 12  |
| 1989 (6월)  | 855,944 <sup>2)</sup> | 13.10% | 28  |
| 1989 (11월) | 734,611 <sup>2)</sup> | 11.00% | 21  |
| 1990       | 677,059 <sup>2)</sup> | 10.30% | 19  |
| 1993       | 313,087               | 4.50%  | 9   |
| 1996       | 380,167               | 5.61%  | 11  |
| 2000       | 379,517               | 5.53%  | 11  |
| 2004       | 436,573               | 5.90%  | 12  |
| 2007       | 583,815               | 8.15%  | 22  |
| 2009       | 517,154               | 7.54%  | 21  |
| 2012 (5월)  | 536,072               | 8.48%  | 26  |
| 2012 (6월)  | 277,227               | 4.50%  | 12  |

- 주 1) 통합좌파연맹(the United Left coalition)의 일원  
2) 좌파진보연맹(Coalition of the Left and Progress)의 일원

1988년 두 공산당과 다른 독립 사회주의 집단은 좌파진보동맹, 곧 시나스피스모스(Synaspismos, SYN)를 결성했다. 1989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부를 구성하려는 재앙적인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1991년 공산당은 SYN을 떠났다. 하지만 이는 공산당의 또 한 번의 실질적인 분할을 야기했는데,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거의 절반과 수천 명의 당원이 SYN에 남았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KKE의 특징은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강력한 태도를 논외로 한다면, 매우 단순하며 어떤 면에서는 음모적인 정치담론에 있다. 공산당은 SYN을 포함해 모든 다른 정당이 자본주의를 장려하고 자본주의 체계를 재생산하기를 원하는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공산당이 보기에 다른 정당과 협력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심지어 노동조합 운동의 협력도 마찬가지다.

2000년 Pasok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의회 외부의 소규모 좌파조직과 느슨한 집단들, 상당수의 독립적 활동가는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네트워크('좌파의 통일과 공동행동을 위한 대화 공간')를 형성했다. 2004년 의회에 진입하기 위해 3% 득표를 획득하도록 SYN을 지원해야한다는 고려 때문에 급진좌파동맹, 시리자(Syriza)가 구성되었다. SYN은 동맹 시리자의 성장에 중심축이 되었다. 이는 단지 SYN의 상대적 규모 때문이 아니라, 알레코스 알라바노스의 지도부 하에서 SYN의 좌선회에 기인한 것이었다. 과거 공산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이었던 알라바노스는 시리자가 광범위한 '신좌파'를 통일하는 중개자가 되도록 하는 전략을 고안했다. 즉 신좌파가 더 이상 Pasok의 순응주의와 공산당의 교조주의 사이에 끼어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느끼지 않는 강한 존재감을 형성했다. 그 전략은 '권력이 없는 자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었고, 동시에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표 II -7> 2004년 이후 시리자의 의회선거 결과

| 연도        | 득표수       | 득표율 (순위)   | 의석수      |
|-----------|-----------|------------|----------|
| 2004      | 241,539   | 3.3% (#4)  | 6 / 300  |
| 2007      | 361,211   | 5.0% (#4)  | 14 / 300 |
| 2009      | 315,627   | 4.6% (#5)  | 13 / 300 |
| 2012 (5월) | 1,061,265 | 16.8% (#2) | 52 / 300 |
| 2012 (6월) | 1,655,053 | 26.9% (#2) | 71 / 300 |

시리자는 청년 당원이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이는 공산주의 전통의 좌파에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32세의 엔지니어였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2006년 가을 아테네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출마했다. 그는 10.5%의 득표를 얻어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시리자의 전체적 전략을 강화하고 안정화했다. 그 정치적 영향은 2006~7년 학생운동에서 드러났다. 당시 학생운동은 민간 부문이 대학설립을 허용하는 헌법수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시리자는 여론을 바꾸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Pasok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 문제와 여타 문제에 대한 시리자의 실천은 특히 중요한데, 좌파 정당의 전통적인 제도주의, 즉 사회 기층의 동원과 분리되어 국가기구 내부의 기능에 만족하는 경향과 명백히 결별한 징표였기 때문이다.

2007년 중반에 이르러 시리자는 다음 총선에 대해 훨씬 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실제로 9월 선거에서 5%의 득표를 얻어 14석을 획득했다. 6개월 후 2008년 2월 5차 대회에서 치프라스는 온건파 포티스 코우벨리스에게 승리를 거두고 SYN의 지도자가 되었다. 반면 알라바노스는 시리자의 지도자로 남아 있었다. 2008년 동안 시리자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선거 이후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시리자는 생존과 발전의 모델로서 사회운동에 개방적인 전략을 선택했다.

사실 정당과 사회운동이라는 두 문화의 공생은 급진좌파동맹 시리자의 생존을 보장했는데, 이는 ‘대중연계정당’(mass connective party)이라고 불리는 것과 가까운 기능적, 조직적 실천을 채택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대중연계정당은 구래의 ‘대중정당’ 개념과 대비되는 것이다. 후자의 주요한 조직적 특징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인 반자본주의적 표출을 당 내부에서 통일시키며,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도전하거나 관리하려는 지도부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그러한 표출을 집중시키려는 능력 또는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대중연계정당’의 주요한 조직적 특징은 다양한 실천, 발의, 운동을 통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신축적인 방식으로 연계하며 안정적이며 느슨한 연합을 통해 그러한 실천들의 표출을 현실화하고, 국가정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중적 정치역량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2008년 12월 그리스 경찰이 15세 고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은 그리스 전역에 걸쳐 두 주간의 광범위한 시위와 학생들의 고등학교, 대학 점거를 촉발했다. 이러한 청년의 봉기는 그리스 좌파의 두 전략 사이의 깊은 차이를 드러냈다. 시리자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모든 반란이 아테네와 다른 주요 도시에서 무모하게 방화를 시도한 ‘흑색 블록’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시리자는 제도 언론의 심각한 공격을 받았고 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반란에 참가했고, 그 반란을 조정하려 하지 않았다. 시리자는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무감각한 정치체계를 비판했다. 하지만 그 정치적 대가는, 최소한 투표의사에 관한 여론조사로 측정된 바에 따르면 시리자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시리자 내부에서 의회를 지향하는 현대화주의자들과 운동을 지향하는 좌파 사이에서 심각한 분할을 드러냈다. 이는 치프라스와 알라바노스 사이의 심각한 리더십 경쟁을 낳았다. 그 결과 2009년 5월 유럽의회 선거와 10월 총선에서 시리자는 빈약한 성과를 거두었다.

시리자의 미래에 관한 의구심을 낳은 심각한 내부 위기 속에서, SYN은

모든 시리자 구성원에게 제안할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강령은 거의 400 페이지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정당의 강령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식이다), 공공활동과 국가정책의 거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다. 그것은 SYN과 시리자 내외부의 다양한 지역 출신의 수백 명의 활동가와 전문가가 협력한 산물이었다. 강령은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공적 공간’을 주장했다. 내적 정치 위기의 와중에 강령은 처음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SYN 활동가 대다수의 전략적 지향을 강력히 제시했다.

한편, 2009년 10개의 소규모 집단과 정당이 또 다른 동맹, 안타르시아(Antarsya, 전복을 위한 반자본주의 좌파 협력)를 구성했다. 그 구성원은 주로 정통 마르크스주의, 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배경을 지닌 다양한 공산주의 조직의 대학생 활동가와 공식 노동조합 외부의 새로운 기층 노동조합 운동가였다. 안타르시아는 광범위한 동원의 행동주의에서 효과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지방선거나 총선에 1.8% 이상을 얻지는 못했다.

2008년 SYN 대회 경선에서 치프라스에게 패배한 포티스 코우벨리스는 2010년 SYN 6월 대회를 계기로 SYN의 구성원 13,000명 중에서 3,000명, 14명의 의원 중 4명을 이끌고 새로운 ‘현대화주의자’ 정당, ‘민주좌파’(DEMAR)를 결성했다. 곧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정부에 환멸을 느낀 Pasok의 현대화주의자들 상당수도 여기에 참여하여, DEMAR는 정치 스펙트럼 내에서 중도좌파의 자리에서 Pasok을 대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DEMAR는 실질적 사회적 기반이 없었고, 따라서 거의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해야 했다.

유로존의 위기 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리자가 대약진을 할 조건이 형성되었고, 이는 그리스의 정치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 3) 2010년 5월 충격요법과 저항

2010년 5월 5일, Pasok 정부,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국제통화기금(IMF)가 체결한 합의각서의 ‘안정성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그후 시리자가 선거에서 약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각서는 그리스에 3년간 1,100억 유로를 제공하며 가혹한 조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행정개혁으로 제시되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공개적 공격으로 나아갔다. 최소한 20%의 공공부문 임금삭감, 공공자산(항구, 올림픽 항공, 공공운송) 사유화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 주로 운송 에너지 공공사업에서 전례 없는 탈규제 조치, 사회서비스/보건/교육/연금계획의 극적인 삭감. 여기에는 간접적인 역진세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 문제에 대체로 비효과적이었으나, 거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낳았다. 불황이 영구화되었다. 경제성장은 5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실업률은 8.3%에서 2010년 말 12.6%로 상승했고, 2012년 1/4분기에 23%로 치솟았다. 소상공인의 파산은 25%에 이르렀다. 아테네에서만 주민의 10%가 다양한 사회기관이나 자선기관에서 식품을 제공 받았고, 또 다른 17%가 보호시설을 찾았으며, 60%가 식품구입 예산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2012년 초에 이르러 아테네에서 노숙인의 수가 두 배로 증가했고, 빈곤선 이하의 주민 수가 50%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렀다.

2010년 5월의 투쟁은 총파업으로 본격화되었다. 자정부터 국내외 비행기, 기차, 페리호 등 운송이 중단되었다. 학교, 일부 병원, 다수의 민간기업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이는 1967-74년 그리스 군사정부가 종식된 후 가장 광범위한 시위였다. 약 10만 명이 아테네에서 행진했고, 폭자는 그 규모가 50만 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시위가 추진력을 얻자 시위대는 신타그마 광장에 있는 의회 건물로 이동했고, 시위대는 의회를 ‘도둑’이라 규탄했다. 경찰이 최루가스, 섬광탄, 연막탄을 사용에 시위 진입에 나섰고, 재무부 건물을 포함해 주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스타이우 거리의 마핀은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하지만 화재 진압 후 건물에서 3명이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들은 총파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출근했던 사람들 중 일부였다.) 사고에 대해 그

리스은행노동조합연맹은 경영진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파업을 요구했다. 아테네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시위자는 돌, 병, 대리석 조각 등을 투척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테살로니키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37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2월 23일에도 거의 10만 명이 참여한 파업과 폭력시위가 다시 발발했다.

#### 4) 2011년 5월 그리스 광장 시위

2011년 5월 25일 아테네와 다른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긴축조치에 항의하는 평화시위가 전개했다. 이는 2011년 5월에 개시된 스페인 5.15운동과 상당히 유사했다. (스페인 5.15운동에 대해서는 뒤의 관련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시위는 아테네, 테살로니키, 라리사, 파트라스, 볼로스, 레티몬, 트리폴리, 칼라마타에서 전개되었다. 아테네에서 시위는 페이스북 페이지 ‘신타그마의 분노한 사람들’이 조정했다. 9만 명 이상이 그 페이지에 등록했고, 수천 명이 그리스 의회 밖 광장에 모였다(일부는 3만 명이라고 보았다).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 테살로니키에서는 ‘화이트 타워의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시위를 조정했다. 5월 25일 시위의 가장 유명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에러 404, 민주주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는 투표했다, 당신은 투표했다, 그는 투표했다, 그녀는 투표했다, 우리는 투표했다, 그들이 훔쳤다.” “그리스, 당신의 차례가 왔다, 당신은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떠나라!” 이러한 일련의 시위는 그리스의 정권 교체 시기(1975년 이후 현재까지)의 다른 모든 시위와 달랐는데, 정당이나 노동조합 없이 시위가 조직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당과 제후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다른 다수의 참가자에게 비난을 받았다. 시위 조직자는 정당과의 제후나 폭력을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시위는 정부와 주도적인 정치세력, IMF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2011년 스페인 시위에서 등장한 구호,

“조용해라, 그리스가 잠자고 있다”에 대응하여, 스페인 대사관 앞에 이런 구호를 내걸었다. “우리는 깨어났다! 지금이 언제인가! 그들이 떠날 때다!”

시위는 그 다음날로 이어져 아테네에서 14,0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언론은 그 중 절반이 청년이라고 밝혔다. 신타그마 광장에는 정보안내소와 ‘아이디어 북’이 설치되었다. 테살로니키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인 화이트 타워에 ‘판매합니다’라는 거대한 간판을 세웠는데, 이는 정부의 대규모 탈국유화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5월 27일 신타그마 광장에서는 첫 번째 인민총회가 개최되었고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운동은 의사록을 공개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부패 정치인은 퇴직하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회 건물 내부에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위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9시에 총회를 개최한다.’ ‘조세 체계가 부자와 빈자에게 동일하지 않다. 모두에게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등등. 5월 29일에는 범유럽 차원의 시위가 있었고, 아테네에서 10만 명, 테살로니키에 1만 명이 모였다. 이날 가장 유명한 구호는 ‘최악의 폭력은 빈곤이다’였다.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운동이 제출한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새로운 헌법의 채택. 의원이 아니라 인민이 작성한 헌법.’ ‘더러운 부채에 대한 지불 중단.’ ‘그리스와 IMF가 서명한 양해각서의 취소.’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시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었고, 5월 31일에는 의회 봉쇄가 이뤄졌고, 12일차인 6월 5일에는 범유럽 차원의 2차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는 2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 (조직자는 5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6월 동안 신타그마 광장과 다른 도시 광장에서 시위는 지속되었다. 2011년 6월 28일, 보건, 운수, 교육,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48시간 파업을 전개했다. 언론인, 예술인도 파업에 연대하여 일을 멈췄다. 이날 시위는 참가자가 그리스 의회와 아테네 다른 지역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폭력시위로 확대되었다. 새로운 긴축조치가 통과되자 6월 29일 밤 폭력시위가 지속되었다. 경찰은 모터바이크와 섬광탄, 최루가스를 활용해 신타그마 광장의 시위를 해산시키려 했다. 신티그마 광장의 평화 시위는 7월 2일까지 지속되었

다. 테살로니키의 연좌시위는 8월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8월 7일 광장 시위를 해산시켰다.

## 5) 2011-12년 노동자 파업

2011년 8~9월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파업이 전개되었다. (관광, 택시, 세관과 세무, 폐기물 수집 등 부문과 교사, 의사 등등.) 그리고 10월 5일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또한 10월 17일 선원노조가 48시간 파업을 진행했고 세관 공무원 노동자의 파업도 같은 날 진행되었다.

파판드레우 정부에 대한 정당성이 극적으로 하락하자 2011년 11월 10일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임하고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는 그리스 은행의 행장이자 유럽중앙은행의 전 부행장이었다. 새 정부는 Pasok과 우익 신민주당 양자의 지원을 받았다. 당시까지 우익 신민주당과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LAOS는 각서를 지지하지 않았다. 파파데모스 정부는 자신의 기반이 된 정치동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각서를 제출했다. 그 각서는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더 압력을 가했다. 최저임금을 20% 삭감했고, 연금과 실업보험을 삭감했으며, 나아가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실질적으로 폐기했다.

한편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여 2012년 2월 12일 50만 명이 아테네 의회 주변에서 파파데모스의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을 대규모로 사용했고, 시위 참가자는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했고, 45개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이는 2월 7일의 총파업에 뒤이어 벌어진 시위였다.

## 6) 2010-2012년 투쟁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초기에 오로지 그리스적 현상으로 묘사되었다. 즉 후견주의,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실패, 공무원 특권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간부문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기존의 지배적인 주장, 즉 그리스의 문제는 공공부문의 병폐 때문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와 정치세력은 오직 은행을 구제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계급, 계층의 암묵적 사회적 동맹이 점점 더 가시화되게 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자, 상인, 중소기업, 독립 전문직, 연금생활자, 불안전노동자, 청년, 실업자 등등. 파파데모스 정부는 구성된 지 불과 7개월 후인 2012년 5월 새로운 총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심지어 내적으로 모순적인 사회적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다.

각서가 요구하는 긴축 조치는 과거 여당의 지지 축을 잠식했다. 그리스 민중은 여당이 각서의 파괴적 조건에 순응하고, 트로이카(IMF, EU, ECB)를 실질적 정부로 격상시켰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다.

2010년 5월 이후로 15회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대부분 24시간 파업이었고, 48시간 파업도 있었다. 이 외에도 노동자 불복종 행동(주로는 공공부문)과 농업부문의 동원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에 동반되는 시위는 경찰의 매우 강력한 저지를 받았지만 매우 큰 군중을 모았다. 총파업은 Pasok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 노동총동맹(GSEE)과 공공노동동맹(ADEDY)이 제안한 것이지만,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불안전 노동자, 기층의 전투적 노동자, Pasok과 분리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그리스 민중의 저항이 새로운 질적 단계에 도달했다는 징표는 ‘아가나크티스메니’(aganaktismeni), 즉 ‘광장의 분노한 사람들’이었다. 이 운동은 그리스 전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나타났고, (인터넷을 포함해) 새로운 정치 동원의 수단을 활용했으며, 과거에 존재했던 정당체계의 후견주의에 대해 명백히 적대적인 정치 언어를 발전시켰다.

## 7) 2012년 6월 총선과 시리자의 부상

파판드레우의 지도력 하에서 기술관료 동맹으로 구성된 정부를 통해 대중의 불만을 흡수하려는 정치 엘리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여당의 평의원의 곤경도 증대했고, 그들은 새로운 정당 결성을 시도했다. 과거 그리스사회당(Pasok)에 속했던 집단과 개인, 그리고 일부 의원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리자와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에 따라 동맹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2012년 6월 선거에서 시리자의 이름은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서, ‘통일인민전선 시리자’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 승리를 위한 기회주의였는가? 시리자는 그것이 당의 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즉 트로이카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통일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Pasok 출신 인사의 상당수는 후보자로 출마했고 다른 사람은 선거캠페인 조직에 참여하거나 강령의 구성에 기여했다.

시리자의 캠페인은 과거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리자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의 인프라와 조직적 역량을 모두 활용했다. 거의 모든 광장에서 옥외천막을 설치했는데, 이는 유권자의 회합장소이자, 유인물 배부처이자, 매일의 가가호호 방문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시리자는 거의 모든 곳에서 공개 집회를 개최했다.

2012년 6월 선거에서 시리자는 27%를 득표하여, 신민주당과 3% 미만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그리스사회당(Pasok)은 12.5%, 민주좌파는 6.2%를 차지했다.

<표 II -8> 2012년 6월 그리스 총선결과 (의석 획득 정당)

| 정당            | 득표        | 득표율   | 의석수 |
|---------------|-----------|-------|-----|
| 신민주당(ND)      | 1,825,497 | 29.66 | 129 |
| 시리자(SYRIZA)   | 1,655,022 | 26.89 | 71  |
| 그리스사회당(PASOK) | 756,024   | 12.28 | 33  |
| 독립그리스인들(ANEL) | 462,406   | 7.51  | 20  |
| 황금새벽당(XA)     | 426,025   | 6.92  | 18  |
| 민주좌파(DIMAR)   | 384,986   | 6.25  | 17  |
| 그리스공산당(KKE)   | 277,227   | 4.5   | 12  |

시리자의 득표는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의원은 거의 모든 선거구와 지역을 대표한다. 그리스 전역에서 최저 득표율은 14%였고, 특히 노동자계급 집중 지역은 38%였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32%, 민간부문 임금소득자의 33%, 실업자의 33%, 불안전노동자의 27%가 투표했으며, 소상공인의 32.6%, 전문직의 26%가 지지했다. 18세에서 54세 유권자에서는 신민주당보다 시리자의 지지도가 높았다. 18~24세 45%, 25~34세 30.1%, 35~44세 30.7%, 45~54세 32.4%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55~64세에서 24.1%, 64세 초과는 13.8%의 지지를 받았다.

2012년 시점에서 시리자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시각을 살펴보자.<sup>4)</sup> 시리자의 상징은 흰색 바탕에 붉은색, 녹색, 보라색으로 구성된다. 붉은색은 좌파운동의 전통을 상징하며, 녹색은 환경운동 조직을 대변하며, 보라색은 대안적 정치와 가부장제에 대한 투쟁을 상징한다. 흰색 바탕은 이러한

4) 시리자의 약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시각은 Michalis Spourdalakis(2015), "To Fight Another Day", Jacobin(<https://www.jacobinmag.com/2015/09/syriza-election-greece-memorandum-austerity-popular-unity-tsipras/>)를 참조했다.

투쟁의 통일을 위한 헌신을 표현한다.

시리자는 강력한 레닌주의적 배경을 지닌 다수의 활동가를 포괄한다. (다양한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경향.) 그들은 대단한 조직화의 경험을 지녔으며, 좌파의 대의에 대한 전투적 헌신을 보여주었고, 충실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치문화를 보유했다. 그들은 좌파의 통일이라는 맥락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시리자 구성원 중 상당수는 개혁주의 좌파의 배경을 지녔다. 그들의 이론적 기여는 거의 없지만, 정당건설 과정에 유용하며 사회민주주의의 환상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데 유용한 집단적 조직 문화를 지녔다. 시리자의 ‘좌로 이동’은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의 결과였다. 시리자 내부에 사회운동 활동가와 조직은 현장에서 조직화의 경험을 제공했으며 특히 새롭고 혁신적인 조직화와 동원의 실행방식을 제공했다. 이는 현재 그리스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특히 유용했다.

시리자는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 전통, 경험을 지닌 집단을 결합했다. 물론 그 과정은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러한 결합이 가능했던 단 한가지의 요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는 다양한 기반을 지닌 집단을 일상적 정치로 묶는 행동주의, 적절한 정당구조의 개발, 정치적 차이를 신중하게 결합하여 구조적 변화를 위한 공통의 요구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중요했다.

첫째, 시리자의 일상적인 행동주의 실천은 특히 좌파에게 교훈적이다. 시리자는 사회운동에 진정으로 전투적이면서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참여했다. 시리자는 사회운동의 역동성을 결코 시리자의 자신의 정치적 선택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리자의 활동가는 트로이카와의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부터 모든 저항운동에 (주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참여했지만, 이러한 운동에서 정당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다. 도시 광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운동이 벌어질 때, 시리자의 다양한 조직 부문들(특히 SYN의 청년 조직)은 여러 차례 교육적 모임을 조직했는데, 이는 광장의 활동가들이 제기한 새로운 관심사를 존중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시리자의 의원 수는 적었지만, 정부에 대해 가장 근실하고 효과적인 반대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적인 사회적 요구나 쟁점이 주류 정치의 최전선을 차지하도록 노력했다. 시리자의 의원은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운동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활동가를 경찰폭력에서 보호하고자 했다. 공식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시리자 구성원도 유사한 활동방식을 채택했다.

셋째, 시리자는 강령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단지 고정된 정책들의 집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었다. 즉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는 지속적 과정이었다. 시리자를 통일하는 요인으로서의 강령은 사회적 투쟁으로부터 얻은 경험의 산물이자, 사회적 정치적 대의제도 내부에서 획득한 경험과 전문성의 산물이었다.

넷째, 시리자는 모든 좌파의 통일에 기초하여 정부권력에 접근하고자 했다. 2012년 총선 몇 달 전에 이러한 전망은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단호하고 진취적이었다.

다섯째, 시리자의 핵심적인 조직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전략적 실천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리자에는 여러 조직적 결함과 내부적 마찰이 존재하지만 포괄적 구성은 느슨한 조직적 구성을 필요로 했다. 시리자가 선택한 ‘대중연계정당’ 유형의 조직은 시리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향뿐만 아니라 시리자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지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시리자의 느슨한 조직 구조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동맹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덕목이다. 즉 그리스의 거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 존재하는 SYN의 사무실로부터 파업과 점거를 조직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정치적 네트워크에 이르는 자산.<sup>5)</sup>

---

5) 이러한 평가 시각을 제시했던 Michalis Spourdalakis는 2015년 집권 이후 시리자의 행보에 대해서도 변호론적 태도를 취했다. 그는 2015년 7월 5일 국민투표 이후 치프라스 정부가 취한 조치가 “후퇴이자 패배이지만 이기적이거나 비열한 지도부의 배신은 아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세력에 직면

## 8) 시리자의 재편

2013년 7월 시리자는 3,430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대회를 갖고 단일 정당으로의 창당, 정강정책, 의장 및 중앙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단일 정당이 된 시리자의 의장은 SYN의 대표였던 치프라스가 맡게 됐다. 그는 74.08%의 지지를 받고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정강정책도 4분의 3에 이르는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요 정책은 △긴축조치와 사유화 계획 철회를 위한 채권단과의 협상안 철회 △그리스 부채 일부 탕감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복지국가 재건설로 구성됐다. 치프라스는 사회다수의 동의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좌파 정부 구성, 이들 정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리자 내 소수파인 ‘좌파 강령’이 제안한 △모든 부채 탕감 △에너지, 수도 등 전략산업 및 금융부문 국유화 △유로존 탈퇴는 부결됐다. 이밖에 좌파강령은 선거승리의 경우 공산당, 원외 좌파연맹인 안타르시아(반자본주의좌파연합, ANTARSYA) 등 좌파 세력을 대상으로 가능한 연정파트너를 선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또한 성사되지 않았다. 200명의 중앙위원회 중 시나스피스모스는 135명, 좌파 강령은 60명을 차지했다.

2014년 5월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가 열렸다. 유럽연합 선거에서 시리자는 26.5%를 획득하여 1위를 기록했다. 신민주당은 22.7%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레나 두루가 아티카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였다.

---

하여 미래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리자는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통치’ 활동에 빠져들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에 올라서기 위해 서둘렀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에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시리자의 길’을 회복하고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chalis Spourdalakis(2012), "Left Strategy in the Greek cauldron: explaining Syriza's success", in Leo Panitch, Greg Albo, Vivek Chibber, eds., *Socialist Register 2013: The Question of Strategy*, The Merlin Press를 참조하라.

2014년 9월 13일 시리자는 테살로니키 강령을 공개했다. 강령은 다음과 같은 네 축으로 구성되었다. ① 인도주의 위기에 대항한다, ② 경제를 부흥하고 조세정의를 장려한다, ③ 고용회복을 위한 전국적 계획, ④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정치시스템의 변형.

강령은 유럽 수준에서 유럽 차원의 뉴딜을 요구했다. 즉 ① 유럽투자은행의 대규모 공공투자, ②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③ 그리스와 남부 유럽의 부채 축소를 위한 회의. 이 회의는 1953년 독일채무에 관한 런던협정의 모델을 따른다. (여기서 1953년 런던협정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채권국이 체결한 채무구제협정이다. 런던협정에 따라 상환액은 50%로 감소했고, 기한은 30년 후로 연장되었다. 당시 급속히 성장하는 독일 경제에 비해보면 상환 조건의 영향은 미미했다. 협정의 중요한 조건은 서독이 무역흑자를 볼 경우에만 상환이 이뤄지고, 상환액은 수출 소득의 3%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독일에 대한 채권국이 독일 상품을 수입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는 독일 경제의 재건을 지원했다. 일부 부채는 독일의 통일 후 상환하기로 정했다.)

강령은 ‘국가재건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복지국가의 재건과 확대, 민주주의 제도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이행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증대된 예산이나, ‘구조기금 및 협력기금’(Structural Funds and Cohesion Fund)과 같은 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금을 통해 재정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 9) 2015년 시리자의 집권과 위기

2014년 12월 19일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에 실패한 후 의회는 해산했고, 1월 25일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리자는 선거에서 35.4%를 획득했고, 300석 중에서 149석을 차지했다.<sup>6)</sup>

---

6) 그리스에서는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250석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고 1위 정당에 50석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 때문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기

<표 II -9> 그리스 2015년 1월 총선 결과

| 정당            | 득표        |       |        | 의석  |     |
|---------------|-----------|-------|--------|-----|-----|
|               | 득표수       | 득표율   | 득표율 증감 | 의석  | 증감  |
| 시리자 (SYRIZA)  | 2,245,978 | 36.34 | 9.45   | 149 | 78  |
| 신민주당(ND)      | 1,718,694 | 27.81 | -1.85  | 76  | -53 |
| 황금새벽당 (XA)    | 388,387   | 6.28  | -0.64  | 17  | -1  |
| 포타미 (Potami)  | 373,924   | 6.05  | 신생정당   | 17  | 17  |
| 그리스공산당 (KKE)  | 338,188   | 5.47  | 0.97   | 15  | 3   |
| 그리스독립당 (ANEL) | 293,683   | 4.75  | -2.76  | 13  | -7  |
| 사회당 (PASOK)   | 289,469   | 4.68  | -7.6   | 13  | -20 |

시리자의 치프라스와 독립 그리스당의 지도자 파노스 카메노스는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고, 치프라스가 총리를 맡게 되었다. (독립그리스당은 신민주당에서 분리되어 2012년 2월에 창당한 우파 정당이다. 대체로 민족주의/보수주의 성향을 지녔다.)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고 파노스 카메노스는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2014년 6월 27일,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정책 제안에 대해 7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TV연설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TV 연설에서 “유럽의 원칙과 기본적 노동권과 평등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는 제안들은 채권단 요구안의 목적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실행 가능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 인민들을 모욕하는 것에 있다”며, “그리스 국민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프라스 정부와 채권단의 협상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드러났다. 첫째, 채권단은 그리스 연금과 공무원 임금을 대폭 깎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위해서는 최소 38%의 득표율이 필요하다.

요구했다. 셋째, 특히 유럽 채권단은 저소득 연금생활자에게 지급되는 인도 주의적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철회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요구했다. 넷째, 유럽 채권단은 부가가치세 확대를 요구했다. 다섯째,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부채 탕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시리자의 테살로니키 강령은 협상 의제가 되지 못했다.

국민투표의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제시한 두 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 계획서를 수용하겠는가? 합의 계획서 첫 번째 서류 제목은 ‘현재 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개혁’이고 두 번째 서류 제목은 ‘예비 채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찬성 그리고 반대.”

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예상을 깨고 반대 61%, 찬성 39%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20% 포인트 이상 압도했다.

하지만 7월 13일 유로존 국가 정상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유럽연합 정상회의 투스크 의장이 밝혔다. 그는 합의에 따라 유로그룹(유로존 국가들의 재무장관 협의체)이 그리스에 대한 유럽재정안정화기금(ESM)의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긴급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을 지원 받는 대가로 채권단이 요구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표 II -10> 그리스 3차(2015년 7월 13일) 구제금융 구성

|                             |                           |
|-----------------------------|---------------------------|
| 860억 유로: 구제금융               | 용도: 은행자본 확충, 채무상환, 이자상환 등 |
| 재원출처: 유럽안정화기금(ESM)과 IMF 제공액 |                           |
|                             | 250억 유로                   |
|                             | 용도: 은행 자본확충 대부 상환         |
| 500억 유로: 신탁기금               | 125억 유로                   |
| 재원출처: 자산 사유화                | 용도: GDP 대비 부채 감축          |
|                             | 125억 유로                   |
|                             | 용도: 투자                    |
| 120억 유로: 브릿지 대출             | 용도: 8월 중순까지 유럽중앙은행 부채 상환  |
| 230억 유로: 유럽연합 기금            | 용도: 성장과 고용                |

치프라스 총리는 협상 결과에 대해 가능한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350억 유로의 경제성장 패키지를 확보하고, 국가채무 상황을 연기하고, 은행의 붕괴를 방지하며, 공공자산의 해외매각을 저지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반면 레프트 플랫폼의 대표, 파나조티스 라파자니스는 의회 표결에서 협상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치프라스 정부에서 ‘생산적 재건, 환경, 에너지 장관’이었다. 그는 그리스공산당 출신으로 SYN의 정치국에 활동했다.)

합의안은 7월 16일 그리스 의회에서 찬성 228명, 반대 64명, 기권 6명, 불참 2명으로 통과되었다. 시리자 의원 149명 중에서 동의하지 않은 의원은 39명이었다. (반대 32명, 기권 6명, 불참 1명.) 이 시점에서 라파자니스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치프라스를 여전히 지지한다. 조기 총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산당과 황금새벽당도 반대표를 던졌다. 시리자 중앙위원 201명 중 109명은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유럽 민주주의와 그리스 경제주권을 파괴하고, 신자유주의적 긴축 통치와는 다른 길을 차단해 버린 ‘브뤼셀 쿠데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7월 17일 치프라스 총리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 2명을 포함해 각

료 9명을 교체했다. 여기에는 라파자니스 장관이 포함되었다. 또한 치프라스 총리는 7월 29일 현 정부의 노선에 반대하는 시리자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집권정당은 내부 이견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된 노선을 정립해야 하며, 시리자 내부의 문제가 그리스의 전 국가적 문제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기총선을 원하지 않지만 시리자 내 반대파들의 존재로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하면 조기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20일 치프라스는 총리에서 사임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1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한계에 달했으며 이제 그리스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사임과 조기총선 의사를 밝혔다. 반면 최소한 25명의 시리자 의원이 구제금융 조건에 이견을 갖고 새로운 정당, ‘민중단결’(Popular Unity)을 결성하기 위해 분리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좌파강령’ 그룹의 라파자니스다. 민중단결은 2015년 8월 21일 창립했다. 민중단결은 유로존에서 탈퇴와 민족통화로서 드라크마의 회복을 옹호한다. 새로운 정당은 사회주의 국제주의와 평화주의를 옹호하며, 그리스의 나토 탈퇴, 이스라엘과 군사협정의 파기를 지지했다.

<표 II -11> 그리스 2015년 9월 총선 결과

| 정당            | 득표        |       |       | 의석  |    |
|---------------|-----------|-------|-------|-----|----|
|               | 득표수       | 득표율   | 득표율증감 | 의석수 | 증감 |
| 시리자 (SYRIZA)  | 1,925,904 | 35.46 | 0.88  | 145 | 4  |
| 신민주당(ND)      | 1,526,205 | 28.1  | 0.29  | 75  | 1  |
| 황금새벽당 (XA)    | 379,581   | 6.99  | 0.71  | 18  | 1  |
| 사회당 (PASOK)   | 341,390   | 6.28  | 1.12  | 17  | 4  |
| 그리스공산당 (KKE)  | 301,632   | 5.55  | 0.08  | 15  | ±0 |
| 포타미 (Potami)  | 222,166   | 4.09  | 1.96  | 11  | 6  |
| 그리스독립당 (ANEL) | 200,423   | 3.69  | 1.06  | 10  | 3  |
| 중도파연합 (EK)    | 186,457   | 3.43  | 1.64  | 9   | 9  |
| 민중단결 (LAE)    | 155,242   | 2.86  | ±0    | 0   | ±0 |

9월 20일 총선 결과, 시리자는 1위를 차지했으나 투표율은 1974년 군부 독재 종식 후 가장 낮은 56%를 기록했다. 인민통일은 한 석도 얻지 못해, 시리자에 가입되었을 당시 의석 25석을 모두 상실했다. 시리자는 1월 총선에서는 트로이카와의 투쟁을 강조한 반면, 9월 총선에서는 부패한 특권층과 부패한 기존 정당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시리자는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공격적으로 주장했다. 시리자는 채권단의 강도 높은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테살로니키 강령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9월 총선에서 시리자가 ‘재신임’을 얻은 후 10월 17일 그리스 의회는 긴축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긴축법안은 연금 삭감과 조기 은퇴 억제, 탈세 처벌 강화,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골자로 한다. 시리자와 독립그리스당에서 1명을 제외한 15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파인 6개 정당에서는 모두 140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

기금(IMF), 유로존구조펀드 조사단은 10월 말 그리스 아테네에 모여 3차 구제금융 패키지 현황을 조사할 예정으로 그리스는 이 조사를 통과해야 분할지원금 20억 유로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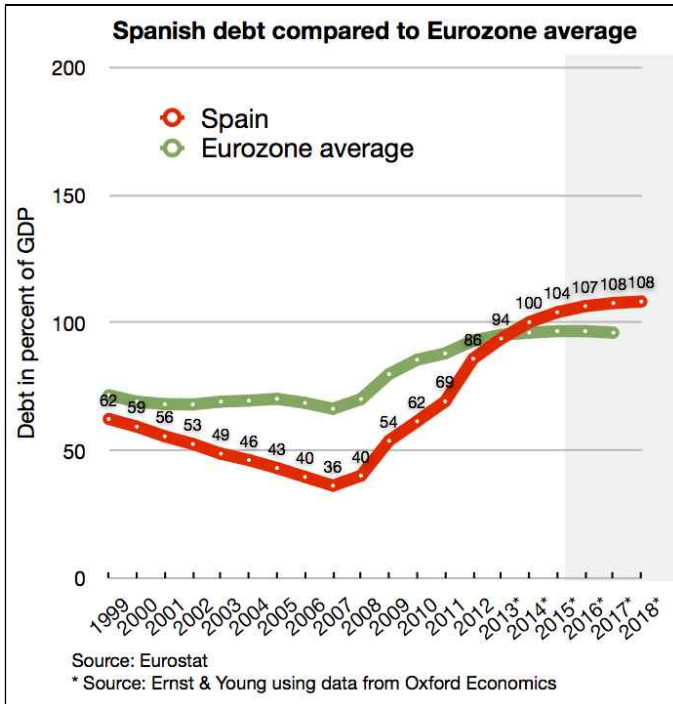
## 5. 스페인과 포데모스

스페인에서 사태의 전개는 그리스와 닮은 점이 많다. 과감한 긴축프로그램과 대규모 광장시위와 노동조합 파업을 포함한 사회적 투쟁의 분출, 새로운 좌파정당의 등장 등.

### 1) 스페인 경제위기의 전개

스페인은 위기 발발 이전에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 부채가 적은 편에 속했다. 스페인의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0년에 60%로, 독일, 프랑스, 미국에 비해 20% 포인트 낮았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에 비해 60% 포인트 낮았다.

<그림 II -2> 유로존 평균 대비 스페인의 부채 규모



스페인의 주택거품으로 인해 세금수입이 증가하면서 공공부채 증가가 억제될 수 있었고, 10년 간 부채 축적 없이 정부지출 증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면서 은행 규제금융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2년 5월 방키아는 190억 유로의 규제금융을 받았다. (스페인의 방키아는 2010년 유럽 금융위기로 인해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정리하면서 7개의 저축은행을 합병해 만든 은행이다.) 이는 그 이전의 45억 유로의 지원금에 추가된 것이었다. 2012년 9월 규제당국은 스페인 은행이 부동산 투자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자본으로 59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은행 규제금융과 경기하강으로 인해 스페인의 적자규모와 공공부채가 증가했으며, 신용등급이 상당히 하락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이유로 긴축수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1년 의회에서 스페인 헌법 수정안을 승인하여 2020년까지 전국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균형예산을 달성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은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을 수 없으며 자

연재해나 경기침체, 기타 위급상황에서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유로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의 하나로서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를 합한 것보다 크다) 스페인의 경제상황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미국과 IMF, 유럽위원회(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여러 유럽 국가의 압력 속에서 스페인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09년 11.2%에서 2013년 7.1%로 감축했다.

그렇지만 2012년 6월 스페인의 10년물 채권의 이자율이 7%로 상승하면서 채권시장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스페인은 유로존에서 가장 큰 우려 대상이 되었다. 2012년 6월 9일 유러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은 최대 1,000억 유로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금은 스페인 은행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휘할 스페인 정부소유기금(FROB, 은행구조조정기금)으로 이전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은행구조조정기금은 스페인 국민계정에서 추가적인 부채로 계산될 것이었다. 2012년 6월 시점에 스페인 경제전망은 마이너스 1.7%의 경제성장, 25%의 실업률,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할 패키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012년 9월 유럽중앙은행은 스페인이 EFSF/ESM(유럽재정안정기금/유럽안정화기구)와의 새로운 국가 구제금융 패키지에 서명한다면 ‘무제한적 국채매입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스페인에 가해진 금융시장 압력을 경감하고자 했다.

2012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이 현 EDP(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 프로그램이 제시한 재정건전화 경로와 목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스페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8년 110%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그 후 하락할 것이다. 구조적 재정적자(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적자)도 마찬가지인데, 구조적 재정적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또는 2027년에 유럽재정협약이 요구하는 최대 수준인 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3년 스페인은 27%의 실업률과 마이너스 1.4%의 경제성장률로 고통을 받았으나, 스페인 인민당 소속 마리아노 라호이가 이끄는 보수정부는 개

혁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3년 1월 23일 스페인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됨에 따라, 스페인은 EU/IMF의 구제금융 메커니즘에서 공식적으로 졸업했다.

## 2)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PSOE)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PSOE, 보통 스페인 사회당이라고 부른다)은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이다. PSOE는 스페인노동자총연맹(UGT)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PSOE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UGT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UGT는 PSOE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987년 PSOE 소속 의원이기도 했던 드론도 위원장을 포함한 UGT 지도자들이 저항의 표시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1982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노조에 배정하여, 13명의 UGT 지도자들이 선거명부를 통해 의원직을 얻었다.) UGT는 사회당 정부와의 관계를 끊는 대신, CCOO(‘노동자위원회’, 공산당 계열의 노동조합)와 협력을 강화했고, 1988년 12월 14일에는 공동으로 총파업을 전개했다. 1989년 선거에서 UGT는 PSO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PSOE와의 조직적 연계를 단절했다. 반면 PSOE는 1989년 선거에서 UGT의 지원 없이도 승리를 거둠으로써 노조의 지지 없이도 집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표 II -12>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PSOE) 역대 선거 득표율

| 총선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정부         |
|------|------------|-----------|-----------|------------|
| 1977 | 5,371,866  | 29.3 (#2) | 118 / 350 | 야당         |
| 1979 | 5,469,813  | 30.4 (#2) | 121 / 350 | 야당         |
| 1982 | 10,127,392 | 48.1 (#1) | 202 / 350 | 여당 (과반)    |
| 1986 | 8,901,718  | 44.1 (#1) | 184 / 350 | 여당 (과반)    |
| 1989 | 8,115,568  | 39.6 (#1) | 175 / 350 | 여당 (과반 미달) |
| 1993 | 9,150,083  | 38.8 (#1) | 159 / 350 | 여당 (과반 미달) |
| 1996 | 9,425,678  | 37.6 (#2) | 141 / 350 | 야당         |
| 2000 | 7,918,752  | 34.2 (#2) | 125 / 350 | 야당         |
| 2004 | 11,026,163 | 42.6 (#1) | 164 / 350 | 여당 (과반 미달) |
| 2008 | 11,289,335 | 43.9 (#1) | 169 / 350 | 여당 (과반 미달) |
| 2011 | 7,003,511  | 28.8 (#2) | 110 / 350 | 야당         |

### 3) 2004-2011년 PSOE 사파테로 정부와 경제위기

PSOE는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의 리더십 하에서 다시금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집권당이였다.

스페인의 주택거품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는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2008년 말이 되자 백만 채에 이르는 미판매 주택이 시장에 넘쳐났고 스페인 가계의 부채는 GDP 대비 84%로 상승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붕괴는 카하스(소규모 지방저축은행)에 대규모 악성부채를 떠넘겼다.

사파테로 정부의 초기 대응이란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위기가 스페인에는 단지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이였다. 기껏해야 정부는 카하

스에 일부 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나 (2008년 8월, 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른 G20 국가들과 협력하여 단기 적자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실업률이 거의 두 배로 뛰어 20%에 이르자 정부의 낙관주의는 가망이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일자리의 파괴는 건설업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단기, 임시직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기업은 신속하게 노동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었다. (25세 이하 실업률은 40% 이상으로 치솟았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파테로 정부는 스페인 과두집단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9년 중반에 이르러 은행 구제 패키지에서 긴축조치로 초점이 신속히 이동했다. 2010년 초반부터 유럽 각국에서 차례로 예산삭감, 임금동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해체가 도입되었다.

2010년 4월 그리스 부채위기가 전개되면서, 사파테로 정부는 긴축조치와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강제하려는 독일,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의 압력에 직면했다. 사파테로 정부는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데 머뭇거렸지만, 또한 대안적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었다. 마침내 정부는 2010년 5월 12일 과감한 긴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임금의 5% 삭감, 수당과 연금의 삭감, 투자계획의 취소, 은퇴연령 상향조정, 임금협상 억제, 해고요건의 단순화 등. 그 결과는 정부 지지율의 즉각적 하락이었다. 보수주의 인민당과 비슷한 수준에서 7%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기층 노동자의 압력과 PSOE 정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덧에 갇혔다. 2010년 9월 29일 총파업은 사파테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부는 운수부문 노동자와 같이 잘 조직된 부문에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서비스와 소매부문의 대규모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동원하지 못했다. 그 후 곧바로 노동조합 지도부는 연금 삭감과 은퇴연령 상향조정에 합의했다. 2011년 1월 은퇴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데 주요 노동조합이 합의한 것이다. 아나코생디칼리즘 경향의 노동조

합은 그 계획에 반대했고, 1월 27일 파업을 호소했다. 갈리시아, 카탈로니아, 바스크 지역에서 파업이 벌어졌고, 마드리드에서의 시위는 충돌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PSOE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고, PSOE는 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1년 4월 2일 실업률은 20%로 치솟았고, PSOE 지지율은 인민당에 16% 포인트 뒤처졌다. 사파에로가 사임해야 한다는 당 내부 의견이 분출했고, 특히 2011년 5월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이 이러한 압력을 주도했다. 그를 대체하는 선두주자는 페레즈 루발카바였다.

2011년 5월 22일 지방선거가 준비되던 시기인 5월 15일, 대규모 시위의 물결이 스페인 전역에서 발발했다. (이날은 사파에로 정부가 대규모 삭감한 지 일 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수만 명의 청년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왔고,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과 마드리드의 태양의 문 광장을 포함해 스페인 20여 개 도시의 중앙광장에 캠프를 설치했다. 학생, 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 등 그들은 공적 공간을 요구했다. 태양의 문 광장의 점거 시위자들은 상설대중총회를 설립하여 매일 모든 의사결정을 내렸다. 5.15운동의 슬로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민주주의로 이행을 위하여!”, “우리는 정치인과 은행가의 수중에 있는 상품이 아니다!”, “PPSOE: PSOE(사회당)와 PP(인민당)은 모두 쓰레기!”, “바로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5월 20일 태양의 문 광장의 대중총회가 승인한 선언문은 정치부패와 폐쇄식명부 선거체계, 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의 권력,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 담았던 부정의를 공격했다. (특히 폐쇄식명부 선거체계는 정당과 지도자의 이름만 투표용지에서 볼 수 있다.)

#### 4) 5.15 운동

2011년 1월에는 스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럼 이용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Democracia Real YA!’(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라는 플랫폼을 개설했다. 그것은 ‘실업자, 저임금을 받는 자, 하청업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청년’이 5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가두를 점거하자고 제안했다. 시위를 앞두고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집단은 여러 상징적 행동을 펼쳤는데, 예를 들면 5월 13일 무르시아 은행 점거다. 시위 시점에 이르러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은 500여 개의 다양한 집단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정당이나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거부했고, 제도화된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시위는 ‘우리는 정치인과 은행가의 수중에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개시되었는데, 그것은 시위 참가자가 ‘은행가의 수중에 있는 반사회적 수단’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시위 참가자는 더 많은 민주주의, 새로운 선거법, 정치 부패의 종식, 은행 국유화 등을 요구했다. 시위는 계획된 모든 도시에서 전개되었다.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에 따르면, 마드리드에만 5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추산 2만 명.) 바르셀로나에 15,000명, 그라나다 5,000명 등, 전국적으로 13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드리드 시위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그란비아를 점거하고 칼라오에서 평화적인 연좌시위를 지속했으나 경찰은 곤봉으로 해산을 시도했다. 충돌이 벌어지면서 일부 상점이 파괴되었고, 경찰은 24명을 체포했다. 충돌 이후 100명은 태양의 문 광장에서 캠핑을 시작했고 그 후 시위로 이어졌다. 그들은 5월 22일 선거까지 광장에서 캠핑을 지속하기로 결정했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5월 17일 광장 시위를 해산하자 다시 시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000명 이상이 모인 코루냐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시위자들의 캠프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마드리드에 12,000명 이상이 모여 시위를 전개했고, 200명의 참가자가 총회를 조직하여 광장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정했다. 결국, 5월 17일에 바르셀로나, 발렌시아를 포함해 스페인 30개 도시에서 야간 캠프가 설치되었다. 그 후 시위참가자들은 매일 오후 1시에 조직위원회를 열고, 오후 8시에 총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둔 5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 태양의 문 광장과 그 주변 거리가 약 28,000명이 운집했다. 다른 도시도 대규모 집결이 있었는데, 말라가에 15,000명, 발렌시아 10,000명, 바르셀로나 6,000명 등. 선거일인 5월 22일, 태양의 문 광장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은 최소한 일주일 더 캠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27일 바르셀로나, 레디아, 사바델 등지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다. 6월 12일, 시위가 시작된 지 4주가 지난 후, 마드리드 태양의 문 광장의 시위자는 캠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편 6월 14일 바르셀로나에서 수천 명이 사우다데야 공원에 집결하여 철야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공원 내부에 있는 카탈로니아 의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카탈로니아 의회는 6월 15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보건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었다. 그에 따라 6월 15일 카탈로니아 경찰과 시위자들 간 충돌이 발생했다. 시위 참가자는 쓰레기 상자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경찰은 시위 해산을 위해 플라스틱탄을 발사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 참가자는 돌과 병으로 경찰에 맞섰다. 정치인들은 시위를 비난했다.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은 폭력의 사용을 ‘거부’했으나 미디어가 운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비판했다. 6월 19일에 다시 거의 80개 도시와 마을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3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6월 20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여 마드리드로 향하는 ‘분노한 사람들의 행진’의 첫 번째 대열이 출발했다. 이들의 계획은 7월 23일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행진의 목표는 농촌지역을 방문하면서 운동을 확대하고, 그들의 요구를 모아내며, 인민대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행진은 8개 대열로 조직되었고, 각각은 16개 도시에서 출발한 십여 명의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행진 대열은 계획대로 7월 23일 마드리드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존엄성을 환영한다’는 구호와 함께 평가총회를 개최했다. 시위자는 행진의 경험을 총괄하는 ‘인민의 책’을 발간했다. 또한 7월 24일에는 ‘문제는 위기가 아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라는 구호로 시위가 열렸고, 여기에는 농촌

에서 온 수십만 명도 참가했다. 7월 25일에는 5.15운동 사회포럼이 개최되어 겨울에 전개될 운동을 조정하고자 했다. 7월 26일에는 15명의 ‘분노한 사람들’이 마드리드에서 브뤼셀까지 국제행진을 시작했는데, 이는 10월 15일 시위 일주일 전인 10월 8일 브뤼셀에 도착해 유럽의회에 스페인 인민의 요구를 전달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은 7월 27일 마드리드 파에오 델 프라도의 캠프를 폭력적으로 철거했고, 8월 2일 태양의 문 광장에 남아있던 5.15운동 정보안내소와 설치물도 철거했다. 경찰은 광장을 봉쇄하고 시위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2011년 8월, 광장이 철거, 폐쇄된 이후에도 시위자들은 광장에 재진입하려 시도하거나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10월 15일에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도합 50만 명이 운집한 시위가 있었다.

## 5) 포데모스

스페인의 정당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는 2011년 ‘분노한 사람들’ 운동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그 기원은 2014년 1월 12~13일에 발표된 선언, ‘[장기]말을 움직이자: 분노를 정치적 변화로 전환하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지식인, ‘좌파노동조합경향’의 지도자 등 30명이 서명했다. 선언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정당명부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UCM(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정치학 강사이자 TV 정치분석가 파블로 이글레시아스(1978년생)가 운동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운동은 ‘반자본주의 좌파당’(Izquierda Anticapitalista)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그 당은 트로츠키 계열인 4인터내셔널의 스페인 조직으로 선언을 작성했다. 이글레시아스는 2011년 인민당과 PSOE가 주도한 헌법 135조의 폐지를 비판했는데, 스페인은 주권을 지녀야 하며, 주요 결정이 브뤼셀, 즉 유럽연합에 의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헌법 128조가 완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조항은 ‘스페인의 모든 형태의 모든 부는 누가 소유자인지와 무관하게 인민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그는 낙태권을 유지해야 하며, 스페인이 NATO에서 탈퇴하고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데모스 운동은 수백 명의 인사가 참여한 2014년 1월 16일 기자회견으로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포데모스의 핵심 성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스스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최소한 5만 명의 지지를 받는다, 둘째 정당명부와 강령은 공개적 참여를 통해 정교화한다, 셋째 다른 좌파 정당과 운동과의 통일을 실현한다. 여기서 말한 다른 좌파에는 통일좌파(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연합), 인민통일후보(카탈로니아 급진좌파), X당, 안달루시아 노동자연합, 아노바(갈라시아 급진좌파)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24시간 내에 5만 명의 서명이 이뤄졌고, 포데모스의 웹사이트가 마비되었다.

<표 II -13> 스페인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득표율 증감(%)P | 의석수 | 의석수 증감 |
|--------------------|-----------|--------|------------|-----|--------|
| 인민당(PP)            | 4,098,330 | 26.09  | -16.03     | 16  | -8     |
|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PSOE)  | 3,614,232 | 23.01  | -15.77     | 14  | -9     |
| 다원적 좌파(IP)         | 1,575,308 | 10.03  | 6.32       | 6   | 4      |
| 포데모스(Podemos)      | 1,253,837 | 7.98   | 신당         | 5   | 5      |
| 연합, 진보, 민주주의(UPyD) | 1,022,232 | 6.51   | 3.66       | 4   | 3      |
| 유럽을 위한 동맹(CEU)     | 851,971   | 5.42   | 0.32       | 3   | ±0     |
| 결정권을 위한 좌파(EPDD)   | 630,072   | 4.01   | 1.52       | 2   | 1      |
| 시민들(C's)           | 497,146   | 3.16   | 3.02       | 2   | 2      |
| 인민의 결정(LPD)        | 326,464   | 2.08   | 0.96       | 1   | 1      |
| 유럽의 봄(PE)          | 302,266   | 1.92   | 신당         | 1   | 1      |

2014년 5월 25일 포데모스는 놀랍게도 7.98%를 득표하여 54석 중 5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선거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배했고, 인민당이 승리했다. 우리

는 그 결과에 행복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인민당과 PSOE를 권력에서 몰아낼 때까지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제부터 유럽 남부 정당과 협력할 것이며, 우리는 독일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네 번째 순위의 득표를 얻은 후, 포데모스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증가하여,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저명한 스페인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2014년 7월 말 포데모스는 개인의 가입을 받기 시작하여 처음 48시간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32,000명이 가입했고, 20일 동안 총 10만 명이 가입하여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2014년 10월 말에는 당원이 20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2014년 6월 5일 이글레시아스는 가을에 ‘시민총회’(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선거를 통해 25명의 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선거는 폐쇄명부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6월 12~13일 인터넷 투표가 실시되었고, 선거에는 이글레시아스가 주도한 명부와 간호사 서클이 주도한 명부가 제출되었다. (포데모스에는 2014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800개의 서클이 존재한다.) 하지만 선거방식에 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6월 8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모임에서 폐쇄식 명부 방식과 너무 짧은 명부마감기간으로 인해 선거에 제출된 명부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거에는 55,000명이 참가했고, 이글레시아스가 제출한 명부가 86.8%로 승리했다. 시민총회의 주요 목적은 당의 정치적, 조직적 원칙을 결정하는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포데모스의 모든 구성원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총회는 2014년 10월 18~19일 개최되었다. 총회는 정당 내부 서클이 제출한 결의안 중 가장 표를 많이 받은 5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모든 구성원은 결의안 중 5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었다. 승인된 결의안은 공공교육의 개선(45%), 반부패 조치(42%), 주택에 관한 권리(38%), 공공보건의 개선(31%), 부채의 감사와 재조정(23%)이었다. 한편 정당의 윤리, 정치, 조직적

원칙에 관해서는 이글레시아스를 포함한 씨클이 제출한 문서가 80.7%의 지지율로 승인되었다. 이글레시아스 씨클은 한 명의 사무총장과 직접 선출된 71명의 시민위원회로 이루어진 보다 중앙집중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사무총장은 시민위원 중 15명을 지도위원회 위원으로 선택하게 된다. 반면 유럽의회 의원인 파블로 에체니크 등이 주도한 서클에서는 세 명의 대변인과 99명의 시민위원회를 제안했다. 99명의 시민위원들 중 20명은 무작위로 추첨되고 지도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민위원회에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또한 당원소환제 발의와 특별시민총회 요구를 위한 더 낮은 요건을 요구했다. 한편 포데모스는 2015년 5월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기로 2014년 10월에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당원이 풀뿌리 지방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에서 주택퇴거 명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끈 아다 코라우가 주도하는 '바르셀로나를 되찾자'(Guanyem Barcelona)가 대표적 풀뿌리 운동 사례다. 포데모스는 2014년 12월 현재 당원이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스페인에서 당원 규모 2위의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2015년 5월 24일 치러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포데모스가 참여한 좌파연합 '아오라 마드리드'(Ahora Madrid, 지금 마드리드)는 수도 마드리드 시의회에서 집권 인민당(PP)보다 1석 적은 20석을 확보했다. 제2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도 포데모스를 포함한 좌파연합 '바르셀로나 엔 코무'(Barcelona En Comu)가 카탈루냐주 분리독립 정당을 1석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0일 스페인 총선에서는 포데모스는 2위 사회당의 지지에 거의 근접하는 제 3당이 됨으로써 스페인 정치의 유력한 변수가 되었다.

## 6. 경제위기에 대한 좌파 전략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제시되었던 범좌파의 전략을 케인즈주의 전략과 급진적 대안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자.<sup>7)</sup>

### 1) 케인즈주의

케인즈주의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직면해 더 심각한 경제적 카오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긴축에 대한 단기적 집착을 버리고 경제개입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전망은 새로 선출된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올랑드의 선거 캠페인은 유로존을 ‘성장주도’ 정책으로 재정향하는 반 긴축 강령을 채택했다. (물론 반신자유주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재정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을 유럽투자은행, 유럽 연합 프로젝트 채권, 유로본드 발행, 유럽 범위의 금융거래세를 통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마틴 울프, 볼프강 문차우는 더욱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 은행동맹과 재정동맹을 향한 조치,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부채의 공동분담, 채무국의 질서정연한 디폴트(유로존 탈퇴 허용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장협약’ 등. 그리고 그 협약 안에서 각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금잉여를 상쇄할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 대부를 지속해야 한다. 또한 유효수요의 결핍은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시장의 근본적인 재균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7) 이러한 구별과 분석에 대해서는 Greg Albo(2012), "The Crisis and economic alternatives", in Leo Panitch, Greg Albo, Vivek Chibber, eds., *Socialist Register 2013: The Question of Strategy*, The Merlin Press를 참조하라.

크루그먼에 따르면 재앙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문제이며, 조직과 조정의 문제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는 활력을 찾을 것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과잉저축을 흡수해서 그것을 지출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특히 이자율은 낮거나 음이어야 하며, 재정문제는 무시해도 좋다. 크루그먼은 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의 증가나 금융 탈규제를 강조했다. 재정지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2%에서 4%로 올리고,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 민간부채, 정부증권을 구매함으로써 수량완화 정책을 지속하며, 낮은 채권 이자율이라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며, 미국의 경우 통화를 평가절하하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강령 측면에서 긴축에 거의 반대하지 않았고, 정치적 동원 측면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온건한 금융거래과세에 대해 통일적 입장을 취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위기세’(crisis tax)에도 동의하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대안적 제안은 주로 노동조합 총연맹, 사회운동, 좌파 정책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자본주의와 단절하기 위한 사회민주주의 전략의 재창출을 모색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포스트케인지언 이론, 특히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테제에 의존하여, 금융시장의 내재적 논리를 강조한다. ATTAC 유럽 네트워크와 국제노총(ITUC)이 주도하여 사회운동의 요구에는 금융거래과세가 오랫동안 전면에서 있었는데, 위기의 맥락에서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연금기금을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에 활용하는 방안이 더 강조되었다. 다양한 진보적 싱크탱크의 금융 개혁 제안은 은행의 자본확충을 넘어서 분배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구제금융을 개혁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즉 공공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분적으로 지분을 획득하고, 악성자산을 배드뱅크에 떠넘기는 절차를 개혁하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며, 은행거래 위임을 제한하고 2차 시장(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을 재규제하며, (특히 유로존에서) 국가채무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새로운 초민족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다.

진보적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기본시민소득, 노동조합과 작업장의 강화,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반대, 금융과 시장을 통제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의 총괄은 ‘임금주도, 금융억압’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현존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의회의 사고방식 밖에 존재한다.

## 2) 급진적 제안

위에서 검토한 일련의 경제정책과 급진좌파의 제안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반긴축 투쟁과 금융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 운동의 상대적 취약성 때문에 급진적 개입의 옹호론은 분산되어 있고, 분명히 규명하기 어렵다. 핵심적 차이가 있다면, 불안정성과 위기는 재발하며, 나아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 발전의 특징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있다. 위기의 기원은 항상 과잉축적의 과정 속에 있다.

마르크스주의 위기 이론의 스펙트럼, 즉 정체론(stagnationism), 과잉투자, 자본스톡 생산성의 하락, 세계자본주의에서 금융의 중심성과 변동성 등 등에 따라 견해와 관점이 다양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강령적 의제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나아가 ‘노동자가 위기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은행을 점령하자’는 일반적 요구가 보편적으로 제기되었다.

반자본주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이행강령만큼 야심찬 것은 없다.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 4인터내셔널 제휴조직과 같은 (포스트) 트로츠키주의 조직과 유럽 수준의 우산조직인 유럽좌파당과 그와 병행하는 유로메모란둠(유럽의 대안경제정책을 위한 유럽 경제학자들)이 그에 해당한다.

독일 좌파당, 프랑스 좌파전선, 그리스 시리자와 같은 ‘브로드 레프트’(broad left) 급진 정당도 각각 강령을 제시한다. 독일 좌파당의 경우, 정당 건설 과정에서 광범위한 강령과 일련의 성명, 연구가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독일 금융의 사회화라는 수단과 목표도 포함되었다. 프랑스 좌파전선의 강령은 더욱 산만한데, 이는 아직까지 조직적, 전략적 깊이가 거의 없

는 선거연합이라는 상태를 반영한다. 시리자는 가장 포괄적인 강령을 지녔는데, 트로이카의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선거강령의 지침이 되었다.<sup>8)</sup>

북미와 일본의 경우는 대체로 황량한데, 사회주의적 정치세력의 주변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여러 개인의 입장 개진이 있었다. 뚜렷한 주제는 은행 국유화뿐만 아니라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레오 파니츠, 로빈 블랙번, 피터 고완 등.) 이와 유사하게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 학원의 화폐금융연구집단(RMG),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 정치경제학연구소(PERI)는 금융 사회화를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 중 어느 것도 모든 급진좌파가 지지하는 이행강령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 주장은 사회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재정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관련: 금융에 대한 ‘위기세’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자본 과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조직적 형태, 참여 절차, 공공부문 산출의 구성이야말로 반긴축투쟁에서 사회주의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 채무 감사와 채무불이행: 최소한 국가채무에 관해서 급진좌파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확대되고 있다. (1) 금융자본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채무자 주도의 채무불이행, 재정지출 삭감 중단. (2) 중앙은행에 의한 (부채의) 화폐화, 부채의 분담은 필요하며, 특정 종류의 부채에 대한 초기의 지불중단도 필요하다. (3) 독재정권 등 부정한 정권에 의한 부채(odious debt)와 불법적 부채, 부채와 무기 지출이나 기업보조금의 관계, 부채를 소유한 자, 부채 구제와 구조조정의 우선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채에 대한 체계적 감사가 필요하다. (4) 부채의 지불중단, 구제, 부채조정. (5) 중앙은행, 국가의 금융기관, 공공 금융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확대

- 은행국유화와 민주적 통제: 은행국유화는 거대한 단일은행으로 이해되

---

8) 주지하다시피 제 3차 구제금융 협상과정에서 시리자의 이런 강령은 견지되지 못했다.

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주택, ‘녹색이행’을 위한 프로젝트 기금, 공동체와 지역의 발전 등을 다루는 더욱 특수화된 기관들로 구성된 은행들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 노동자 계획과 녹색 이행: 공적 소유와 노동자 계획과 통제의 형성이 지난 수십 년간 사회주의적 경제개입에서 중심적이었다. 출구전략에서 사회주의자의 가장 특징적인 기여는 “녹색 뉴딜”을 제안함으로써 기후 정의와 반긴축 투쟁을 연결한 것이었다. 그것은 (1) 탄소배출권 거래보다는 오히려 기후 일자리와 산업전환, (2) 생태파괴적 산업의 ‘녹색’ 조정과 노동자를 위한 재훈련기금, (3) 공공수송의 대중적 확산과 그에 대한 무료접근의 확장 (4) 핵심적인 반탄소 전략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다.

- 세계시장과 맞서기: 무역 통제, 자본통제, 다수의 중심 통화들을 고려할 때 환율의 더 큰 자율성과 안전성, 발전경로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지역블록, 무역균형의 대칭적 조정.

## 7. 쟁점

### 1) 유럽통화동맹이라는 제약

위에서 언급한 케인즈주의적 대안이나 급진적 대안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유럽 전반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노동조합의 동맹 관계 약화로 인해 실제로 케인즈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정치적 흐름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또한 급진적 대안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했던 시리자는 정치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위에서 제시된 급진적 제안은 최소한 유럽 맥락에서는 화폐동맹이라는 제약 하에 있다. 이는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리스의 딜레마가 극적으로 보여주는 바다. 시리자의 테살로니키 강령은 위에서 언급한 급진적 제안을 모두 망라한 것도 아니었고, 부채축소 협상, 조세정의를 바탕으로 한 투자의 재개, 복지국가의 재건을 핵심적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국의 압력 속에서 사실상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에 빠졌다.

사실 그리스 위기는 유럽통화동맹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통화동맹은 단일환율이 적용되었다. 유럽 경제가 그럭저럭 잘 돌아갈 때는 환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자본이동도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확대되면서 유로화 도입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한 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유로화가 출범한 1999년 이후로 회원국별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 경계가 분명히 나타났고, 특히 적자국은 상품수지 적자액 중 역내 적자액이 90%에 육박했다. (예를 들어 한국

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해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는 한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시도할 수 없다.)

또한 유로존 국가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확장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확장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이 재정정책의 팽창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즉 유로존 국가는 독자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실행할 수단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지극히 제한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통화동맹에 속한 주변국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정부 재정적자의 팽창이라는 경향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요약하자면 유럽통화동맹의 공식적 교리는 통화안정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는 무역조건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국의 경제정책(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중심국, 특히 독일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력이 뒤쳐진 국가는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함으로써 확장정책이나 평가절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 등 ‘내부적 평가절하’를 강요하는 것만 남는다.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내부적 평가절하는 단기에 걸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장기에 걸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더디게 한다. 유럽통화동맹은 중심국 자본에게 항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유럽통화동맹은 그리스와 같은 국가에서 위기를 심화, 폭발시킨 원인이 되지만, 또한 유럽통화동맹으로부터 이탈 역시 즉각적으로 파괴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 2) 유럽 노동조합의 공동의 인식과 전략이 존재하는가

또한 최근 그리스와 유럽에서 사태의 전개는 노동조합이 과연 실질적 의미에서 유럽 차원의 공동의 인식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낳는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이 2014년 17차 전국대회에 제출한 문서, <일자리가 미래의 열쇠다>는 11개 행동 과제를 제시하는데 ‘유럽의 변화를 위한 행동’이 그 중 첫 번째다.<sup>9)</sup>

그 문서는 일자리 계획(Job Plan)을 실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 요소로 ① 부채분담(debt-sharing)을 위한 유럽의 정책, ② 유럽안정성협약의 재협상, ③ 직접적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개입, ④ 공공복지 정책의 채택(복지는 경제회복의 추동력이자 시민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다.) ⑤ 공공행정과 교육의 개혁, 청년고용을 위한 비상계획을 제시했다. 즉 유럽 차원의 정책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표Ⅱ-14> CGIL 17차 대회 유럽의 변화를 위한 행동

유럽의 가치는 평화, 연대, 보충성 원리(최소 단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상위 단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원리), 결속력(낙후 국가에 대한 지원), 사회적 안녕 등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적 사회모델이다. 이제 우리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유럽연합의 제도적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여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상당한 권력을 유럽의회로 이전해야 한다.

우리는 통화적 유럽(monetary Europe)에서 연방적 유럽(federal Europe)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① (유로플러스 협약, 식스팩 협약 등) 여러 조약을 완전히 재고해야 하며, ② 유럽중앙은행(ECB) 관련법을 개정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 모델처럼 고용보호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며, 최종보증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③ 재정정책의 조화

9) CGIL(2014), "Jobs are the key to the future", XVII National Congress CGIL를 참조하라. CGIL은 12개 산별노조와 지부/지구 등 8천 개의 기초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단위별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CGIL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대회를 앞두고 대략 총 4만 번의 회의를 거치고 180만 명 이상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

가 필요한데, 이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생산투자에 사용되지 않는 자본에 대한 과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유럽은 우선적으로 청년과 여성의 실업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는 오직 상당한 투자계획과 유럽의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프로젝트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구고령화는 미증유의 문제로, 사회정책과 보건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복지모델의 창출을 미래 유럽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

이민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유럽연합의 정책은 이민자의 권리를 환영하고, 통합하며, 인정해야 한다. 또한 지중해 국가 간 협력 영역을 창출해야 한다. 평화공존, 무역, 사회적 문화적 공유 등의 협력 주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유럽은 산업, 인프라에 관한 공동정책을 발전시켜서, 경쟁능력과 사회적 결속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성협약을 넘어서야 한다. 산업정책에 관한 공동전략,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효과적인 과세, 유럽에너지공동체에 관한 정의, 환경세의 도입, 조세도피처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

유럽은 더욱 강력한 유럽노동조합을 필요로 하며, 유럽노동조합에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쟁력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진정한 협상공간을 창출하는 데 달려있다. 이는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 사이의 필수불가결한 균형을 보장한다. 따라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이 의견 제출과 합의의 진정한 세력이 되어야 한다.

ETUC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① 권리의 방어와, 통합과정에 대한 대안적인 전략비전을 승인하기 위한 캠페인. 이러한 비전은 사회적 덤핑, 봉급 덤핑에 대항하여 협상을 증진하고 사회적 대화를 갱신해야 한다. ② 유럽대륙 차원에서 권리와 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조항을 정의하기 위한 캠페인. 이는 유럽위원회가 단체협상의 자율성에 간섭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ETUC에 속한 노동조합은 원래 속했던 각각의 국가로 퇴각할 수 없다. '2013 일자리 계획'을 제시한 이탈리아 CGIL, '유럽을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제시한 독일의 DGB, 스페인 노동조합 CC.OO(노동자 위원회노동조합총연맹)와 UGT(노동자총연합)와 여타 노동조합들의 압력 속에서 ETUC는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특별유럽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은 ETUC와 여러 국가 노동조합의 주도권과 동원을 위한 테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유럽이 나아갈 때만이, 외국인 혐오의 가속화, 민족주의/

파퐁리즘(인민주의)의 부활에 맞서서 유럽 프로젝트에 대한 인민의 신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원칙은 유럽 차원에서 위기가 전개될 때 시험무대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직전 유럽노총은 ‘국민투표 철회를 요구하는 그리스 노동조합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sup>10)</sup> 유럽노총은 2015년 7월 1일 그리스사회당과 친화적인, 그리스의 전통적인 민간부문 노동조합인 GSEE(Greek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의 성명을 직접 인용했다. GSEE는 ‘그리스의 유럽 지향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인민의 유럽과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공동 통화와 유럽 연방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유럽노총의 성명은 그리스 부채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유럽 노동조합의 국가 간, 지역별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재정동맹이 없는 통화동맹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채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 노동조합의 통일적 방안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트로이카가 주도하는 유럽을 극복하는 대안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10) ETUC(2015), "ETUC supports Greek trade union call to cancel referendum"(<https://www.etuc.org/press/etuc-supports-greek-trade-union-call-cancel-referendum#.VhLfoeztlBc>)를 참조하라.

## 참고문헌

Greg Albo(2012), "The Crisis and economic alternatives", in Leo Panitch, Greg Albo, Vivek Chibber, eds., *Socialist Register 2013: The Question of Strategy*, The Merlin Press

Rebecca Gumbrell-McCormick and Richard Hyman(2013), *Trade Unions in Western Europe: Hard Times, Hard Choi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uke March(2008), *Contemporary Far Left Parties in Europe: From Marxism to the Mainstream?*, Friedrich Ebert Stiftung

GUE/NGL, "Who We Are What We Work For", Retrieved from <http://www.guengl.eu/uploads/publications-documents/EN.pdf>

Michalis Spourdalakis(2012), "Left Strategy in the Greek cauldron: explaining Syriza's success", in Leo Panitch, Greg Albo, Vivek Chibber, eds., *Socialist Register 2013: The Question of Strategy*, The Merlin Press

Michalis Spourdalakis(2015), "To Fight Another Day", Jacobin. Retrieved from <https://www.jacobinmag.com/2015/09/syriza-election-greece-memorandum-austerity-popular-unity-tsipras/>

CGIL(2014), "Jobs are the key to the future", XVII National Congress CGIL.

ETUC(2015), "ETUC supports Greek trade union call to cancel referendum". Retrieved from <https://www.etuc.org/press/etuc-supports-greek-trade-union-call-cancel-referendum#.VhLfoeztlBc>